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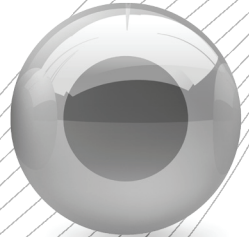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배정호 · 박영호 · 박재적 · 김동수 · 김장호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배정호 · 박영호 · 박재적 · 김동수 · 김장호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 S B N 978-89-8479-729-1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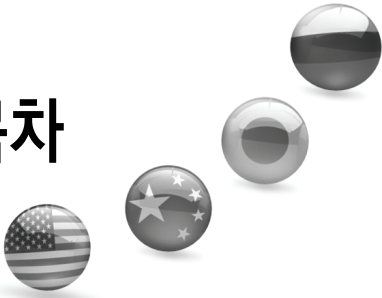
가 격 ₩16,50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 02-734-6818 · 사무실 : 02-394-0337

# 목차



■ 요약 ..... v

## 제1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역할

I. 서장: 글로벌 변혁기의 한반도와 통일외교의 중요성 ..... 3

- 1. 글로벌 변혁기의 한반도와 통일 ..... 3
- 2. 통일외교의 중요성과 방향 ..... 5
-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인식 ..... 6

II.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 ..... 17

- 1. 서론 ..... 17
- 2. 미국이 보는 한반도 분단·통일의 손익 ..... 19
-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협력 ..... 30
- 4. 미국이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상 ..... 34
- 5. 소결 ..... 36

III.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 39

- 1. 서론 ..... 39
- 2. 중국이 보는 한반도 분단·통일의 손익 ..... 41
-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 ..... 48
- 4. 중국이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상 ..... 53
- 5. 소결 ..... 55

IV.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	59
1. 서론 .....	59
2. 일본이 보는 한반도 분단·통일의 손익 .....	60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협력 .....	68
4. 일본이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상 .....	72
5. 소결 .....	73

V.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77
1. 서론 .....	77
2. 러시아가 보는 한반도 분단·통일의 손익 .....	78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협력 .....	85
4. 러시아가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상 .....	88
5. 소결 .....	91

## 제2부 전문가 설문조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인식

I. 미국 .....	95
II. 중국 .....	165
III. 일본 .....	229
IV. 러시아 .....	287
■ 참고문헌 .....	367

## Ⅱ 요약 Ⅱ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국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여 달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한요소가 있다. 따라서 남북 차원의 준비와 더불어, 한국은 국제공조 속에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의 순간 및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통일외교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통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주도 평화통일에 대한 미·중·일·러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한국이 미·중·일·러에 대한 통일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중·일·러의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미·중·일·러가 한반도 분단 및 통일과 자국의 국익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의 수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서는 한반도 분단 및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미·중·일·러의 인식을 분석하였다(제1부). 이를 위해 필진은 각국 한반도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국가의 한반도 전문가 5인(4개국, 총 20인)은 (1) 분단 및 통일의 손익, (2)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3) 통일한국의 가치 등과 관련된 8개의 문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견해를 제시하였다(제2부). 균형 잡힌 견해를 취합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설문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속기관, 연령, 정치적 성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였다.

본 연구서의 서장은 본 연구의 배경 및 의의를 기술하였다. 이어 미·

중·일·러의 한반도 분단 및 통일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4개의 개별 장은 각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군사·안보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해당국의 분단·통일 손익을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 (2) 한반도 통일이 초래할 긍정적 효과, (3) 한반도 통일이 초래할 부정적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이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법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각국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6자회담을 위시한 한반도 분단·통일 관련 동북아 지역협의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셋째, 각국이 자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와 통일과정에서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각국이 통일 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보고서는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3개년 사업 중 1년차 사업의 결과이다. 1차년도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2차년도에는 한반도 통일외교를 위한 실질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즉, 향후 미·중·일·러의 정·관·민 대상 맞춤형 통일외교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있어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통일외교, 통일한국, 주변 4국 분단비용, 통일편익, 통일비용

## Abstract

This book analyzes the perceptions of four powers (namely,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with regard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Part 1). The analysis is based primarily on an in-depth survey of 20 experts (5 for each country)(Part 2). This book is part of an ongoing effort by th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to strengthen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The introductory chapter of this book explains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is book project. The following four chapters deal with the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and Russia, respectively. These chapters discuss the division costs, the unification benefits and the unification costs from the security, economic and socio-cultural perspectives of the particular state as well as the measures each might take to minimize the costs Korean unification is likely to impose upon it. Further, each chapter assesses efforts made at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by the state in question with respect to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state's assessment of the Six Party Talks. In addition, each chapter explores how that particular state describes the unification process most desirable for its national interest, and what priorities the state takes into consideration in the unification process. Finally, each investigates how the state under consideration sets the value of a unified Korea and describes such a Korea's future direction in terms of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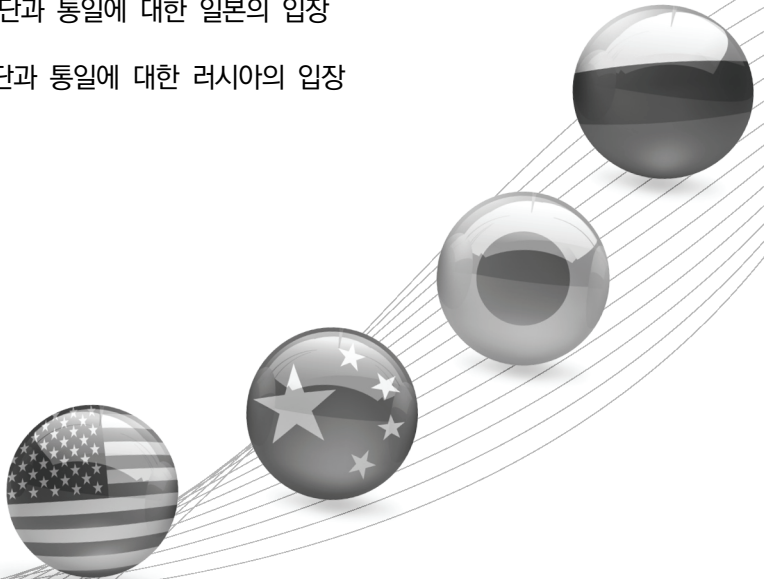
**Keywords:** South Korea's unification diplomacy, four neighboring states' division costs, unification benefits, unification costs, value of a unified Korea



# 제1부

##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역할

- I. 서장: 글로벌 변혁기의 한반도와 통일외교의 중요성
- II.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
- III.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 IV.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 V.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I. 서장: 글로벌 변혁기의 한반도와 통일외교의 중요성

## 1. 글로벌 변혁기의 한반도와 통일

최근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국제 전략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향후에도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전제 아래 미·중관계를 ‘신형대국관계(a new model of major country relation)’로 인식함과 더불어 글로벌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중국은 소위 글로벌 G2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의한 글로벌 G2시대가 도래할 경우, 중국은 미국에게 ‘전면적 우위’가 아닌 ‘선택적 우위’를 선택할 것을 요구할 것이고, 아울러 ‘독점적 우위’의 이념이 아닌 ‘우위 분배’ 이념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sup>1)</sup>

이와 같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더불어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대(對)중국 양면전략(hedging strategy)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전통적 동맹 체제의 강화를 추구하고면서, 인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아세안(ASEAN)과의 군사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

---

1) 스인홍, “미·중 신형 대국 관계와 중국의 대전략 구상 그리고 한·중 협력,” 한·중 국제세미나 『동북아의 평화변영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GK전략연구원 주최, 2013.9.4)에서 발표한 논문 참조.

중국의 G2 부상과 신형대국관계의 도래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형대국관계의 도래에 따라 미·중의 경쟁 또는 대립구도가 형성될 경우, 한반도는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가 언급했듯이 최악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대륙과 해양의 접점에 위치한 한반도에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구심력보다 미국과 중국의 원심력이 훨씬 크게 작용할 경우, 한반도는 정치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sup>2)</sup> 즉, 글로벌 변혁기에 한반도는 운명의 전환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민족과 한반도의 운명은 통일과 선진강대국을 지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준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이 그의 저서 『Next Decade』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향후 10년의 변혁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구심력이 원심력을 리드하며 선진강대국(GK)으로 도약·발전할 수도 있다.

글로벌 변혁기에 한국과 한민족이 선진강대국으로 도약·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선진강대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sup>3)</sup> 한국과 한민족이 분단상태에서 선진강대국의 건설을 추구하는 것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통하여 선진강대국의 건설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2) 배정호,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5.

3) 위의 책, p. 6.

## 2. 통일외교의 중요성과 방향

한국이 통일을 이룩하고 선진강대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작용하는 원심력을 극소화하면서 한민족의 구심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구심력의 증강은 자조 노력에 의해 전개되고, 원심력의 극소화는 구심력 증강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지향하며 전개된다. 한반도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한국의 구심력 증강에도 긍정적이다. 즉, 구심력의 증강과 원심력의 극소화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글로벌 및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전개되는 전략외교는 국제공조는 물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글로벌 변혁기의 전환기적 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경우 통일외교는 전략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중국의 ‘신형대국화전략’과 미국의 ‘아시아회귀전략’이 전개될 경우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한국의 구심력 증강 노력과 통일외교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요컨대, 글로벌 4강이 존재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중국의 G2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 환경의 변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적 갈등에 의한 패러독스(paradox)의 존재, 그에 따른 역내 국가들의 신뢰의 취약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슬기로운 통일외교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인식

한국이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국은 미·중·일·러 등 주요 국가들이 한반도 통일과 자국의 국익과의 이해관계,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인식과 역할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서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중·일·러의 인식을 (1) 분단과 통일의 손익, (2)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3) 통일한국의 가치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가. 미국

##### (1) 분단과 통일의 손익

미국이 한반도 분단으로 지불하는 유형비용은 주한미군 유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정기 및 수시의 연합군사훈련 등이다. 동시에 미국은 정치·외교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 유지와 한반도 분단으로부터 발생하는 동북아 지역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정치적 비용도 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한국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경제적 비용은 대부분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나, 분단으로 인한 기회비용도 있다. 분단 때문에 한국과의 더 많은 협력,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제약을 받는다. 사회·문화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활발한 상호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것이므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통일은 북한 문제의 해결로 막대한 군사·안보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해결을 통해 세계 안보 전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 맞도록 조정하고 지역적 차원을 넘어서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또, 한반도 통일은 중국과의 관계를 협력적이고 건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시장 확대와 투자 기회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경제·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의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통일 직후 북한 지역의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비용은 부정적인 차원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통일한국의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되고,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큰 관심이 있다. 통일과정에서 관련국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또한, 중국의 협력이 중요하며,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중국을 통일과정의 국제적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2)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미국은 한반도 주변 4국 중 정부 차원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력의 손을 내밀 것으로 기대되지만, 통일 이전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결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국이 미국과의 공고한 정책 공조를 유지함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현재 동북아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협의체가 없는데 6자회담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자회담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자회담은 각국에게 유인요인이 없을 경우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중·일 3자 전략대화의 추진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고 장차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외교가 필요함을 주문하고 있다.

## (3) 통일한국의 가치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한국의 등장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공을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의미하므로 미국에게 그 가치는 매우 높다. 미국은 통일한국이 비핵화된 한반도의 완성이어야 함을 특히 중요시 한다.

또한,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지역의 평화와 공동 번영은 물론 지역 범위를 넘어서 매우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평화 등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많은 기여를 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나. 중국

### (1) 분단과 통일의 손익

중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안보적 측면에서 지불하고 있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군사모험주의적 일탈행위가 미국, 한국, 일본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분단비용도 크데, 중국은 북한에 원유와 식량을 포함한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율을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에 근거한 북한 안전보장의 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게 된다. 군사·안보적 측면의 통일효과는 통일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 동맹을 유지하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에 미국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경감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은 동북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만약 통일한국이 비동맹 중립국이 되거나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된다면 중국의 안보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 동북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8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재탄생한 통일한국과 안보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통일로 인해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되고, 러시아와 몽골 등이 포함되는 거대한 '아시아 경제지대'도 탄생할 수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용인한다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buffer zone)를 손실한 채로 미군과 직접 국경 인접에서 대치하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에 최첨단 제어, 공격 및 방어 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중국의 국가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다면 중국은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일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통일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대규모 난민이 중국 동북지역에 유입될 수도 있고, 미국, 일본 등 외부세력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2)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6자회담을 중시한다. 중국도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완전한 다자협의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최선의 기제라고 주장한다. 6자회담의 성과는 6자회담에서 도출되는 성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즉, 중국은 6자회담이 없었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불가피했다고 강변한다. 미·중관계가 더욱 개선된다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과 미국이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본다.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책과 더불어 핵개발 포기 시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예를 들어, 위성 대리 발사와 같은 유인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3) 통일한국의 가치

중국은 통일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에 기반을 두고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통일한국이 인권, 민주, 자유 등 서구이념을 잣대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타국으로 전파하려는 시도를 경계할 것이다. 즉, 중국은 한국이 자주, 개방, 민주주의와 같은 이념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

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은 통일한국이 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한다. 이는 동북아에서 신형대국관계가 중국의 의도대로 형성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의 국민이 국수주의적인 성향에 물들게 되면 반중감정이 격화될 수 있다. 중국과 역사인식, 영토와 해양경계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이 이데올로기적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일본

### (1) 분단과 통일의 손익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일본이 경제적으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본사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일본의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대국으로서 경쟁하게 되는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배타적인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핵 보유에 대한 통일한국의 입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노선 온건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군사·안보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모두 일본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했다.

## (2)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을 일차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하다.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들도 함께 지적한다. 관계국과의 역할 분담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이해를 가장 잘 공유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을 재인식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역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개혁하고 그러한 틀 안에서 한·일 간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역사 문제로 인해 협력의 논리를 부정하는 나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이 ‘미들파워외교(middle power diplomacy)’의 관점에서 협력구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발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 (3) 통일한국의 가치

일본이 그리는 통일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국가'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일본은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적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은 통일한국이 일본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전환되는 모델이 되어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중심 국가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연도 새겨볼 만하다.

## 라. 러시아

### (1) 분단과 통일의 손익

1945년 한반도의 분단으로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정할 수 있다. 구소련은 한국전쟁과 북한 재건에 유형의 비용을 지불했고, 1991년 이후 러시아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지연과 같은 무형의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로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남북한 대결구도의 종식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으로 인한 러시아의 아태지역 진출 가시화와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의 확

대를 꼽을 수 있다. 반면, 부정적 통일효과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부상으로 인한 동북아 세력균형 변화와 국경관리비용의 증가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와 대규모 북한난민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에 반드시 북한을 참여시켜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통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 (2)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국제사회에서의 노력

러시아는 ‘외교정책개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UNSC) 결의를 준수하며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단계적 대화 진행을 지지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여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책임자이다.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구축을 주도한 바 있으며, 지역의 경제·안보 행위자를 중재하여 공동의 접근을 제안할 수 있는, 이른바 ‘5자회담’의 중추적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아울러, 그 동안의 6자회담을 교훈으로 삼아 관련 의제들이 미제로 남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6개국 실무회의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동북아 다자간 협력을 주도하는데 관심이 크며 남·북·러 가스관, TSR-TKR 철도망 연결 사업,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 (3) 통일한국의 가치

통일한국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민족노선의 확립을 통해 두 개의 한국을 자연스럽게 통합함은 물론, 세계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공동 번영과 정치적 자유를 수호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체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함으로써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고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동북아 경제통합의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한국은 중립세력으로서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거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가 간 상호이익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한편, 아태지역의 개발 협력 패러다임(paradigm)을 지지하면서 이른바 '윈윈(win-win)'개념에 기초한 경제협력 증대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II.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미국의 입장

### 1. 서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분단구조 하에서 한국은 북한과는 달리 세계의 중견국가로 성장했다. 오랜 우여곡절 끝에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켰으며, 경제발전 측면에서 선진국 클럽으로 간주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이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의 길을 선택한 북한은 여전히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빈곤국가로 남아 있다.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모두 원한다. 그러나 각각이 지향하는 통일국가가는 다른 모습이다. 남북의 체제 경쟁이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된다면, 통일국가의 모습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남북관계 현실을 보면 통일은 아직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600회 이상의 남북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이 있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든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 회담과 두 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근 20회에 이르는 남북 장관급 회담도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제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약속한 상호 체제 인정·존중, 비방·중상 금지, 내정불간섭 등은 아직도 구호로만 남아 있으며, 군사적 대립과 갈등 또한 여전하다. 1970년대 박정희정부가 제시한 평



화통일 기반 조성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에서도 여전히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제시된 상태이다. 공통의 언어·역사·문화를 공유하는 남북한에게 분단의 장기화는 서로 다른 세계관, 가치관, 생활양식을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이질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통일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독일, 예멘, 베트남을 보면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서 인적·물적 교류의 양적·질적 측면을 보면서,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과 남북관계의 개선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남북관계 정상화는 통일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한반도 통일에 참여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국의 지지와 협력, 또는 적어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반대입장표명 내지 방해행위는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맹국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는 것은 필수적이다.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년 동안의 독일 통일과정에서 미국은 영국, 프랑스, 소련의 반대입장을 설득하고 서독의 적극적인 통일 추진을 지원하는 맹방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기반에는 서독 출범 이후 장기간에 걸친 유럽 중심, 나토(NATO) 중심의 서독 외교가 있었다. 한국의 입장에서 주변 4국 모두의 지지와 협력을 받는 외교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맹 60주년을 넘어 전략 동맹,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미국으로부터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동맹국가 미국의 지지와 협력이 무조건적이며 당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대한 냉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평화와 번영의 동반 추진자인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강건하게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미국이 보는 한반도 분단·통일의 손익

### 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미국의 유·무형 분단비용

#### (1) 군사·안보적 측면

6.25전쟁 이후 한국과 동맹을 맺은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믿음직한 우방이다. 이후 미국은 상당수의 군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있다. 2013년, 한국과 미국은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며 전략 동맹을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첫째, 한반도 분단으로 미국이 지불하는 유형의 비용은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두 2천 8백여 명의 주한미군 유지에 드는 비용을 첫 번째로 지적하였다. 2012년 기준으로 한 해에 약 27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북한의 군사

적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물질적 비용, 즉 유형의 비용으로는 분단구조 하에서 지출하는 현재의 비용과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의 비용 등이 있다. 주한미군 유지비용이 현재의 비용이라면 한반도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거나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미래의 비용이다. 미래의 비용은 분단의 지속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잠재적 분단비용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이외에도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의 개발·배치·유지에 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용도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비용으로 간주된다. 또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관련비용, 한국 유사시 지원을 위한 병력과 장비에 대한 투자비용, 한반도 안보와 관련하여 아태 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군사비용 등도 언급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강화된 공세를 저지하기 위하여 2013년 3월에 실시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미국은 B2, B52 등 전략 폭격기와 스텔스기, 핵 잠수함 등을 동원하였다. 이는 연례군사훈련에 참가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민은 물론, 미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인적 희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적 비용도 지불된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에게 특별한 부담과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4) 참고로 “2011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8,125억 원일 것이며, 이는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의 약 42%이다.” Mark E. Manyin, Emma Chanlett-Avery and Mary Beth Nikitin, “U.S.-South Korea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to Congress* (May 15, 2012), p. 22.

한반도 분단의 물질적 비용을 분단 자체의 비용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세계 안보 차원에서 불량국가들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과 마찬가지로 불량국가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부담하는 군사·안보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화폐 위조와 불법 마약의 제조·유통·판매 등 불량국가 북한의 국제범죄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비용도 지적되었다.

셋째, 분단구조 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로 인해 상당한 정치·외교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한국 방위 약속을 이행하고, 동북아 지역 질서유지를 위한 국제정치적 비용을 지불한다. 미국이 중국과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 요소를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억지를 위해 유엔(UN) 등 국제사회에 지불하는 외교적 비용도 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확보를 위해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아들, 딸을 위협한 지역으로 간주되는 한국에 보내야 하는 미국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아야 한다.

## (2)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미국이 지불하는 경제적 비용의 대부분은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밖의 경제적 비용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드는 비용이나 투자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드는 비용은 직접적인 비용이라기보다 간접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이념적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대립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지나친 지출을 초래함은 물론, 이에 따르는 기회비용과 도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또, 인권 상황이 열악한 북한에서 인권 개선을 위해 지불하는 유형적 비용과 외교적 비용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의 측면이 강하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통해 한층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분단으로 인해 한·미 양국의 경제관계, 미국의 대(對)한국 투자, 한국의 대외경제가 때때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한국의 안보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 때문에 한·미 FTA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양국 경제관계의 발전, 한국의 경제력과 안정성 등에 따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양국의 경제적 비용이 막대한 수준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불되는 비용 등 경제적 비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사회·문화적인 비용 또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과 북한 체제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 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한국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재고하는 경우 사회·문화적 비용이 지불된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분단과 북한 체제의 본성으로 재미(在

美)한국인들과 그들과 연관된 미국인, 그리고 북한에 관심을 갖는 미국인들이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쓰는 시간과 비용, 다양한 감정적 경험도 사회적 비용에 포함된다. 2백만 명이 넘는 재미한국인 사회에는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이산가족들도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는 미국 시민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할 분담비용이다.

## 나.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로 미국이 획득할 수 있는 긍정적 통일효과

### (1) 군사·안보적 측면

첫째, 한반도 통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익은 주한 미군 유지의 일차적 목적인 북한 문제의 해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즉, 한반도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군사력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등 군사·안보적 측면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점진적 발전에 기반을 둔 통일이 아닌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지혜롭게 관리·극복하여 한반도 상황이 안정되면 동북아에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새 질서가 구축되어 미국의 지역 안보 공약에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셋째, 북한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미국은 동북아 지역 및 아태지역 전략을 신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또, 통일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아태지역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협력적인 미·중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걸림돌이었던 북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건전한 미·중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국가임을 상정할 때, 한·미동맹의 기본 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므로 미·중관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섯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었던 북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다자안보협의체를 현실화하고, 유럽과 같이 안정된 다자안보협의체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 (2)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첫째,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보 위협과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동안 국방·안보를 위해 투자되었던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 투자에 전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둘째, 한국 주도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재건과정에 미국이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통일한국이 경제부국이 된다면 한·미 FTA를 북한지역에 확대하는 것으로써 미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미국 제품의 수출시장 확대, 새로운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의 기회도 될 것이다.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해소되고 한국에 대

한 안보비용이 축소됨으로써 더 많은 교역과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통일한국의 등장은 북한지역, 중국의 동북3성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연계하는 3각 개발을 본격화하는 기회가 되며, 미국은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상품 시장과 투자처를 획득할 수 있다.

넷째,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됨으로써 북한 지역과 문화적·사회적 교류가 확대되는 기회가 된다. 또,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체제 국가에 인권, 법의 지배 등 민주주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확산하는 사회·문화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한국의 등장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을 축소 조정하는 기회가 된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문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반미운동, 주한미군 관련 범죄 등으로 한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주한미군 축소 조정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다.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로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통일효과

### (1) 군사·안보적 측면

한국 주도의 통일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할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건설해나갈 것인가, 즉 통일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변화로부터 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우려한다. 물론, 통일한



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만약 통일한국이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지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재조정 요구가 예상된다. 통일 이후 한국이 동맹관계의 재정립과 주한미군 규모 축소를 요구하게 될 가능성은 물론, 국제 안보 상황에 의해 미국의 통일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의 축소 조정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동맹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결국,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동맹관계의 재정립과 주한미군 규모의 조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한국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히,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 미·중관계가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이며 미국과 중국은 향후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경쟁자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한국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킨다면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중·일관계 또한 한·미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미국은 일본과 더 가까운 안보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2)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미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지적하지 않았다. 다만, 통일은 한국에 상당한 비용의 부담을 가져오겠지만, 이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언급한 전문가는 있었다. 또, 통일한국의 경제가 폐쇄적으로 바뀌거나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독점적이고 특별한 경제적 권리를 확보할 경우 미국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성 있는 부정적 효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한국의 개방적 경제 체제와 경제정책 등을 두고 볼 때 통일한국의 등장은, 미국은 물론 주변국들에게 공동으로 경제 번영을 추진하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통일한국의 등장은 미국에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북한지역의 주민들과 새롭게 교류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부여한다.

### 라. 한반도 통일로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통일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선결조건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미국은 한국에게 전략 동맹이며 통일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통일 이후 동북아에 형성될 새로운 질서를 고려해서라도 양자 간 동반자적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모두 미국이 한국과 밀접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의 부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과 미국 간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통일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통일 이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서의 과제인 인도적 구호, 공공 안전 및 통제,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경제재건 등 통일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한·미가 사전에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위협요인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통일 이후의 상황에 맞도록 주한미군을 조정할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국은 또한 통일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및 중국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한·미 협력관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 형성될 새로운 동북아 질서가 미국의 이익과 지역의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한 주장이지만 이를 위해서 역시 한·미가 사전에 공동 연구하고 계획을 세움으로써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향후 국제질서가 더욱 G2 주도의 질서로 고착화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의 대(對)중국 전략이 미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적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일 3국의 학계 및 연구원에 종사하는 전략가가 참여하는 ‘트랙Ⅱ(two track)’ 외교를 제안하였다.

### 마. 미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통일과정과 미국의 주요 고려 사항

미국은 공식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도 담겨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공식선언이나 입장표명이 없더라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한국은 미국과 공유하는 가치와 체제의 원리에 입각하며, 특히 북핵 문제가 해결된 비핵화된 한반도가 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 따라서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북한의 변화에 따른 점진적, 평화적 통일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통일방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통일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포용과 헤징(engagement and hedging)’의 복합적 전략을 사용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국의 대중(對中) 편향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협조 역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에서 중국을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제로 점진적, 평화적 통일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일이 급격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원활하게 대처하고 한반도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이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통일 이후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미국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셋째, 통일이 급진적 또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확보와 처리 문제이다. 또, 북한의 무기 개발 기술이 불량국가나 비국가단체의 수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경합하는 상황에서 통일 한국이 비핵노선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협력

#### 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조언

북한은 핵 개발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압살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 등장 이후 북한의 협상 대상은 미국이었으며, 미국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최대의 현안으로 보고 있다. 1990년대는 북·미 양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창구였으며, 2000년대에는 6자회담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북·미 양자 간의 협상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북핵 문제 등장 이후 지난 20여 년의 미국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전문가들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미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핵 문제

는 핵 확산 금지 및 지역 안보를 위한 글로벌 과제이며, 둘째, 미국만이 한국, 북한, 통일한국의 핵 능력 보유 추구 가능성을 억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통일한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 보유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나머지 지역에 대한 항시적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 둘째, 통일 이전 상황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행동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단호함을 유지할 것, 셋째, 핵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외교적 통로를 열어 둘 것, 넷째,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것, 다섯째, 미국과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미국의 역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억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안한 전문가도 있다. 그는 첫째, 미사일 방어 체제를 포함하여 미 국방성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제의 수단인 지상발사요격미사일(Ground Based Interceptor: GBI), SBX 레이더, F-22 전투기 등에 대한 예산 삭감을 비판하였다. 둘째,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므로 이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명백하고도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이 군사적 시위 등의 행동을 취할 때에는 미국이 나서서 북한에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중국이 평양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섯째,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봉쇄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억지하는 방위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해 조건적 포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제의는 비핵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룰 때까지 보류하고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이 필요조건임을 강조한다. 넷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되 긴급식량원조의 수준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유엔(UN) 결의 위반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

#### **나. 한반도 분단·통일 관련 동북아 지역협의체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한반도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동북아 지역협의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하기 위한 6자 회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6자 회담도 2008년 12월 수석대표 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6자 회담 재개 자체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핵 보유를 선언한 이후로는 6자 회담을 노골적으로 핵 군축 회담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 6자 회담의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에는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조항이 실현되려면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도 이러한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동북아에서 다자 안보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련한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6자회담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비롯하여 여타 주제를 논의하는 구조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협의체가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효하겠지만, 6자회담이 상시적인 정체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가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전문가도 있었다. 그러나 일본 아베 정권 등장 이후 과거사 문제 및 영토 문제로 인한 한·일, 중·일 간 갈등 고조로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협의체의 형성 제안은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사·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남북한 및 미국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박근혜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미·중 3자 전략회의 구상에 대한 견해는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생산적 협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을 위해서는 신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기능적 협력을 통해 안보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결국 결실을 맺기 위한 선결조건은 비핵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중 3자 전략회의 구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반응과 중국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과거의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의 현실을 두고 볼



때,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다자협의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오바마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6자회담이 장기 정체되고 있는 것처럼 다자회담(3자, 4자, 5자, 6자 회담)은 새로운 유인 요인이 없는 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이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주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나 지역의 평화안보 메커니즘, 또는 한반도 평화 조약 체결에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특히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 4. 미국이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상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룰 경우, 미국이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는 통일 이후 한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6월 16일 '한·미동맹 공동비전 선언문'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치로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3대 원칙이 제시되었다. 또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도 이러한 가치는 재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 또한 한국과 미국의 공통된 목표이다. 즉 비핵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일치된 입장이며, 통일한국은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히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 자유무역에 공헌하고, 미국의 안보 핵심 우려사안인 핵 문제와 관련하여 비핵화

된 한반도가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역 안정과 개방경제의 공약도 통일한국이 그대로 승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등장은 동북아 차원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동북아 지역은 세계경제의 허브이다. 특히,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 있으며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에도 주변국은 모두 세계의 강대국들이다. 결국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의 등장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새로운 질서의 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국제질서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더 이상 ‘고래 무리 안에 있는 새우’가 아니라는 한 전문가의 표현은 통일한국이 국제질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측 가운데 역시 한·미동맹의 유지가 미국에게는 물론 한국에게도 이익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가치로 개방성, 유연성, 우정, 나눔, 통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개방성은 통일한국이 경제·정치 체제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성은 한국의 발전과정에서 보여준 특성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말한다. 우정은 낮은 사람에 대한 수용을 말하며, 나눔은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합은 한국의 역사에서 부족하였던 내적인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평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와 같은 가치와 상통하는 것이다.

## 5. 소결

한반도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분단을 일상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정서적 인식은 여전히 존재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때때로 느끼기는 하지만 통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차로 냉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분단구조 아래에서도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는 나라로 성장했고, 민주주의의 발전도 이룩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최빈국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핵무기 개발 등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항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의 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국간의 역학관계도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국력 신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통일의 길은 우리에게서 더욱 멀어질 수 있다. 특히, 통일은 남북한이 주 당사자이지만, 주변 4국의 협력과 지지,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없다면 지난(至難)한 과정이 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남북관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외교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

우리의 통일외교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자 동맹국이다.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상치(相馳)현상이 발생할 때 협력을 얻어야 할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일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담론과 컨텐츠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미국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명백하게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이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부담하는 손익과 관련해서는 안보 공약에 따른 비용 지출이 가장 중요한 부담으로 지적되었고, 동시에 정치적·외교적 부담도 지적되었다. 경제적 부담은 안보 공약 이행에 따른 부담이며,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한국 주도의 통일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효과 또한 안보 공약에 따른 부담의 축소라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비핵화된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 새롭게 편성될 동북아 질서가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의 질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통일 이후 중국과의 관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였다.

셋째,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주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한·미동맹의 재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있었다.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는 없겠지만 통일과정에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넷째, 미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유일한 주변국이다. 한국과 미국의 통일 추진 방식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변화에 따른 점진적, 평화적 통일이 현실화될 가능성보다는 급격한 통일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점진적 통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진행과정에서의

혼란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에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다자협의체는 없으며, 그러한 다자협의체가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북한의 참여가 없는 논의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의 미래상은 역시 한국과 미국이 바라는 통일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협력 체제 속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둔 한반도 통일을 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력의 손을 내밀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의 정치·경제적 가치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

### 1. 서론

KBS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2년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21.6%의 응답자가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였다. 이는 미국을 지목한 응답자 19.5%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의 21.6%는 2005년 중국을 지목한 응답자 39.1%보다는 낮은 수치이다.<sup>5)</sup> 2005년보다 현저히 낮아진 이유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중국이 보여주었던 북한 편향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2년 조사에서 통일에 도움을 주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자도 51.7%에 달했다. 즉,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 국가라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국민들 사이에서 상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의 한반도 분단 및 통일에 관한 입장을 고찰한다. 중국은 건국 1년만인 1951년 약 115만 명의 병력을 한국전쟁에 파병하여 북한을 지원하였고, 이 중 약 35만 명이 전사하였다. 중국은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며, 1961년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한 북한의 군사동맹국이다. 중국의

5) "2012 국민 통일의식 조사," 『KBS 남북 협력 기획단』, 2012년 10월, pp. 100-102.

공식·비공식 경제원조 및 원유 등 자원 제공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지탱되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광산 개발 등 경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나진·선봉, 황금평, 위화도 등에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에서 북한이 중국의 ‘자산(asset)’인지 ‘책무(liability)’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중국은 한국과 1992년 수교한 이래 경제교류를 급속히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한국의 제1무역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제4무역국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경제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지정학적 대립관계의 맥락에서 한국을 일본과 함께 중국을 봉쇄(containment)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서 북한과 한국은 중국에게 특정한 이익과 손실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국익에 현재와는 다른 손익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은 자명하다. 아래에서는 중국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이 인식하는 한반도 분단비용, 통일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살펴본다. 아울러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노력과 중국이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가치상을 분석한다.

## 2. 중국이 보는 한반도 분단·통일의 손익

### 가. 분단비용

중국은 북한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약 35만 명의 중국군 사상자를 감수해야만 했다.<sup>6)</sup> 중국은 북한과 1961년 조·중우호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반도에서 남북 간, 북·미 간 군사 긴장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안보적 피로감을 누적시켜왔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남북 군사 대치와 이로 인한 미군의 남한 주둔으로 중국의 동북지역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에는 약 15만 명 규모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중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 및 강력한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북한의 보호국으로 인식되곤 한다. 또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외교 자원을 투입하여 6자 회담을 추동시켜왔으나,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실패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적 위신이 손상되었다.

중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분단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중국에 대한 소규모 나토(NATO)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주기적으로 역내에서 안보적 긴

6)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대만을 점령하여 통일중국을 달성할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장을 조성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서해에서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훈련을 수행했다.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출은 북경과 청진 등 중국 내륙의 심장부가 미국의 즉각적 군사행동 반경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가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부추겨지고 중국의 핵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 아울러, 남북 분단으로 인한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인 다자 안보 협력 체제가 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막대한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원유와 양식을 포함한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경제원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대략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90%, 식량의 45%, 일용품의 90% 정도로 추정된다.<sup>7)</sup>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70%에 달한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는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중국 내 일부에서도 중국의 대북원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비판은 중국의 베트남 경제원조가 양국 간 영토분쟁을 잠재우지 못하였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보에 유용하게 작용하지 못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다.

7) “中國不要再援助北朝鮮了,” 『鐵血網』, 2010.1.10, <[http://bbs.tiexue.net/post2\\_4036380\\_1.html](http://bbs.tiexue.net/post2_4036380_1.html)>.

중국으로 유입되는 탈북자 문제도 중국이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이다.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가 되었고, 탈북자 처우 및 북송 문제로 중국은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고 있다. 만약 북한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해 대량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된다면 중국 동북 지역의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 큰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중국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발전이 지연되는 것도 중국이 한반도 분단으로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이다.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오래된 중공업 기지인데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어 있다. 그 배경에 한반도 발 안보 불안이 있다. 동북3성지역은 한반도 위기로 인해 중국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 투자도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북한의 거부로 무역, 에너지 자원, 건설 등의 거대한 지역경제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중·러 철도 및 송유관 건설이 북한의 비협조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나. 긍정적 통일효과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은 조·중우호조약에 근거한 북한 안전보장의 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중국은 더 이상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안보적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의 후원자라는 부정적 국제 이미지를 탈피하게 된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통일이 중국에 가져올 긍정적 통일효과는 통일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가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경감될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은 동북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통일이념이 비동맹 중립국이 되거나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된다면 중국의 안보 부담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이 좀 더 독자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하게 되고, 나아가 미·중 간 실질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통일편익은 무엇보다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한반도 통일로 한반도에 인구 8천만의 거대한 단일 시장이 형성되고,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한층 증대된다. 한·중과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되고, 나아가 한·중·러, 한·중·일·러·몽골 등 거대한 지역경제지대가 형성될 것이다. 단일 거대 경제권 형성은 동 지역에서 해륙 교통과 자원 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은 안보 논리가 아닌 위와 같은 경제적 고려에 의해 전개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편익은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과 통일한국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가 안보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넘어설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은 건설적 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중국 국민 사이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차로 인해 정서적 대립이 발생해 왔으며, 양측의 역사, 문화적 논쟁도 가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로 단일화를 이룬 한국 문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화문명 및 기타 동아시아 문명과 함께 공존하며 공동 번영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일례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한자 문화권의 교류와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다. 부정적 통일효과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초래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에서의 통일비용은 통일 후 한·미동맹의 전개 방향에 의해 경중이 가려질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용인한다면, 중국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buffer zone)를 손실하고 미군과 직접 국경 인접에서 대치하게 된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최첨단 제어, 공격 및 방어 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중국의 국가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즉, 중국에게 최악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는 통일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를 강화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북한이라는 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통일한국 정부에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을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지역 외부로의 활동반경 확대는 중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영토분쟁 등 동아시아 안보 현안이 미·중 대립으로 악화될 경우, 주한미군이 선발 타격대나 후방 지원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통일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계한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안보는 더욱 불안해진다. 반화(反華)적이거나 중국에 비우호적인 정부가 집권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베트남 통일 후 등장한 국수주의적 성향의 베트남 정부가 양국관계

를 악화시킨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중국의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한국과 중국은 에너지, 원자재 등 다수의 산업 분야에서 '동질적인 경쟁(homogeneous competition)'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통일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반도국가인 한국은 운송과 물류에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다. 즉, '동질적인 경쟁'에서 한국의 산업이 중국의 그것을 잠식해 나갈 수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의 안보관계가 악화된다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쳐 동북아 지역 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이 저하될 것이다. 신(新)냉전의 도래로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경쟁이 격해진다면, 통일한국과 중국의 국민정서가 대립하게 되고 중국과 타 국가 간의 사회·문화 교류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통일 후 한국 국민의 민족 자존감이 고양된다면 양국 간 역사인식, 해양경계선 설정 등에서 이견이 격해질 수 있다.

#### 라.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결조건

중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유·무형의 막대한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로 중국은 분단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우려한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 후 한반도 정세가 중국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지(You Ji) 교수에 의하면 중국은 “불확실한 경로를 돕기보다 차라리 그 과정의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다.<sup>8)</sup>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이후 더 많은 중국인들이 북한을 완충장치로 바라보는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을 책무로 바라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스스로의 필수적 이익을 지킬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기 전에는 중국은 통일과정을 장기화시키고 싶어 할 것”이라는 유(You) 교수의 주장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sup>9)</sup> 그렇다면 중국이 예측하는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은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간 내부 충돌이나 전쟁 없이 통일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미국 등 외부세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정권이 일순간에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북지역의 안보 불안은 중국 동북3성 개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김정은과 그의 가족이 중국에 망명을 신청한다면 이들의 처리 문제로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이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하는 통일과정은 남북이 정치·경제협력을 통해 점증적이고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즉,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한반도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유엔(UN) 등의 제어를 받아야 한다. 북한 핵 시설물이 잘못 관리된다면, 인접한 중국의 피해

8) You Ji,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향한 경로 관리: 중국적 방법,”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87-88.

9) 위의 책, pp. 87-88.

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넷째,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투자했던 경제적 이익이 국가승계의 관점에서 통일한국에 계승되어야 한다.

다섯째,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종식시켜야 한다. 물론 중국은 미·중 대립이 지속되는 한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으로서 차선의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철수이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관철되지 못한다면 중국은 최소한 한반도 근해에서의 통일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면 반대급부로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증진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여섯째, 통일한국과 중국이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산업경제협력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서 획득하던 경제적 이익은 국가승계의 원칙에 따라 통일한국이 계승하여야 하며, 통일한국은 중국인에게 노동과 자본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종합하자면, 중국의 통일 선결조건은 통일한국이 중국에 우호적인 비핵, 비동맹 국가가 된다는 확신이다. 중국은 이와 같은 통일한국의 정체가 미·중·일·러 등 관련국과 남북이 함께 구축한 지역적 다자 안보 체제의 틀 속에서 보장받기를 희망한다.

###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

한반도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안보적 압박에서 기인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 즉, 남북 간, 북·미 간 평화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자위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일각에서는 케네스 왈츠(Kenneth N. Waltz)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즈(Foreign Affairs)’에 게재한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이 오히려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소수의견이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웃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에 대한 안보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핵 무장을 촉발시킬 수 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원전시설 안전사고는 인접한 중국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북한의 핵 관리 경험이 일천하고, 북한지역이 협소함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의 원전 사고는 중국 동북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부에서는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양자, 3자 등 다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국의 뚜렷한 정책 기조는 북한 비핵화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UNSC) 상임이사국 지위와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10) Kenneth N. Waltz,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2 참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실험 시까지 중국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미온적이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만류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3차 핵실험 후 미국은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중국이 자산이 아닌 책무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또한 한·중관계의 정상화는 전략적 완충지로서 북한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북한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전략적 완충지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UNSC) 상임이사국이며 책임 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이 선호하는 수순은 남북이 화해를 통해 대화를 진전시키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과 대화하고, 더 나아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을 설득하여 북·미관계가 개선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희망일 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중국도 자각하고 있다. 중국은 다자적 접근을 대안으로 제안한다. 한반도 분단 및 통일과 관련된 동북아 다자협의체 중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6자회담이다.

또 다른 다자 체제로 정전협정 체제가 있으나 중국은 이를 활용하려

는 북한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는다. 정전협정 체제는 남북 간 군사 마찰과 소규모 충돌을 억지하지는 못했으나, 대규모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북·미 대화 및 미국의 북한 승인을 요구해오고 있다. 중국은 북·미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지지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전 단계로 평화협정 체결을 획책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미국과 한국이 평화 체제 전환과 북한의 비핵화를 구분하여 접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다자협력체인 6자회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6자회담이 결성된 2003년부터 6자회담의 의장국이었다. 중국은 6자회담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6자회담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 보유 만류’가 아닌 ‘핵 포기’를 위한 회담으로 변질됐고, 북한은 3차 핵실험 후 6자회담을 ‘핵 군축’ 회담으로 활용하려고 있다.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이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6자회담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외교적 손실이다. 중국은 실패 이유로 무엇보다 핵개발이 북한의 내정 및 외교적 필요에 기반을 둔 것이기에 외교적 타협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6자회담 참여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핵 확산 금지, 일본은 납치 피해자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등 참여국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점도 중국이

파악하고 있는 실패 이유다.

중국은 6자회담이 무엇을 도출했는지가 아니라 6자회담이 없었을 경우 발생했을 상황과 비교하여 6자회담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중국은 6자회담이 없었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6자회담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자위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역내 다수의 국가가 공동으로 노력해야하며, 이들 간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는데 다자메커니즘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양자보다 다자협상을 선호한다. 또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양자의 틀에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보다는 다자의 틀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더욱 용이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다.

중국은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정상회담 당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중시하지만, 경직된 자세를 고쳐 6자회담의 틀에서 미·중 양자 또는 한·미·중 3자회담을 준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일본, 한국이 6자회담의 틀에서 협의를 정례화 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즉, 과거 '대북 정책 조정자 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과 같은 형식의 3자 안보 협의체의 부활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6자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참여국들의 목표가 뚜렷하고 접근방식이 수렴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 회담의 목표는 비핵화로 명확해졌다. 그러나 접근방식에서는 각국이 아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중국의 제일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은 핵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책과 더불어 핵개발 포기 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불할 수 있는 이익, 예를 들어, 위성 대리 발사와 같은 유인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4. 중국이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상

세계는 빈곤국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내고 강대국의 틈새에서 통일을 달성한 한국을 높이 평가할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한 통일한국의 비핵화 정책은 인류가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데 있어 모범적인 선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화해·포용·관용을 베푼다면 인권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며 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신형대국관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에만 편중되지 않고, 중국과도 안보적 관계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한다. 역내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펼치고,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은 민주주의를 고수하며 미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적·안보적 연대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원리를 고수하고 동아시아 무역과 금융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자주, 개방, 민주주의 이념을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일한국은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던 북한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바, 중국 공산당 개혁·개방정책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한 이념적 동지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에 흡수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에서 민주화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중국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국에 전파하려 한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통일한국과 긴장관계에 접어들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 있다. 또한, 중국과 파키스탄과의 우호적 관계 때문에 인도와 중국과의 관계는 소원하여 양국 국민 간 접촉은 미미하다. 이에 반해 통일한국과 중국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교류한다. 중국으로서는 서구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전략의 전초기지로 통일한국을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한국이 통일 후에도 미국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면 중국의 위기감은 배가될 것이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역사·문화 의식에 바탕을 두고 동아시아에 상존(常存)하는 역사적 갈등을 종결시키는데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일례로 통일한국이 일본의 자국 중심적 국수주의 역사관을 교정시키는데 중국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동아시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는 전통적 동

아시아 문화에 기반을 둔 평화와 포용이지, 주변국을 억압하는 서양식 민주주의나 인권은 아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가 융합되지 못하고 이질감을 노정해 간다면, 3국의 문화는 차별화를 명목으로 문화적 충돌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역내 문화적 충돌을 완화시키고, 동아시아 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재발현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즉, 바람직한 통일 한국의 가치와 미래는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 그 외 동아시아 문화가 공동 번영하고 조화를 이루는 동아시아 문화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국이 개방적인 대외정책, 높은 수준의 문화, 양질의 교육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교육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5. 소결

중국이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안보적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 동맹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군사모험주의적 일탈행위가 미국, 한국, 일본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일례로,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후, 미국과 한국은 미군 항공모함이 참여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였다. 미국이 북경과 천진 등 중국 내륙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데 있어 서해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동 군사훈련을 중국 봉쇄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의 분단비용도 막대하다. 중국은 특히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국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은 중국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통일이 달성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비정상적인 국가, 즉 북한의 일탈행위에 대해 편향적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쌓아 가는데 유리할 것이다. 또한, 통일 후 전개될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동맹 강화 및 연계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동북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 8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재탄생하는 통일한국과 안보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바탕을 두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통일로 인해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지대가 확대되고, 러시아·몽골 등이 포함되는 거대한 ‘아시아 경제지대’도 탄생할 수 있다.

분단비용과 통일편익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또는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통일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대량 난민이 중국 동북지역에 유입될 수 있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미국, 일본 등 외부세력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개연성도 있다. 통일 후에는 북한이라는 ‘안보적 완충지(security buffer)’가 소멸되고,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게 되어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중국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통일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

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이 천명해주기를 희망한다. 또한, 중국은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중국에 우호적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 중국에게 있어 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은 중국이 북한에서 획득하였던 경제적 이익이 침식당하는 것이며, 통일한국과 중국이 제반 산업에서 경쟁관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통일과정에서 한국이 국가승계의 관점에서 중국의 기존 경제 이익을 보장해주고, 통일 후에도 중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6자회담을 중시한다. 중국도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완전한 다자협의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최선의 기제라고 주장한다. 6자회담의 성과는 6자회담이 도출해내는 성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즉, 중국은 6자회담이 없었더라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불가피했다고 강변한다. 미·중관계가 개선된다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한과 미국이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고 기대한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동아시아 문화에 기반을 두고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이면에는 통일한국이 서양식 인권, 민주주의, 자유 등의 잣대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이를 타국으로 전파하려는 시도를 경계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통일한국이 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신형대국관계가 중국의 의도대로 형성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의 국민이 국수주의적인 성향에 경도되면 반중감정이 격화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중국과 역사인식, 영토와 해양경계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난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한국이 이데올로기적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비핵화를 표방하고, 인류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데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인접 국가가 핵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략적 이익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통일한국이 평화적, 개방적, 포용적인 대외정책으로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핵국가로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IV.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주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 첫 번째 작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다섯 명으로부터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일본의 입장과 전략적 이해관계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다섯 명의 한반도 전문가는 학계, 언론계, 그리고 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정부, 학계, 그리고 언론계의 일반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내부의 주류 의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파트는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한 일본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한반도 분단에 따른 군사·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일본의 비용을 분석하고, 이어서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가져올 편익에 관한 주류 의견을 들여다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관한 일본의 우려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파트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한 한국정부의 현실적인 노력에 대한 일본의 객관

적인 평가를 분석하고,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본의 생각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일본의 역할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일본의 생각을 알아보고, 6자회담 등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협의체에 대한 일본의 평가를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일본 내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덧붙이고자 한다.

일본은 한반도에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역사적인 특수성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특별한 관계로 얽여 있는 국가이다. 한반도 정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의 통일에 부정적일 가능성도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주류 사회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우리의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우리가 대일(對日) 통일외교의 전략을 수립하고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일본이 보는 한반도 분단·통일의 손익

### 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일본의 비용

먼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대다수의 일본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을 한반도 분단이 일본에 가져오는 가장 큰 비용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sup>11)</s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핵이 일본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는 가운데,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이 개발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백기의 장거리 미사일 또한 일본에 군사·안보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비롯하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취급하게 되면서 일본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비록 북한이 일본에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계를 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던 것이다.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하여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당시, 북한과는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없었다. 일본 외교는 ‘전후시대’에서 ‘탈(脫)전후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전후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일본이 치르고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일미군과 미군기지 문제를 불안한 한반도 정세와 연계시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미군의 일본 주둔 목적이 반드시 일본 방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의 안보와 더 나아가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면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일본의 방위에

11) 이런 입장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저작을 참조할 것. Tomohiko Satake,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Security Perspective of Japan," Kyuroon Kim and Jae-Jeok Park (eds.),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 pp. 121~137.

더욱 집중하게 하는 등 주일미군의 역할이나 규모를 적절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일본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납북된 일본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냉전시기에 일본이 북한의 대남 공작의 거점으로 이용당했으며 그 중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일본인 납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직접 인정한 것은 17명에 불과하지만, 수백명의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가 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비용을 보면 일본은 분단이 가져오는 경제적 비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째, 통일된 한반도라는 큰 규모의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 분단에 따른 가장 큰 경제적 비용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에서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나 개발이 원천봉쇄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광물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인 일본 경제에 큰 비용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경제적인 비용은 한반도의 분단이 중국과의 교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대륙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 유사 이래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과 중국을 잇는 루트가 존재해 왔는데 일본에 적대적인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일본과 중국대륙을 중개하는 한반도의 역할이 크게

12) 이 주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Sachio Nakato,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for Japan: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Kyuroon Kim and Jae-Jeok Park (eds.),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 pp. 141~159.

퇴색되고, 그로 인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하여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항공기가 북한 상공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이와 연관된 또 하나의 경제적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본사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비용으로 보고 있다. 특히, 60만 재일(在日)교포 사회가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과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본사회의 활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위협이 일본사회 내부의 규제 강화로 이어져 자유를 위협 받는 경향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모두 일본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분단으로 인해 한반도의 지리, 문화, 언어에 관한 용어를 사용할 때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반도’와 ‘한반도’, ‘북조선’과 ‘북한’ 등이 그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한반도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마다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NHK가 한글 강좌를 개설할 때, ‘한국어 강좌’라 할 수도, ‘조선어 강좌’라고 할 수도 없어 남북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안녕하십니까, 한글 강좌’로 표현한 것은 유명한 일화라고 한다.

#### 나.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따른 일본의 긍정적 통일효과

기본적으로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것은 앞서 기술한 한반도 분단비용의 소멸을 의미한다. 통일이 되면 동북아 정세가 안정화

되면서 군사·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모두 일본에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가 제거됨을 의미하며, 예측 불가능성과 핵의 현실적 위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그와 함께 중·일관계 안정화와 함께 한국의 안보에 투입되는 미군의 군사력이 축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일미군이 기능적 측면에서 일본의 군사·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며 현재의 자위대 배치와 방위예산도 일본의 안보 요구에 맞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일의 긍정적 효과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통일한국의 비핵화 천명이다. 또 한 가지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이다. 일본은 통일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미국과는 멀어지는 상황을 경계한다. 일부 전문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역시 통일한국이 일본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에서 기초 인프라 정비와 지역 개발 등 다양한 투자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통일한국의 구매력이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시각을 더 넓혀 통일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함께 묶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이 현실화 되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

건설적 협력관계를 통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은 물론 역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일본과 통일한국 간 문화교류와 학술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사회 내에서 재일교포들의 자유로운 사회·문화 활동이 보장되면서 일본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 다. 한반도 통일의 부정적 효과

설문에 응한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일본에 부정적 효과 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공통적인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통일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sup>13)</sup> 그들은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백지화하고 중국에 접근한다면 일본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커지게 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공조 하에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펼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미·중 균형외교를 추구하면서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관계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군사·안보정책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13) 비슷한 이유로 일본은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Hong N. Kim, "Japan's Policy toward the Two Koreas and Korea Unification," Young Hoon Kang and Yong Soon Yim (eds.), *Politics of Korean Reunifica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8).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듯하다. 두 번째 우려는 통일한국이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본은 현재 한국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핵 보유 논의를 주목하고 있으며 통일한국의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한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일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되었을 경우 일본의 안전보장 상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은 인구 8천만 가량으로,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대국으로서 일본과 경쟁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한·일이 배타적인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 또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통일한국이 극단적 민족주의에 의해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면 사회·문화적으로 일본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통일한국이 중국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여 역사인식 등으로 일본을 공격한다면 일본으로서도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일본사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열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라.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조건과 방안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대국화가 필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미·중 간 세력 대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중관계 안정화와 공존의 미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이러한 동북아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협력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반도 통일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통일한국이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정권을 수립하고 일본과 대치할 경우에는 일본에 군사·안보·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중립적인 국가의 위상을 조속히 표명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경계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관계국들과 불가침조약이나 평화조약과 같은 법적인 정비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도 통일의 방법을 놓고 주변국들과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미국에 맞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찾아가면서 주변국들의 이해도 함께 도모해가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마. 한반도 통일과정에 관한 일본의 고려사항

일본은 한반도 통일이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전쟁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된다면 일본에게는 재앙에 가까운 사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이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

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역사 문제로 걸끄러운 양국 간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고 대립이 아닌 선의의 경쟁관계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통일과정에서도 역시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상당히 크다. 일본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와 핵시설,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를 하루 빨리 국제기구의 관리 하에 두고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군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군대 배치로 주변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에 크게 위협을 느끼는 일본에게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노선의 온건화가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협력

#### 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협력

앞서 여러 번 언급된 바와 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선결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관계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그래야만 상호 체제에 대한 위협이 감소되고 도발행동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전제 하에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우세하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찾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북·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안정화되고 북핵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보다는 경제협력을 통해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의약품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법도 있다. 나아가, 나선시의 항만 건설이나 북한의 고등교육에 일본이 출자해서 북한과 협력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미 일본은 2002년에 북한과 ‘북·일 평양선언’에 합의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공식입장으로 현재까지도 유효한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남북관계가 안정화되고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일 평양선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점들을 함께 지적한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의견은 한국이 관계국과 함께 역할을 분담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교류 활성화는 오롯이 한국의 몫이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경제지원 문제는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한 가지 한국정부에 주문하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에 관하여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본의 역할을 재인식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다시 말하면, '일본을 제외한 미국, 중국, 한국의 동북아 대화 프로세스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엔(UN)이나 핵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등 북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에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일이 공동 보조를 맞출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보고 있다.

#### 나. 동북아 협의체에 대한 일본의 평가와 효율성 제고 방안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운영되는 지역협의체는 6자회담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6자회담이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2008년 이후로는 회담 자체가 장기간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동북아 안보를 위한 다자간 협의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6자회담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역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6자회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복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일 간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

금까지 6자회담은 지나치게 미국과 중국 위주로 운영되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나 북핵 문제의 진정한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므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이 미·중·러 세 강대국과 같은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미들파워외교(middle power diplomacy)’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구도를 구축하고, ‘한·일 비핵화 선언’과 같은 방식으로 독자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6자회담 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거론하면서 의제와 참가국 확대 등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개혁한다면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의 참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북·미 평화협정과 같은 법적인 조치를 6자회담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구도에서는 중국의 지도력이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보다 공정한 형태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6개국이 순서대로 6자회담을 주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일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간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역사와 영토 문제 등에서 양국 간에는 감정적인 응어리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일 협력의 논리에 반하는 역사 문제를 끄집어내서 협력의 논리를 부정하는 나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한국에 주문하고 있다. 즉, 역사 문제로 동북아 미래의 발목을 잡는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 4. 일본이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상

일본이 그리는 통일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국가’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첫째, 일본은 통일한국이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경제제도에 있어서 일본은 통일한국이 자유무역에 입각한 개방경제 체제를 채택하는 자본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셋째, 남북 대립이 소멸되고 군사적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군비 축소가 현실화되어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요소가 제거되기를 바란다. 넷째, 일본은 통일한국이 이념적으로 민족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고 이상주의와 실리주의가 잘 맞물린 균형 잡힌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요약하면, 일본은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적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은 통일한국이 일본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인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통일한국이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전환되는 모델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통일한국이 체제 경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발전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국가의 미래상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다른 전문가는 통일한국이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통일한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다. 즉, 남북, 한·미, 한·중, 한·미·일 관계 등에서 한국은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으므로 동북아에서 모종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의

이면에는 통일한국이 중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일본의 속내가 숨겨져 있지만 통일한국 외교의 지향점으로써 생각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통일한국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하여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중심 국가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연도 새겨볼 만하다. 통일한국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서울은 동북아의 항공 수송로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과 시베리아는 철도로 연결될 것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이 모두 참여하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면 그보다 훌륭한 동북아의 미래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 적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의 특수한 역사를 고려한 제안도 빠지지 않았다. 한 전문가는 “과거 역사를 현재의 가치관으로 검토하여 서로 동일한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미래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역설하였다. 다시 말하면, 통일한국은 과거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말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통일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모든 나라들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 5. 소결

본 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본의 전문가 다섯 명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 각계의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 내부의 의견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먼저, 일본은 북핵 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본 사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될 수 있다는 점을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일본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규모의 경제대국으로서 경쟁하게 되는 상황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배타적인 경쟁 관계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통일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핵 보유에 대한 통일한국의 입장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노선 온건화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정세를 안정화시키고, 군사·안보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모두 일본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안정을 일차적인 과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의견이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우세하다.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들도 함께 지적한다. 관계국과 함께 역할을 분담함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일본의 역할을 재인식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6자회담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역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6자회담의 틀 자체를 개혁하고 그 틀 안에서 한·일 간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은 한국이 한·일 협력의 논리에 반하는 역사 문제로 인해 협력의 논리를 부정하는 나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양국이 ‘미들파워외교(middle power diplomacy)’의 관점에서 협력구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일본이 그리는 통일한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국가’라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일본은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호적인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은 통일한국이 일본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로 전환되는 모델로서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통일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중심국가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새겨볼 만하다.

물론, 설문에 응한 일본의 전문가들이 일본사회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사회가 인식하는 한반도 분단과 통일의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일본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확

연하게 드러나 일본의 제안이나 충고를 그대로 우리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다만, 철저히 일본의 국익을 바탕으로 기술한 의견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은 한반도 통일외교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 V.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1. 서론

1945년 한반도의 분단으로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비용은 한국 광복 이후 현재까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러시아가 지불하고 있는 군사·안보적 측면, 그리고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구소련은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의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전쟁을 승인함으로써 막대한 전쟁 비용과 북한 재건 비용, 그리고 엄청난 인명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한편, 1991년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군비 경쟁,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지연으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 역시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통일효과 중 가장 핵심은 남북 간 대립의 종식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소이다.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통일한국의 부상과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국경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통일효과는 한반도 정세 안정으로 인한 러시아의 아태 지역 진출 가시화, 그리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 TSR-TKR 철도망 연결 사업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러시아 외교

정책의 핵심 목표 실현 가능성 제고이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통일한국의 대미(對美) 경제협력 확대, 한국 투자의 북한 집중 등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 대규모 북한 난민 발생, 불법 이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통일과정에 북한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협력의 극대화 차원에서 ‘두만강 프로젝트’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 4강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와 부합하고 통일한국이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틀을 마련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 러시아가 보는 한반도 분단·통일의 손익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지불하고 있는 가장 큰 비용은 남북 간 대립으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에 기인한다. 실제로 남북 분단으로 인해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는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sup>14)</sup> 만약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외부세력이 정권을 잡게

14) Victor Mizin, “Russia’s Core Issues,” *New Approach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Breaking the Gridlock Workshop* (Washington D.C., October 2012), (<http://nautilus.wpengine.netdna-cdn.com/wp-content/uploads/2012/10/Mizin2.pdf>).

되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은 국지적·지역적 차원의 군사적 충돌이나 정치적 갈등을 동반한다. 따라서 남북의 지속적인 대립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남북이 공식적인 휴전상태이고, 서로에 대한 방어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의 불안정과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 또한 러시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북한에 대한 국부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에서 러시아 역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한·미·일이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맹을 결속시키는 명분이 되고 있다는 점 또한 러시아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러시아가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 역시 상당하다. 구소련은 북한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에 드는 비용을 감당해 바 있으며, 1986년 말까지 약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고, 석유와 기계설비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구소련 체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러시아가 부담하고 있는 분단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반복적인 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적 불안정은 역내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래 국가 근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견지에서

주로 경제적 국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러시아의 전략 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러시아는 ‘외교정책개념’을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적 부흥을 견인하고, 아태지역에서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경제통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상징적 사업인 남·북·러 가스관 사업, TSR-TKR 철도망 연결 사업 등은 북한 리스크로 인해 그 추진 가능성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밖에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기침체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다자간 경제협력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부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통일효과는 첫 번째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꼽을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이 진행되면 한반도에서의 대치 국면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은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남북한과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약화도 일정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 통일효과로는 우선 통일한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자국의 국경과 인접한 지역에 새로운 강대국이 출현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칫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일한국이 중립성을 망각한 채 미국 등 특정 세력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한다면, 동북아에서 각국

의 국경 강화와 군비 경쟁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러시아가 한국의 통합으로 북한이라는 중요한 방산시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통일의 부정적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통일효과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러시아 근대화의 최우선 순위인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가능성 제고와 이 지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수출시장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로 한반도의 정치·안보 상황이 안정된다면, 러시아는 무역·투자 프로젝트에서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한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며, 아태지역 국가들과 대외경제 관계로 확대·다양화 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핵 위협이 사라지게 된다면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광·문화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고, 북한 리스크로 중단되었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북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서 한·러 간 추가적 협력 역시 기대된다. 통일한국에서 막대한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새로운 에너지 시장 개척의 효과가 있으며, 원유 수출과 PNG(Pipe Natural Gas), LNG(Liquefied Natural Gas) 사업에서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통일이 경제적 측면에서 부문에서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많지 않으나,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한국의 투자가 집중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를 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북한과 석유화학, 원자력 분야 등



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집중할 경우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수출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한·러 간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체제 이행기에 북한 주민들의 국정 불만과 사회적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량 실업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불법 이민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해 러시아 등 이웃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한·중·러 사이의 역사적 감정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강하게 표출되어 역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경우, 사회·문화 부문에서 동북아와 공조를 모색하는 러시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동북아 4강 가운데 누군가가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깨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동북아 다자간 협력과 지역 평화에 실질적 도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그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동북아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즉, 다자간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적응 역시 통일한국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민족 공동체 형성만으로 남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적 안정과 상호이해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국가 공동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이 앞에서 언급한 부정적 통일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4강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통일과정에 수반되는 정치·경제·사회적 부담을 모두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다자간 협의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엔(UN)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은 ‘두만강 프로젝트’와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미국과 일본을 참여시켜 동북아 개발협력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비핵화와 군축과정에서는 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외교정책개념’이 남북 간의 대화와 공동의 번영을 지지하고 있음을 볼 때, 러시아의 입장에서 최선의 통일 방안은 북한이 경제 개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점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남북이 상호 간 정치·경제·문화적 유대관계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하여 한반도 통일 당사자인 5개국 사이의 이른바 ‘5자회담’을 통해 각국의 이해를 조화롭게 수용하는 한편, 북한을 동북아 협력의 과정에 참여시켜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면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이한국은 ‘이념적 낙인’에 구애받지 않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표현은 상황의 악화를 부를 뿐 통합을 위한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쉬우면서도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적 측면에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체제가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안고 있고 경제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경제 부문에서의 통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원했던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특구를 통한 협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상당하고 다수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북한에 새로운 기업과 공장을 설립하는 등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러 가스관 사업, TSR-TKR 등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 사업, 나진·하산 물류망 건설, 항만 네트워크 구축과 전력망 사업 등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sup>15)</sup> 현재 한국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경협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으나 러시아가 위협을 일정부분 감수한다면 '전략적 선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은 많은 재원이 소모되는 계획이므로 한국은 국제적 차원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두만강 프로젝트'와 같은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킨다면, 한국은 단일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고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일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을 '완충국가(buffer state)'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이 한반도에서의 대치 상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sup>16)</sup> 러시아는 또한 아태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부흥을 견인하고, 다자간 협력에 기

15) Leonid Petrov, "Russia's 'Power Politics' and North Korea," *International Issues & Slovak Foreign Policy Affairs*, Vol. 27, No. 2 (2008), pp. 27-43.

16) Alexander Vorontsov, "Current Russia-North Korea Relation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Working Papers by CEAP visiting Fellows* (The Brookings Institution, February 2007), (<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2007/02/northkorea-vorontsov>).

초한 동북아의 공정하고 분명한 안보구도를 창출하며, 나아가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역내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높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은 러시아를 한반도에 참여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비교적 중립적인 경제 파트너로 이해해도 무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외세의 개입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며 남북한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합이라면 그 어떤 시나리오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의 통합은 국가연합 모델(confederative model)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가연합은 입법,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정책에서 각각 최고 권위를 가지는 2개의 체제, 2개의 정부가 결합된 형태의 통합 방식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통합과정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동시에 장기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밀하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은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 3. 한반도 통일을 위한 러시아의 협력

북핵 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은 물론 통일을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통해 동북아 지역 안보 체제의 통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외교정책개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유엔 안보리(UNSC) 결의를 준수하며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대화의 단계적 진행

을 지지하고 있다.<sup>17)</sup>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촉구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는 책임자임에 틀림없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핵 포기를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동북아 관련 당사국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북한의 단계적 핵 군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완전한 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 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일정수준에서 북한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인식하고 협상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러시아와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하여 북한에 정치·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북한 고위층과 두터운 친분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 군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주변 국가들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북한이 다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에 가입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위한 토대에 적극 참여

17) Alexander Zhebin, "Russia's Efforts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in Korea," *2nd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Pyongyang, August 2004), <[http://www1.korea-np.co.jp/pk/208th\\_issue/2004081407.html](http://www1.korea-np.co.jp/pk/208th_issue/2004081407.html)>.

하였다. 이는 지역의 경제·안보 행위자를 포괄하고 공동의 접근을 제안할 수 있는 다자회담의 출범을 러시아가 주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에서의 외교적 실패를 거울로 삼아 북한을 제외한 이른바 '5자회담'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북한의 체제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납득시키는 외교적 노력 또한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채찍'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찍' 보다는 '당근'을 이용하는 정책적 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6자회담이 북핵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방식에 대한 참가국들의 이견으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책략이 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등 한계를 노출하였다. 이는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전략적으로 이해관계를 좇는 입장과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입장의 대립에 기인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6자회담이 동북아 평화 논의의 항구적 틀로 기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포괄적 힘을 바탕으로 동북아 각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기구 설립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동북아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진행이 더디지만 관련 의제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지 않도록 추가적인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러시아는 동북아 안보 메커니즘 구축에 관심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무그룹(working groups)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모든 참가국들에게 적절한 외교·안보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조건 없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화가 재개되기를 원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핵 실험 금지와 같은 현안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6개국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 정세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양자회담이다. 각국은 이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해법을 모색해나갈 수 있다. 또한, 6자회담 실패 경험은 '5자회담' 통해 재해석되어 합의 도출에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회담을 통해 강대국 사이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간다면 북핵을 비롯해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 참여한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동북아 다자간 협력을 가속화하는데는 러시아가 책임자임에 틀림없다.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이나 TSR-TKR 철도망 연결 사업,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자 하며, 이러한 경제협력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관련 당사국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 4. 러시아가 보는 통일한국의 가치와 바람직한 미래상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상호존중과 협력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한국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

을 지우고 상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하여 한민족의 열망이 함께 형성·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또한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안정, 공영과 사회발전, 그리고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며 수호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인간의 도덕적·정신적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서양의 모더니즘(modernism)과 한국의 전통 사이의 조화가 필요한 과업으로, 이러한 과업을 달성한다면 현대사회에 만연한 사회악을 없애고 남과 북이 통일한국의 기치 아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추구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북한으로 부터의 위협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경제원조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 등 비핵화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한반도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건전한 민족노선을 확립한다면 국내적 모순과 공포를 극복하고 분단된 두 한국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이웃국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북한이 실질적인 체제 이행 단계에 돌입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 강국들과 협력을 통해 북한에 제도적 체제 확립을 신속히 지원하여 북한사회 정상화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 이행기 동안 한국과 동북아 강국들은 시



장경제 확립, 무역·투자 교류 확대, 지역 안보 대화, 인도주의적 교류 등 방법을 강구하여 북한을 ‘정상국가화’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남북의 경제 통합이 동북아 경제 공동체 확립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비전 확립을 위해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정치·경제적으로 선진화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변 강국들에게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통일한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상호이익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는 일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win-win)’개념에 기초한 경제협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아태지역 개발협력 패러다임(paradigm)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거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지 않는 중립세력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군사적 기구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주권 수호를 위한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를 천명하는 과감한 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한국은 통일 이후의 무수히 많은 과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책임감과 관용의 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하며,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에 관해서는 주변 4국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

## 5. 소결

역사적인 관점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의 주요 행위자로서 한반도와 그 이웃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왔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분단비용은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은 분석함으로써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구소련과 1991년 체제 붕괴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 추산할 수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구소련이 감당했던 가장 큰 비용은 북한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에 투입된 비용이었으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전후 북한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경제지원 비용을 지불했다. 한편, 체제 전환 이후 러시아가 감당하고 있는 비용은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군비 경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지연을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통일비용으로 꼽을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통일효과 역시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남북 간 갈등과 대결구도의 소멸로 동북아 정세가 안정되고 북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협력을 실현하고 동북아의 경제협력과 통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통일로 인한 한국의 부상과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러시아 국경지역의 관리비용 증가, 경제·사회·문화 부문에서는 한국의 대미(對美) 경제협력 확대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감소와 대규모 북한 난민 발생 가능성은 부정적 통일효과로 분석할 수 있다.

한국이 통일을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하는 다자 간 대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것 또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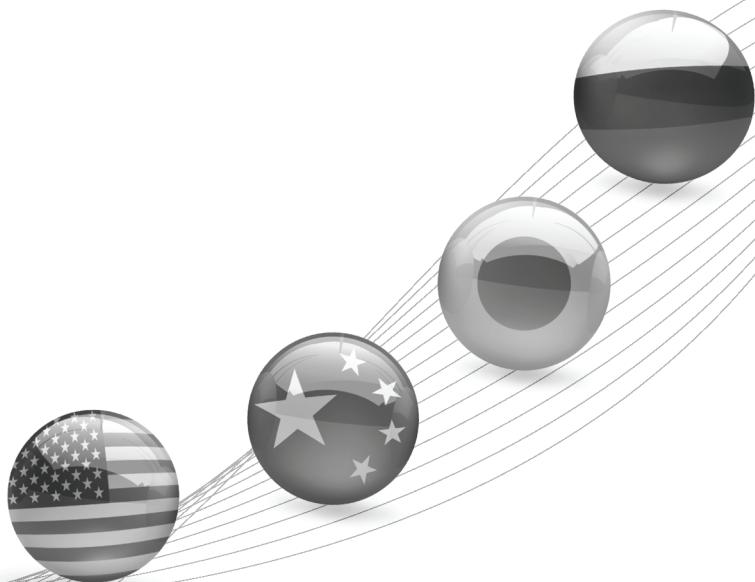
통일한국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공동 번영과 발전을 지지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패러다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며 특정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독립적 행위자로서 동북아 정세 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제2부

---

# 전문가 설문조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인식

- I. 미국
- II. 중국
- III. 일본
- IV. 러시아



# I. 미국

## I. 미국-1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분단에 따라 미국이 지불해야 할 가장 명백한 비용은 군사적·전략적 비용이다.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여 명의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 병력과 그 가족을 주둔시키고 있다. 2012년, 이러한 방위 공약에 미국이 지불한 비용은 대략 미화 27억 달러로 추정된다. 남한의 상당한 재정적 협조 때문에 낮아진 금액이 이 정도이다.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방어하고 있다. (판문점에는 "우리 모두 그들에 맞서서"라는 표현이 있다.) 북한의 공격에 맞서 이들 남녀 군인들은 남한 국민의 자유와 그들의 삶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적지 않은 미국 군인들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거나 포로로 잡히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은 남한 방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막대한 정치적 비용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다. 왔다. 미국이 중국과 보다 강력한 협조관계를 맺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하는 과정에서 분단한국에 대한 정책이 논의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지난 6월, 중국 주석 시진핑(習近平)과의 정상회담에서 여러 중요한 쟁점 중에서 한국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놓았을 정도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 국민들이 기꺼이 이러한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여론조사는 물론 한국에 대한 수십 년 간의 초당적 지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수반된다.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미국은 이러한 비용의 대가로 북半球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세계경제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채로 머물러 있다. 반면, 매년 수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으로 오고 있다. 중국과 인도 유학생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지만 북한의 2천 5백만 주민 대부분은 세계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이러한 폐쇄성은 북한 주민의 재능을 세계에서 펼쳐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남한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통해 선박, 스마트폰, 대중음악, 영화 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자가 되었다. 인구수만으로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앞서게 될 통일한국은 지구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자원의 활용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자원을 경제나 문화 발전에 투자하기 보다는 전쟁 억지와 방위에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분단의 결과 미국과 남북한이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그릇된 경제정책과 사상주입의 결과로 궁핍을 겪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면은 한반도 분단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이 좀 더 깊고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연계가 이제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전략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혜택을 가져다주는 완전한 동반관계로 확대·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넓고 강력한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은 남한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 질 경우 미국에는 매우 다양하고 긍정적인 군사적·전략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가장 크고 즉각적인 혜택은 북한정권의 제거이다. 그들은 핵무기를 실험하고 이를 이용하여 미국과 남한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며 군사적 테러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자국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억압하며 대규모 마약 밀매에도 관여하고 미국 화폐를 위조하는가 하면, 미국 국민에게 전략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해왔다. 북한은 미·중관계에도 지속적인 긴장국면을 조성해왔다. 건전한 미·중관계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물론 북한정권의 붕괴는 새로운 불확실성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미군은 한반도에서 북한 잔존 세력이 일으킬지 모르는 폭동에 맞서고, 인도적 지원과 재난 상황 대처, 그리고 기본적 질서유지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통제함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를 완벽하게 통제하게 되면 수십 년간 잘못된 통치로 인한 북한의 피해를 복구하면서 북한의 발전을 추구하고 한반도의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통일한국을 위해 북한의 발전과 내부 통합에 필요한 안정적 외부 환경을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장치와 정책들은 변화된 전략적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긴밀하고 깊이 있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통일은 커다란 도전과제를 부여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 개발 그리고 점진적 상업화 등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비록 북한이 해방 이후 한국에 비해 유리한 사회간접자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시설들은 지금은 노후하여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용은 실제로는 건설회사, 탄광회사, 농업계, 에너지 산업과 기타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에는 큰 혜택이 될 것이며 실제로 초기의 엄청난 쇼크 이후에 북한의 발전과 통합은 수십 년간 이어질 경제발전과 투자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양자 교역 협정인 한·미 FTA 덕택으로 미국 회사들이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빈곤은 천연자원이나 인적자원의 부족이 아닌 재앙에 가까운 정책의 문제이므로 법치주의, 참정권, 사유재산권, 교육권 그리고 건강권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현재 북한 광물자원 채취에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나 통일 후 이 상황은 분명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밑에서 한국의 교육 전통이 약화되긴 했으나 북한의 식자율은 거의



10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세기가 추구하는 통합적이고 세계화된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수십 년 간 정치적 선동에 세뇌된 사람들을 바꾸고 재통합하는 것은 전에 없던 사회·문화적 도전과제임이 분명하다. 과학과 현대기술 분야에서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숙련시키며 동시에 남한의 엄청난 변화 속도와 경쟁사회에 통합하고 발전시키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몇 년이 아닌 몇 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유를 남한의 최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60년 1인당 GDP가 79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생산성이 높은 나라로 일어섰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 어마어마하게 힘든 도전이긴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무수한 장애를 극복한 것을 볼 때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도전은 아니라고 본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한반도가 안정을 찾고 한국의 통제가 견고해진 이후에 미국과 한국은 상당기간에 걸쳐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포함하여 동맹관계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치열한 정치적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와 동맹관계의 종식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비록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이미 제기된 주장이기도 하다. 복잡

한 정치적 흐름의 방향을 잡고 한·미동맹을 재정립하는 일은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다. 미국은 통일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고심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적절한 전략적 위치에 대한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경제적으로 통일은 한국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줄 것이다. 어쩌면 최악의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차관 등 경제적 지원 또는 자원 공급을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여 한국이 국내 개발에 집중한다면 세계시장에서 남한의 몫은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한국이 세계경제에 가장 잘 통합되고 수위를 달리는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큰 손실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한국은 과거 남한이 그랬던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역동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연착륙’과 ‘경착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이 관련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연착륙’과 ‘경착륙’에 관한 논의는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정치가나 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단기간의 군사력 사용에 의한 통일이 이루

어질 경우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같은 위험을 수반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 붕괴 조짐이 보여 무력통일을 의도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은 과연 언제 북으로 들어가느냐이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궁극적으로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지만 어떠한 정확한 예측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신에 학자나 정책입안자들은 각국에서의 통제 가능한 정치·군사 및 사회적 범위 내에서 보다 예측 가능한 변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구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과 한국 정부는 통일 이후 북한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인도적 구호 노력, 공공의 안전과 통제력을 유지할 대책, 그리고 북한의 경제와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북한정권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고, 순수 행정직을 맡았던 일부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동반자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력통일 계획은 군사적 협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간 논의사항과 비정부기구(NGO) 등 정부 이외 조직의 논의사항까지 망라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통일 이후 환경에서 동맹의 목적과 역할에 관해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군과 학계 간의 체계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동맹을 위한 정치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통일 이후 불가피하게 찾아 올 정치적 논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양국은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상호불신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2012년 보고서에서 나오듯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우선순위 재배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상황의 악화 및 개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결코 무관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학계에 종사하는 미국, 한국, 중국의 전문가들이 외교 틀 안에서 공개적인 대화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 체제 종식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이러한 대화의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중국에게만 떠넘겨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통일된 한국이 극단적 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통일 전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봉쇄정책 실행과 관련된 중국의 염려를 가라앉히고, 몰락하는 북한에서 중국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축소하거나 통일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입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미국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입장은 다른 외부 군사력이나 정부의 힘이 아닌 오직 한국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창조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역할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

이다. 가장 중요한 국가로는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다음 가능성으로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는 남한과의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부산과 시베리아 대륙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검토해 왔다. 이들 나라들은 통일 후 북한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국가들이다. 이러한 다각적인 고려가 한반도의 지역적 통합을 앞당길 뿐더러 막대한 통일비용의 분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상적인 한반도 통일은 한국이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가운데 평화적이고 관리 가능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원활한 전환은 이루어지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반도 통일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이루어지든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즉각적인 안전 확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다른 무기 기술이 다른 불량국가나 비국가단체의 손에 들어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북한에서의 반란 가능성을 막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다. 반란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핵무기 및 핵시설을 확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신속하게 북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협력하여 북한 주민에게 식량

과 보건서비스, 전기 및 기타 생필품을 공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환기 정부는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또한 전환기의 한반도 내 갈등이 중국과의 갈등으로 변형될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다. 중국이 북한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기를 꺼리는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이다. 중국의 협조는 성공적인 통일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국과 한국은 중국을 적이 아닌 파트너로 참여시켜야 한다.

통일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의 붕괴 혹은 분열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어떤 통일 모델을 채택하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군사 충돌로부터 보호하고 난민의 범람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보다 안정적인 지역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적절한 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통일한국이 세계경제 및 국제적 시스템과의 경제적·정치적 통합을 가속화 시키는데 일조함은 물론, 계속되는 '통일-재통합-경제발전'의 과정에서 한국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이 엄청난 도전이기도 하지만 남한의 경제, 군사, 그리고 민주주의가 미국을 안심시킨다. 한편,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을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 확산 방지 프로젝트 및 지역 안보 공약이라는 세계적 역할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UNSC)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항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해왔다. 또한, 미국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이 창시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다국적 기구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북한은 미국의 정치가, 외교관,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북한정권은 경제파탄과 냉전종식에도 살아남았으며 2번에 걸친 지도자 세습 속에서 상당한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몇 가지 주제에 관해서는 합치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나머지 지역에 대해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 할지라도 모든 이익과 관심이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의견 차이가 생기더라도 비핵화와 평화라는 최우선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

북한정권이 무모한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아무

리 위협한다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10년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2013년 일련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핵 위협을 제거하고 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통로에 항시 개방된 자세로 임해야 한다. DMZ로부터 근접거리에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2천 5백만 시민이 거주한다는 사실과 북한정권이 국부의 상당부분을 재래식무기와 핵무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군사적 차원의 해결책은 엄청난 위협을 수반한다. 포용정책과 봉쇄정책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하지만 알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보다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왔기에 북한에 대해 지나친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꺼려왔다.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북한 전체 무역량 중 중국과의 무역량이 약 2/3 차지)이고,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자 지원국인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에게 비길 데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바를 해소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6자회담은 북한과 지역 당사국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6자회담은 상시적 정체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다. 북한정권은 남한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고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6자회담이 다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 역시 문헌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회담과 대화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관련국들이 북한 비핵화에 공통의 이해를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기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주요 지역 관련 당사국들 간에 정기적 대화를 통해 원칙을 확인하고 북한에게 핵 야망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009년 배정호 박사가 발표한 『21세기의 한·미 동맹』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핵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 남한을 배제시키려고 시도한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미국은 핵 문제의 해결에는 지역 관련 당사국 특히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좌절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호전적 행태는 결과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매우 부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미국과는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양국 지도자가 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협약체는 북한에게 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통일한국은 반드시 독립적이고 민주적이며 비핵화 되어야 하고, 재언할 필요 없이 남한이 정치·군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투자와 무역이 개방되어야 한다. 법질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이 지역의 안정과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 지켜왔던 굳건한 약속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은 한국 국민이 힘들게 얻고 지켜낸 정치적, 경제적 업적과 그것을 통해 성취해낸 가치를 지켜내고 유지해야 한다. 2012년,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가 실시한 세계정부통치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두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은 1987년 처음으로 직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을 시작으로 괄목할 만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은 1991년 이전까지 유엔(UN)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한국 출신 외교관이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유엔(UN) 외의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한마디로 한국은 정치, 경제의 성공 모델이자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통일 후에도 이러한 역할은 계속 되어야 하며 계속될 것이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세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경제 허브(hub)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통일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평화를 위한 매우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이상 '고래 무리 안에 있는 새우'가 아니다. 통일은 주변 국가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강한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과거 종속관계를 맺어왔던 지역 라이벌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분단에서 시작되었지만 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분야의 현안 문제에서 양자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 I. 미국-2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분단비용은 군사·안보 분야이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한국을 북한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상당수준의 군사력을 한반도와 태평양에 주둔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여전하다.

유형의 비용으로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비를 갖추며, 태평양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방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한반도의 분단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의 비용은 점차 증대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상발사요격미사일(Ground Based Interceptor: GBI)를 알래스카와 미 서부 해안에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프로그램이 계속 진화함으로써 미국의 오바마정부는 기존의 결정을 번복하여 미사일 방위 예산에 14기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을 추가 책정하였다. 이 비용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유형의 비용뿐 아니라 몇 가지 무형의 비용들이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재래식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그리고 핵 위협 억지, 방위에 미국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 미국은 군사력을 재배치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태평양 지역의 미군 규모 축소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

또 다른 무형의 비용은 자산의 아들, 딸들을 위협한 한국에 보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걱정과 두려움이다.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으로 인해 2만 8천여 명의 미군들이 북한의 침략 위협에 직접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쟁 발발 시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명백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앞서 지적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부정적 분단비용의 제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주도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보장하고, 북한정권이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에 행하였던 안보 위협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물론, 통일방식이 연착륙일지, 경착륙일지의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다.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은 편익과 비용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단기적으로는 과거 북한 내부의 경제적·인도적 측면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엄청난 지원과 개발원조가 요구될 것이다. 비용의 상당부분은 남한이 부담하겠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도 기여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착륙 : 남북의 평화적 화해

북한정권의 정책 변화

남한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

북한정권의 평화적 몰락

연방 혹은 연합 방식의 통일(2국 2체제 혹은 1국 2체제)

경착륙 : 폭력적인 시나리오

아래에서부터의 혁명(예: 자스민 혁명)

쿠데타 또는 권력 투쟁의 결과로 인한 통일

폭력적인 정권 붕괴

위기 시 외부세력의 개입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은 북한의 생활환경 개선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며, 지금까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장애요인이었던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주요한 안보 위협이 제거됨으로써 미국은 대단히 긍정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확대는 한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간접적인 긍정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전 세계 독재정부에 개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에서 정권 불안정, 내전,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중국이 북한이 군대를 파견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남한이 의도한대로 평화통일이 성취된다면, 한·미 양국 동맹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통일한국이 (1)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한다면, (2) 미국과의 안보관계보다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둔다면, (3) 중국의 압력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둔다면, (4) 한반도에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능성 측면에서 이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시작으로 ‘한강의 기적’을 거쳐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달성할 때 미국은 한국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한반도 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한국을 지켜오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정은 1980년대~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점차 시들어 가고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으로 남

한 여론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2009년 초에도 일련의 도발을 감행하여, 당시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던 오바마정부의 외교적 해법 우선 정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미국의 정권이 부시(George W. Bush)에서 오바마(Barack Obama)로 바뀌면 북한의 태도가 온건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은 것이었다. 그 결과, 포용정책으로 북한의 온건한 태도를 유도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경제·정치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 기대했던 변화는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70%의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90%는 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이라고 응답했다.

한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뿐 아니라 세대 간 차이도 존재한다. 60세 이상의 국민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한 나라가 이등분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한국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이들 집단은 북한정부에 대한 적대감 또한 강하여 대북지원을 대체로 반대한다. 남한의 민주화를 이루어낸 '386 세대'는 북한에 대해 신뢰감을 보이며, 심지어 북한의 범죄행위를 일축하거나 미국이나 한국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젊은 세대는 보수적 정치세력을 이념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386 세대에 비해 보수적이다. 철저히 계산적이어서 사안에 따라 한국 경제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여 입장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려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때문에 통일에 대해 덜 우호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남한 내에서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건 없는 포용, 조건부 포용, 상호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온건한 태도를 이끌어내고, 경제적·정치적 변화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김 대통령은 남한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우호적 태도를 취한다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한 개혁에 대해서도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다. 2006년 6월 몽골 방문 당시,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조건 없는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종전의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후 귀국하면서 “개혁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개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북한에게 개혁과 개방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오해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는 통일부 웹사이트나 대북 정책에서 ‘개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렸다. 2008년 인터뷰에서 “6자회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 국제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논리로 북한의 편에 서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해 그의 포용정책이 일방적 성격임을 강조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원칙에 입각하여 그의 전임자들보다 덜 이념

적으로 접근했다. 이 대통령은 포용정책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정치·경제적 개혁의 실행이라는 가시적 프로세스에 따라야 경제적, 인도적, 그리고 정치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라면 단계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에 혜택이 제공되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진보적 정치세력이 비판하는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어떠한 혜택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10년 내 북한 1인당 소득 3000 달러 달성, 5대 자유무역구역 설치, 100개 제조업체 설립, 북한 노동자 30만 명 양성 및 국제개발자금 400억 달러 조성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경제를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진보진영이 지지하는 대규모 대북지원과 보수진영이 지지하는 조건부 대북지원 원칙을 절충한 것으로, 덜 이념적인 접근방식이었다. 이것은 또한 다자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 관련 약속의 이행을 목표로 하는 6자회담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상한대로 한국의 무조건적인 선물에 익숙한 북한은 이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불쾌하게 받아들였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는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거리를 두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임자들의 대북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진보 정부가 강조해온 ‘화해와 남북 간 연대의식’이란 이름으로 남한은 북한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적대적 전략을 포기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만 남겨 놓았다. 하지만 수년 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보수 정부 역시 평양을 계속 압박하였으나

북한의 태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의미 있는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당선 후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구축 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정책을 제창했다. 상황에 따라 북한을 강경하게 대하기도 하고 북한과 타협하기도 하는 유연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향후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남북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병행할 것이다. 북한이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남한은 포용정책을 확대하고 남북이 함께 통일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화해정책이 아니며 튼튼한 억제력에 기초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새로운 도발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확실한 전쟁 억지력을 기반으로 한 신뢰구축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조건부 혜택을 제안했다. 신뢰구축이 비핵화로 이어진다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도 교류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박 대통령은 북한을 의미 있는 변화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맞서기를 꺼려 온 진보진영과는 대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용성과 관계없이, 북한의 대화 거부 태도는 신임 대통령을 지정학적 무대에서 고립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제 외교적 해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는 많지 않다.

북한은 계속해서 약속 이행을 거부하고 남한을 공격함으로써 잠재적 혜택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협상테이블로 돌아오지도,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상호 신뢰구축의 성공은 요원하다.

김정은은 그의 전임자들의 위협적 외교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반면, 북한의 국제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는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김정은 정권은 그들의 호전성이 승리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미국과 동맹국 정부는 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는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여 긴장 수위는 낮추었지만,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개혁을 유도하지는 못했고, 핵무기에 대한 끝없는 야망도 포기시키지 못했다.

많은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이 북·미관계에 극적인 개선과 6자회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태도는 부시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핵 문제가 미국이나 남한의 정책이 아닌 북한 스스로의 의지로 해결된다는 뒤늦은 통찰을 얻었다.

오바마정부는 2009년과 2012년, 합의를 통해 포용을 시도했다. 미국 정부의 노력은 물론, 이명박정부와의 비밀회동 역시 북한의 공격도발을 막지 못했고, 북한을 회담장으로 다시 불러내지도 못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1) 미사일 방위를 포함한 미 국방성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GBI, SBX, F-22 전투기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협을 가중시킨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방비의 삭감은 매우 위험하다.
- (2) 북한을 재포용해야 한다는 상투적 목소리를 거부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반복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3) 결의의 표현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안보 공약은 명확하고 확고해야 한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바마정부의 설명은 북한에 그릇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 (4) 중국에 압력을 가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 싶은 한반도의 위기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더욱 과감하게 도발행동을 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 (5) 봉쇄정책은 포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정부는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식 금융제재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1) 방위력을 높여야 한다. 국제법을 무시한 북한의 도발과 군사 공격은 포용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남한은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 (2) 조건적 포용을 추구해야 한다. 포용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치는 매우 낮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노력이 실패하더라도 북한의 도발과 약속 이행 파기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 되므로 포용정책을 완전히 폐기해서는 안 된다.
- (3)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진전을 이룬 후로 미루어야 한다. 타협을 위한 전제조건에는 군사력 축소와 신뢰구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규탄해야 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강력 비판하고, 중국이 유엔(UN)의 북한인권 관계자의 입국을 승인하여 중국 동북지역 난민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몽골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독려하여 북한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처우하도록 해야 한다.
- (5) 인도적 지원을 하되 비상식량원조의 수준은 국제원조기구가 북한 내에서 시행한 조사에 근거해야 한다. 원조는 북한정부를 통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받아야 한다.
- (6) 유엔(UN) 결의 위반과 국제법 위반을 처벌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UN)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개인, 은행, 기업,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강경한 대응은 북한의 도발행위 시도 자체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동시에 시장경제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통해

북한 체제의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변화 또는 붕괴를 유도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이 정책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정 은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으나, 북 한의 태도가 온화해지거나 경제·정치 개혁에 관대해진 모습을 확인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그 때마다 북한정권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2012 년 '6·28 조치'가 보도된 바 있으나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현실화 되지 는 않았다. 김정은의 2013년 연두교서에서도 경제개혁에 관해서는 어 떠한 언급도 없었고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겠다는 계획만 발표되었다.

북한정권이 시장경제 및 민주주의 원칙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면 정권 붕괴를 통한 통일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북한정권은 그 동안 엄청난 복원력을 보여주었으며, 국내외에 산재한 위험요소들로 인해 붕괴가 임박했다는 예측 역시 계속 빗나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북한 전역의 안보 체계
- 유순하고 다루기 쉬운 주민
- 지도자의 운명이 곧 자기 운명이라 믿는 엘리트 집단
- 실천력 있는 반대파의 부재
- 정부의 정보 독점

또 다른 북한의 생존요소는 붕괴의 결과를 걱정하는 다른 나라의 도 움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정권의 소멸만이 안보 위협과 인권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양국 역시 핵 보유국이 파멸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두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에 고려해야 할 다른 문제들을 기술하였다.

- 통일의 촉매제보다 장애물이 더 많다.
- 한반도 통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국가와 이러한 국가들의 국가주의적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변화와 개혁을 유발하여 통일로 이르게 할 것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인가?
-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연착륙은 가능한가?
- 통일을 향한 남한의 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북한의 군사 위협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신뢰구축 조치(confidence-building measure: CBM)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 축소를 해야 한다.
- 북한이 덜 호전적인 태도로 합의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호혜적 이해관계를 기초로 남북 간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의 국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 북한의 경제개혁을 유도하고 남한의 경제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방법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 경제적 측면

- 북한지역 재건과 개발 문제
- 식량지원 등 인도주의적 구제
- 통일비용 부담 당사자: 남한 단독 또는 국제사회의 지원
- 국제사회의 지원 형태(무상원조 또는 투자)
- 한국 기업만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 거시적 차원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 정치적 측면
  - 북한정부의 유물을 일부 남겨놓을 것인가?
  - 북한 공직자들의 정부 일자리 허용 문제
  - 북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기소 또는 사면
  - 북한 주민의 참정권 허용
- 안보적 측면
  -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 통일 후 미군의 지위와 규모 재설정
  - 북한 군대, 안보기관, 사법기관 등의 통합 혹은 해산
  - 북한지역에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인가, 중국은 한반도 통합·통일에 대해 묵인할 것인가?
- 사회적 측면
  -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 허용 문제
  - 의료제도 문제
  - 공통의 교육기준 설정 문제
  - 국유지의 사유화 및 사유재산 처리 문제
  - 사회·문화적 차이의 극복(독일의 동·서독 간 심리적 분단 참고)

## I. 미국-3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분단에 따른 비용은 대부분 적대적이고 불안정하고 부도덕한 북한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다. 미국이 다른 불량 국가의 행위에 대처하는데 드는 비용과 동일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즉, 분단 자체가 비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한국이 있다고 가정하자. 양쪽 모두 지금의 한국과 같지만 서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할 때, 미국이 부담할 분단비용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한 쪽이 중국처럼 미국의 친구는 아니어도 적어도 안정된 국가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같은 상황보다는 분단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북한의 존재로 인해 미국이 부담하는 군사·안보비용은 적국임을 자처한 나라를 억제·단념시키고 그에 맞서는 방위에 드는 돈과 노력이다. 이러한 비용은 나열하기는 쉽지만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용과 북한이 실제로 도발 공격을 감행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 비용이다.

현재 발생하는 비용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포함되며 대략 연 10억~20억 달러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시설 건축 비용 및 주변국의 미군

주둔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sup>18)</sup>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sup>19)</sup> 전략에 따라 지역 안보 유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주둔의 포괄적 비용을 측정하기는 어렵다. 이 밖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위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잠재적인 비용은 발생 확률에 따른 것이라 계산하기가 더욱 힘들다. 두 가지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면전을 개시하거나 일본의 도시 또는 주변국의 미군기지, 심지어는 미국의 도시를 공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국 또는 단체에 핵물질을 파는 경우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은 심각한 문제이다. 위 두 시나리오 모두 인명 피해를 포함한 수천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미국의 또 다른 안보비용은 북한의 국제범죄활동에 의해 발생한다. 화폐 위조와 불법 마약의 제조·판매 등이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가치 전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정부에게는 도덕적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군사·안보 비용과 마찬가지로 분단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인 비용 또한 북한의 본성에 기인한다. 위협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본성은 한반도 전역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약간 ‘비정상적’인 나라로 인식시키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 물론, 그들은 한국의 미래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18) 참고로 “2011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8,125억 원일 것이며, 이는 미군의 한국주둔비용의 약 42%이다.” Mark E. Manyin, Emma Chanlett-Avery and Mary Beth Nikitin, “U.S.-South Korea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to Congress* (May 15, 2012), p. 22.

19) 위의 글, p. 24.

예를 들면, 2013년 초, 북한이 한국과 전시상태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안전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라고 경고했을 때 일부 미국 국민들은 북한의 주장을 믿고 한국으로의 관광을 재고했다. 사실 북한의 전쟁 위협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므로 당시 관광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반복됨으로써 한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측정하기란 힘들다.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면 투자자들의 열정은 사그라진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한의 위협이 한국 증시에 약간의 긴장상태를 만든 것 외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가는 현재의 사건들을 단지 간접적으로 반영하기만 하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에 대한 다른 투자자들의 반응이다. 투자기관들은 북한과 국경이 맞닿은 것으로 인해 한국이 받을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GM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계획이라고 확실히 밝혔으나 다른 회사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거나 투자를 확대할 지는 미지수다. 한국에 대한 투자 부진은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눈을 돌려 보자. 한반도에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는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 특히 전자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나 한진 같은 해운회사는 한·미 간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항공기 부품 등 주요 부품들도 한국 기업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미국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갈등 상황이 미국 증시에 미칠

심리적 영향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한국의 분단과 북한의 비뚤어진 본성으로 인해 미국 국민에게도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2백만 명의 한국인 중 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이다. 이들 중에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쓰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들의 감정적 동조 역시 사회적 비용이다.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은 바로 북한정권의 정책으로 파괴된 환경과 피해를 입은 북한주민의 생활이다. 이는 통일 이후에 발생할 경제적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다. 북한지역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통일한국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게 되는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각종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이들의 생활방식과 태도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 남을 것이며 이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2만 5천 명에 달하는 탈북자와 관련된 문제들은 앞으로 다가올 것의 극히 일부분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한국이 부담하겠지만 일부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미국 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공식적으로 지지해 왔다. 1953년,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평화적 수단을 다하여 한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sup>20)</sup>

1979년, 카터(James Earl 'Jimmy' Carter Jr.) 대통령은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국제질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1985년,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역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여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했다. 1992년,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이 수용하는 평화통일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했다. 이듬해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대통령은 다시 한번 “우리는 한국 국민이 수용하는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면서 “통일이 되면 한국이 제시한 통일과정의 곁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은 “철책과 두려움 대신 교류와 협력으로 하나가 된 한반도를 볼 것으로 기대하며 그날이 오면 강하고 적극적인 친구로서 미국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21)</sup> 그리고 2009년, 오바마 정부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한다”는 공동비전을 발표했다.<sup>22)</sup>

통일에 따른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는 적어도 초반에는 북한의 중 말로 인한 군사·안보비용의 절감일 것이다. 만약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면 핵무기 확산 위협을 감소시켜 미국 안보에 실익을 안겨줄

20) 별도의 주석이 없는 경우 인용 자료는 Peter M. Lewis,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 Anti-Unification Policy or Just Too Many Uncertainties to Account For?,”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pp. 79-108.

21) Thomas M. Defrank, “Prez Peeks at N. Korea,” *New York Daily News* (February 20, 2002), <[http://articles.nydailynews.com/2002-02-20/news/18198068\\_1\\_wire-and-fear-north-korea-sunshine-policy](http://articles.nydailynews.com/2002-02-20/news/18198068_1_wire-and-fear-north-korea-sunshine-policy)>.

22)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White House, June 16, 2009,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t-vision-for-the-alliance-of-the-United-States-of-America-and-the-Republic-of-Korea/)>.

것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 남는다면 미국은 동북아에서 강력한 동맹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은 미국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확대, 새로운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확보, 그리고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 기회일 것이다. 북한지역과 사회적 교류의 창이 열리면서 많은 미국인들은 북쪽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인권 단체들은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사람들을 접촉할 것이다.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 현재 2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지역을 방문하고 일부는 가족, 친척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단기적으로 통일비용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아마도 지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여전히 비용은 비용이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통일한국이 미국 및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강력한 동맹국으로 남는다면 통일은 미국에 이익이 되겠지만 한국이 중국과 서방 세계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를 가진다면 이는 미국에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경제·사회·문화적인 관계를 본다면 군사·안보적 측면에 중국과 더 가까워 질 가능성도 있다. 한·미관



계가 악화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이 강해질수록 주변국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힘을 짓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통일된 한국은 북한 주민 2천 5백만 명을 끌어안게 되는데 이들이 통일한국의 국정이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적대국이던 미국과 가까운 사이로 남는 것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미·중관계 역시 중요하다.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큰 나라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자로 남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쟁구도 하에 통일한국이 미국의 힘을 약화시킨다면 미국이 치러야 할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로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주적(主敵)인 북한이 사라지면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필요성이 줄어들겠지만 과거 오랜 기간 불편한 한·일관계를 볼 때 일본 입장에서는 강해진 한국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가까운 안보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외하면 통일로 인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사회·문화적인 비용은 특별히 없어 보인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통일은 쉽지 않을 것이며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갑자기 일어난다면 한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비용은 상당히 클 것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북한정부의 동의와 도움도 있어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무력으로 통일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주도의 무력통일을 역설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과 현재 상황, 즉 현재의 국제질서 아래서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고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이 평화통일일지 아니면 무력통일일지는 북한 지도자의 손에 달려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수많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계속적인 대응 자제는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 추가적인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로 인해 북한 지도부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직·간접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북한정권 하에서 고통을 받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수 년, 심지어는 수십 년에 걸친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통일과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했다.<sup>23)</sup> 1단계는 단기적 ‘평화 공동체’ 구성으로 남북한이 서로 해치지 않는 비핵화 구현이다. 이러한 형태의 통일은 미국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2단계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남북 경제교류를 확대하고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23) “ROK President Lee Proposes Three-Step Reunification with DPRK,” *Yonhap News Agency*, August 15, 2010, <<http://english.yonhapnews.co.kr>>.

이다. 이 단계에서 드는 비용을 한국과 함께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 해주고 대신 경제적 기회를 열어 주는 것이다. 그 다음 3단계는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한 다음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남북의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완전한 통일을 이룬 한국이 도입할 정치·외교정책이 미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일 것이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오바마정부는 한국의 통일이 “자유로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평화로운 통일”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2009년 12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이 언급)이다. 이는 김 씨 일가 정권이 종식되거나 내부적으로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이다. 즉, 어떤 결과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않고, 다른 누군가가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정책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보다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 관련 물질이 미국의 적대국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개시할 경우 북한 스스로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될 경우 누가 핵무기를 차지할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비핵국가인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에 개입했던 경우와는 달

리 미국정부는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할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는 동안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사행동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 정부를 타도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위험이 따르는 정책으로 미국이나 북한 인접 국가들에게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북한 내의 핵심 문제, 즉 그들 지도자의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 물론 이 정책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권고할 수는 없을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무응답)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통일을 목표로 하는 합의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 남북 양측, 특히 북한은 통일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일이지 다른 나라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다자회담(3자, 4자, 5자, 6자 회담)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회담은 과거에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앞으로도 새로운 요인이 없다면 성공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비핵화 협상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볼 때 비핵화 회담은 잘해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는 이러한 회담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현재 미국은 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 적어도 북한 지도자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고위급 회담은 북한정권에 정치적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피해야 하며 북한의 회담 참석을 대가로 어떤 종류의 보상도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첫째, 개방성이다.

통일한국은 경제·정치 체제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한국은 과거에 경험했던 비극을 피하고,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충분히 현명해져야 한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국 사회와 조직 역시 투명해야 한다.

둘째, 유연성이다.

유연성은 한국이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특성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은 더욱 필요하다. 전통은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이 전통이 사람들을 묶어 두거나 마음을 닫아 버리게 한다면 위험하다. 특히, 지도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미래가 오든 한국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유연해져야 한다.

셋째, 우정이다.

한국은 새로운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사람이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의 북쪽에서 오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낯선 사람'들은

모두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시대에는 그 ‘낮선 사람’이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나눔이다.

인간 개개인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나 개개인의 이기적인 본성이 사회 전체에서 발현된다면 그 국가는 내부적으로 쉽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빈부격차를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으나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제공받을 수는 있어야 한다. 최근 한국은 빈부격차가 점점 커져 소득 상위 20%가 하위 20% 보다 다섯 배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약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나눔은 다른 나라로도 뻗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연성권력(soft power), 즉 자선, 음식, 연예, 예술과 같은 문화상품을 이용한다면 나눔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섯 째, 통합이다.

수천 년의 역사에서 한국은 국가 통합에 종종 어려움을 겪었다. 정치·경제적으로 통일된 한국에 있어 진정한 통합이라는 가치는 가장 실현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인간은 비슷하거나 익숙한 존재에게 매달리려는 본성이 있으며 내부에서 겪은 불행을 외부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통합은 아직까지도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지만 양쪽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는 누구에게 맡기거나 다른 나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 I. 미국-4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첫째, 넓은 관점에서 볼 때 통일에 관한 비용과 혜택은 현재와 과거 북한 정권의 성격과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다. 순전히 의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직접적인 분단의 비용이라기보다는 북한과 같이 고립되고 위험한 정권의 도발행동에 대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분단이 60년을 넘은 시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수많은 난관들, 즉 핵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유린, 경제파탄, 국제범죄행위 등의 도전들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시나리오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을 대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실상 한국이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인 것이다.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표면적으로 한반도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단에 따른 군사적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미 국방성의 예산 지출 자료를 분석하면 알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과제이다. 그러나 그러한 계산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비용 외에 군사훈련을 위한 군대의 일시적 재배치, 일본에 주둔하는 한국에 초점을 맞춘 병력, 하와이 태



평양 사령부의 항공모함 전투병력, 한국에 가끔 배치되는 다른 해군 병력, 그리고 방대한 국방성 전문 인력들의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에 북한의 도발, 만성적 인권위기, 그리고 핵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정치·외교적 자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국토 안보에 관련된 폭 넓은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의 미국 서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배치와 함께 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운영하는 비용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달간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과 격렬한 수사 역시 관련 비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군사전략에 의한 추가 예산 뿐 아니라 대중을 안심시키는 전략에 드는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한 예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례를 깨뜨리고 미군 고위간부가 2013년 3월, 미국의 B2 폭격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추측하건대, 이러한 공개 발표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두 나라 일반 국민은 물론 미국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안심에는 비용이 따랐다. 정확한 예산 산출은 어렵지만 포린폴리시닷컴(foreignpolicy.com)의 기사에 따르면 B2 폭격기의 단순 출격에만 5백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이는 30억 달러에 달하는 스텔스 폭격기 자체의 가격과 매년 드는 유지비용 8억 달러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또 다른 비용은 광범위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첩보의 수집과 분석에 투여되는 비용과 자원이다.

위에 언급한 내용이 전부인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처하

는데 소요되는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된 비용은 군사·안보적 비용을 비롯하여 여러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 산출 역시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한반도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 역시 군사·안보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매우 실질적이고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 수년 간 미국과 한국은 무역과 투자 분야의 교류에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고, 역사적이고 포괄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향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계속되는 한반도 안보 긴장상태로 수면 하에 머물러 있다. 사안의 성격상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인가를 계량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즉, 북한의 실질적 안보 위협이 없다고 가정할 때 추가 투자 또는 무역이 어느 정도 늘어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올해 봄, 북한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외국인은 남한에서 떠나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sup>25)</sup>

한반도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계산은 미국의 방위 관련 기술과 장비를 한국에 판매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혜택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분단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러한 한반도 분단 상황으로 미국 방위 산

25) ([http://www.nytimes.com/2013/04/10/world/asia/south-korean-leader-seeks-to-end-vicious-cycle-with-north.html?pagewanted=all&\\_r=0](http://www.nytimes.com/2013/04/10/world/asia/south-korean-leader-seeks-to-end-vicious-cycle-with-north.html?pagewanted=all&_r=0)).

업이 얻고 있는 혜택의 일정부분을 차감해야 한다.

계속된 한반도 분단으로 지불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비용은 아마도 그 성격을 규정하기에 따라서 계산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당면한 한 가지 고려사항은 재미(在美)한국인 사회에 관한 것이다. 현재, 170만 명 이상이 미국에 살고 있으며 많은 가족들이 아직도 이산가족으로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있다. 이산가족의 비극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끝으로 미국의 구체적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한 나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인도적 문제와 인권 문제 즉, 처참한 북한 내 인권 상황, 만성적 식량부족 등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불해야 할 분담비용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남한이 효과적으로 북한을 점수하는 통일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에서 미국이 얻게 될 긍정적 통일효과는 상당부분 앞서 지적한 분단의 비용의 반대라고 보면 된다. 추측하건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현재와 같은 북한의 군사 위협을 멈추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군사·안보비용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실제로 통일과정 초기에 군사 및 안보 예산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한반도가

점차 안정을 유지함에 따라 그 후에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반도 통일이 곧 한반도에서 안보 문제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일본, 중국과 영토분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잠재적 위협은 존재한다. 이러한 위협이 얼마나 미국에 영향을 줄 것인지, 통일한국이 미국에게 얼마만큼 평화의 열매를 줄지는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성격에 일정부분 달려 있다고 본다. 추측하건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어떤 형태로든 존속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재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군사·안보비용도 역시 지속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단에 따른 비용에서 자유로워진 통일한국은 지역과 세계 안보 문제에 관해 미국의 역동적 파트너로서 보다 나은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해적 소탕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해상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지키고 재난에 대응하며 인도적 차원에 나서는 등 폭 넓은 통일 한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은 환영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한국 주도의 통일로 인한 군사 및 안보 혜택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경제적 혜택은 획기적으로 확장된 새로운 기회로부터 나온다. 한국 주도 통일은 전통적 평화의 열매인 안보와 직결된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긴장 때문에 투자를 기피했던 미국 기업들이 긴장이 완화되면서 한국과 교역을 넓히거나 투자를 늘릴 것이다. 가장 큰 잠재적 혜택은 북

한의 재건과정에서 열리게 될 기회와 연결되어 있다. 통일과 관련되어 분명히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고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도울 것으로 본다. 이것은 ‘비용’이라기보다 ‘투자’라고 봐야 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통일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통일비용을 훨씬 뛰어넘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20여 년 전 독일의 통일로 인한 어려움과 소요비용을 지켜 본 전문가들이 통일한국 시나리오의 즉각적 비용을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지난 20년간 큰 격차를 보여 통일이 단순히 비용이라기보다는 경제적 기회라고 보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러한 관점은 남한의 사회 전반,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폭발적인 ‘역량’의 성장에서 기인한다. 한국의 국내적 역량과 더불어 그 동안 확장된 미국과 한국 간 경제·사회·문화적 협력의 폭과 깊이는 양국 모두에게 통일 후 북한에서 생겨날 기회에 대해 20년 전보다 훨씬 나은 위치를 제공할 것이다.

통일효과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요소는 바로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줄어들게 될 것이란 사실이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는 매우 높지만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양국관계에 또 다른 긴장을 만드는 원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통일은 한·미동맹의 종식이나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면 철수를 뜻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추가적인 미군 주둔은 줄어들 것이며 그에 따라 미군 주둔으로 인한 분노와 민감한 반응도 감소할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한국 주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분명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를 부정적인 효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비용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독일 통일은 하나의 커다란 긍정적인 역사적 발전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다.

#### - 군사·안보적 측면

통일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한국의 통일에 관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염려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 또는 기본적인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한국 주도의 통일 시나리오가 반드시 또는 즉각적인 한·미동맹의 종말 또는 한국에서 미군의 완전 철수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것은 미국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라기보다는 한국 스스로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의 진보진영에는 좀 더 음모론적 관점에서 미국이 지역패권주의의 한 부분으로 한반도에서 위치를 유지하고자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관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 전략가들이 통일 후 한·미동맹의 존속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재정 한계의 시대에 중·단기적

으로 볼 때 보다 당면한 문제는 미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간의 오프콘(operational control: OPCON) 즉,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이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천명하고 미국으로부터 오프콘(OPCON) 회수를 공약했을 때, 적어도 당시 그의 참모들은 이러한 요구를 미국이 거부할 거라고 예상한 듯하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인수를 준비한 것보다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알게 되었다. 최초 미국의 제안은 2009년에 이양하는 것이었지만, 양국 협의에 따라 2012년으로 늦추어졌고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2015년으로 늦추어졌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에 의한 도발이 늘어남에 따라 현 박근혜정부는 이를 더 늦추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보듯이 미국이 한국의 의지에 반대하여 한국에 더 머무르려는 증거는 없다. 실상은 그 반대에 가깝다. 양국 정부의 합의에 기초하여 협력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동맹을 위해 그리고 양국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는 통일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앞에서 언급 했듯이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소위 ‘평화 배당금’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아마도 남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 장비 및 기술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 내지 통일비용이라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긴장상태로 보아 통일한국의 군사비

지출이 아주 빠르게 또는 극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비용은 통일로 인해 경제적 기회가 확장되면서 균형을 맞출 것이란 사실이다. 그래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미국에 순전히 부정적 경제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만들기 어려운 것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에 무역이 거의 없는 상태를 고려할 때 한국 주도의 통일을 통해 미국은 최소한 2천5백만 명 규모의 새로운 소비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한·미 간 경제협력이 보다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통일 후 북한의 재건 과정에 미국 기업과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슷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 통일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효과도 상상하기 어렵다. 아코디언 음악의 광팬과 모란봉 무용단의 팬들은 독특하고 괴상한 북한의 문화를 잃게 되는 것을 슬퍼하겠지만 이것 역시 미국에 어떠한 부정적인 사회·문화적 충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통일 이전이나 이후, 특히 통



일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6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공동비전 선언문에는 동맹의 목표로서 통일에 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동맹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모든 국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 한반도에 굳건한 평화를 수립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 낼 것을 목표로 한다.”<sup>26)</sup> 공동비전 선언문은 미국과 한국 간 협력 분야를 열거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 이상의 동맹의 기능까지 적시하였다. 세부 사항까지 포함하진 않았지만 이 공동비전은 통일에 따른 잠재적 부정적 효과를 피하는 첫 걸음으로 한반도의 미래 모습과 어떻게 미국과 통일한국이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로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의 붕괴, 패배 혹은 해체가 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20년 전의 예측으로는 북한의 점진적 개혁과 개방, ‘연착륙’,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오랫동안 그 전제는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의 해결, 북한 경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등이었으며 이 모든 것

26)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vision-for-the-alliance-of-United-States-of-America-and-Republic-of-Korea](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vision-for-the-alliance-of-United-States-of-America-and-Republic-of-Korea)>.

이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핵 야망을 접고 미사일을 포기하며 경제를 개혁하고 사회를 개방하며 또는 인권을 개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통일에 앞서거나 통일을 앞당기는 것보다 통일 후에 따라오는 것이 될 듯하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통일이 한반도의 평화, 안전, 번영을 위한 목표나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수년에 걸친 독일 통일의 경험을 참고할 때, 남한에서는 두 체제의 단기적 또는 즉각적 통합보다는 점진적 통합에 크게 동조한다.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한동안 북한의 안정화를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일련의 활동으로 인해 남한의 정책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정권을 인위적으로 받쳐주기 위한 정책도 없으며 동시에 북한의 불안정화를 피하는 노력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미국의 이익과 정책은 거의 남한이 정한 것을 따라가는 수준이다. 미국에게 있어 통일을 지원하는데 주저하거나 혹은 덜 열심인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너무 간절하게 북한의 안정성을 흔들려는 듯이 보이거나 하는 것은 모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 이익에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한국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에게 가장 안전한 입장은 실제 통일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는 간에 한국을 지원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통일과정에서 동맹국, 즉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과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 더 큰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다. 미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이익은 동북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있지 어떤 특정한 통일 전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국 및 다른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에서 붕괴, 심한 요동, 내부 갈등이 발생하거나 개혁과 개방이 단행되는 것과 무관하게 미국의 정책은 한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통일 시나리오가 무엇이든 미국의 관심은 대량살상무기의 확보, 한국 내 미국 시민의 안전, 한국의 방위, 그리고 지역 내 갈등의 확산 방지이다. 통일에 관해 미국과 한국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주안점, 우선순위, 혹은 통일과정에 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이익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최근에 북한의 핵실험 감행, 헌법 개정에 핵에 관한 언급, 그리고 핵 보유국을 천명한 것을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6자회담 또

는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년에 걸친 노력의 결과 북한에 의해 촉발된 도전에 대해 어떠한 특효약이나 쉬운 해결책도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장 현실적 접근 방식은 미국과 한국이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좀 더 넓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계속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우리의 접근방식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2009년 6월 16일 6자회담 공동비전 선언문은 동북아 평화안보 회의를 제안했고 여기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국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6자회담과 다른 지역회의 모두가 남북관계의 진전에 달려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이 실질적으로 프로세스를 주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이나 역내 평화와 안보 체제 또는 한반도의 평화조약 체결에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여기서 다시 한번 2009년 6월 16일 공동비전 선언문에서 밝힌 통일을 위한 우리의 공동비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동비전은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3대 원칙을 천명한다. 요약하면,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을 강력 지지하며 통일한국이 오늘날 한국과 같은 모습이기를 희망한다. 공동비전 선언문은 동맹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공동의 가치를 규정하고 그러한 가치를 담아내는 여러 공동 관심사항을 밝히고 있다.

아태지역에서 우리는 역내 기구 및 파트너와 함께 번영을 촉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된 사회, 개방된 경제가 번영을 창조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인다고 믿는다. 우리들 국가와 시민사회는 역내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교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믿는다. 아태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 간의 상호이해, 신뢰, 그리고 안보 관한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협력적인 지역의 노력을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한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해적행위, 조직적 범죄 및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침해, 에너지 안전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세계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의무를 다했던 것처럼 평화유지, 안정화 그리고 재건

지원에 관한 협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우리는 G20과 같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다국적 체제의 협력도 증대시킬 것이다.<sup>27)</sup>

통일 후 새로운 가치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 통일 후 통일한국과 미국이 함께 추구할 적절한 가치와 활동으로 위에 열거한 것들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OECD 회원국으로, G20 회원국으로, 유엔의 주요 활동 국가로, 그리고 경제와 민주주의 발전의 모델로서 한국은 점점 세계와 미국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통일한국이 오늘날의 한국을 닮으면 닮을수록 그것은 더욱 좋은 것이다.

---

27)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vision-for-the-alliance-of-United-States-of-America-and-Republic-of-Korea](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join-vision-for-the-alliance-of-United-States-of-America-and-Republic-of-Korea)>.

## I. 미국-5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미국은 한국에 2만 8천여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관련 비용은 한국이 통일되면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으로 본다. 한국의 갈등은 미·중관계에 있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긴장과 갈등의 요소로 남아있다. 미·중관계는 남북 간의 교착상태가 없다면 훨씬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이다. 북한의 핵 교착상태는 미국 정부 최고 책임자들의 시간과 관심을 과다하게 끌어들이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미국은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이 증폭되는 지역을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미국은 남한에 대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에 특별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책임은 비용이 들지만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통일이 성사되면 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미국의 입장에서 계속되는 한반도 분단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비용은 간접적이고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과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도덕적 비용이 발생하며 국제 인권 관점에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비용과 북한의 생산성 있는 경제력의 부재와 관계가 있다.

미국이 지불해야 할 경제·사회적 비용은 파트너인 남한이 지닌 상대적 강점과 약점 그리고 남한 사회의 복원력, 안보력과 비례하여 결정될 것이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와 관련된 경제·사회·문화적 비용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국에서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 사력을 축소시켜 아태지역, 또는 보다 넓은 지역에서 좀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불안요인에 관심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국은 통일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으로서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국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계기로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 규범에 토대를 둔 접근방식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중국이 기꺼이 국제적 규범을 재확인하고 국제규범을 통한 지역분쟁 해결이라는 목적에 협력한다면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인보 협력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한·미관계의 사회·문화적 영향은 통일한국에 들어설 새 정부의 전략적 방향과 사회·정치적 구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통일한국의 개발과 성장에 따른 '참여효과'와 간접적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실시한 골드만삭스의 조사에서도 한국의 성장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었다. 그 이유가 분명하진 않지만, 미국은 내부 대립으로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통일한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통일한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도함으로써 미국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통일에 따른 단기적 도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단기적 경제성장은 제한될 수도 있을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의 통일효과는 중도적일 것이다. 즉,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떤 구조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 구조는 양국 정부가 통일의 결과로 파생되는 모든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어떠한 새로운 정치·안보 협약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달려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한국의 통일이 중국과 일본 간의 대립을 수반하거나 통일과정에서 다른 지역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의 정치적 초점은 2가지로 볼 수 있다. 즉, (1) 통일한국 정부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2) 역내 갈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위협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역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한국 경제가 폐쇄적으로 바뀌거나 중국이 한반도에서 독점적이고 특별한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여 다른 나라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아시아에 개방경제정책을 독려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한반도 통일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가능한 부정적 효과는 위와 같은 상황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유학생 수의 감소 등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의 파트너로서 미국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거나, 중국 중심의 재정 원칙과 경제적 관행을 따르게 됨으로써 통일한국의 경제가 중국에 지배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것이다.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한국은 통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긴밀한 정치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동반자 관계는 아주 공정하게 통일의 조건을 만드는데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통일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 또는 민감한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포함하여 한국의 재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미 간 대화가 필요한 또 다른 측면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행동과 영향력이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한국의 자주권 또는 안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근본적으로 한·미 동반자 관계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안보 질서 구축의 중심이 된다면 한국의 통일이 비록 한반도에서 일어나지만 지역 안보에는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통일과정에 관한 주요 관심사항은 통일한국이 평화적 방식을 통해 성취되면 그 결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목적은 아마도 점진적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점진적 통일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통일 이후 중국의 영향이 더욱 증대되는 위험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

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 미국의 주요 우려사항은 아니지만 남한 주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우려사항이다. 또한, 이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는 한편, 남한의 통일정책 수행에 연계되어 참여해야 하는 복잡한 조합을 요구한다.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 기반 구축 시, 과연 북한이 협조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다. 중국과 남한은 점진적 통일에 이해를 공유하고 있지만 남한 주도의 통일과정에서 북한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공유하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한반도 비핵화의 부산물은 아마도 중국 안보 전문가들이 충분히 심사숙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을 더욱 높이려는 중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곧 한·미동맹의 존속이라는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미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만이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에서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러한 안보 문제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관심이 반드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핵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인접한 핵 대국에 대항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주장과 중국과 재래식무기로 경쟁하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한국의 역사적 인식에 비추어 볼 때 핵 능력이 유일한 군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과거 조공관계로 대표되던 중국과의 역사적, 정치적 타협 대신 오늘날 한국은 중국의 힘에 맞서는 안전장치로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사항에 대한 유일한 실용적 대안은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안전장치로 삼으며 또 한국이 핵 능력을 갖고자 하는 충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제 기능을 하는 협의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중심 의제로 하여 일련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이 원칙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실효성이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6자회담은 통일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한반도와 관련된 여타 주제들에 대해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6자회담의 구도는 6자회담 당사국 간에 자연스러운 외교 접촉을 제공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보다 관료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관련된 다른 쟁점에 대한 양자 협의가 있음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협의는 참여 국가에 따라 그 질이 다양한데 남한은 이러한 편리한 장치를 이용해 우려하는 바를 전용 외교 채널을 통해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양자관계를 지원하는 실무급 협의 방식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3자 회의 기구는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다. 특히 이들 3국은 북한의 안정성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들 3국간의 장기적 전략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유가 있다. 또한, 회의의 범위는 한반도 위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광범위한 주변 상황에 대한 고려와 통일 이후 한국에 대한 각국의 비전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기구는 잠재적인 정치 문제와 관심사항을 찾아내는 체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를 테면, 북한의 불안정화로 인한 문제 그리고 통일 한국의 잠재적 성격과 방향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룰지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활발한 논의를 저해하는 역사적·정치적 민감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한·미·중 3자 협회가 진행될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중과 같은 비중 혹은 더 깊은 논의가 한·미·일 3국 협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질문은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이나 궁극적인 통일에 앞선 중간적 단계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다루어질 문제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군사·안보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미국과 남북한의 지역 안정, 군비 및 군대의 축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남북 양자 간 군사 협의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질 문제이다. 하지만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인해 최소한의 남북 간 군축 협의에 앞서 미국과 한국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안정 도모와 관련하여 미국, 한국, 북한의 3자 협의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은 도발 대응 수단에 대한 논의와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 근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에 미국이 참여한 결과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남한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두 가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이 두 제안은 모두 통일한국의 목적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하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창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미·중 3자 전략회의의 가능성이다. 이 두 가지 제안은 통일 문제에 관한 보다 생산적인 협의의 장을 만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단히 신중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기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적 협력이 이루어지는 대부분

의 분야는 한국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향상된 기능적 협력의 목표는 관련 당사국들의 적대적 관계가 아닌 통합에 대한 공동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의 강화는 한국의 통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남한의 이익과 부합하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한국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일종의 기능적 협력을 남북관계에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명확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북한이 참여하는 전제조건은 비핵화가 될 것이다. 실행적 관점에서 보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후원하는 활동에 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환영 받을 것이며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협력의 장은 어떤 형태로든 동북아 국가 간의 실질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 다른 포럼으로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이 지역 안정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중 3자 포럼이다. 이 포럼이 창설된다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3개국의 합의의 정도가 미래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를 위한 가능성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포럼을 만들고 활용하는데 있어 주요 장애물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중국이 난처한 상황에서 이 포럼에 건설적인 참여가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끝으로 어떤 포럼이 궁극적으로 휴전에 종식을 고하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1990년 후반에 한국, 북한, 중국, 미국이 참여한 4자회담이 포럼의 형태로 있었으며, 이 분야



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목표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중국 대표(중국인민지원군), 미국 대표(유엔 총사령관), 그리고 북한 대표가 휴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한은 휴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최일선에서 남북한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결실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남북은 휴전협정을 대신하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현함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실천 약속이 전제되지 않는 한, 평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근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4자회담의 어떠한 파생 형태도 북한이 6자회담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재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남한은 지난 30여 년 간의 노력으로 성취해 낸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둔 공정한 경쟁, 자유에 대한 헌신이 그것이다. 남한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과제는 두 체제가 합쳐지는 과정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지해 나가는 일이다. 즉, 민주주의 체

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북한을 어떻게 새로운 체제에 편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투자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더불어 북한 주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악용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한국 내에서 소수자의 권리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일도 포함된다.

통일의 결과로 발생하는 분쟁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신뢰할 만한 법적·행정적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통일 후 성공적 프로세스 관리의 필수조건임은 분명하다

## II. 중국

### II. 중국-1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중국은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많은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유형의 비용으로는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식량, 무기, 석유, 비료 등의 원조비용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의 90%는 중국이 원조로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북한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원조 규모에 대한 자료는 찾기가 힘들다). 즉, 연간 원조 규모가 6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한반도의 분단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사상의 대립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은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산주의에 대한 서구의 인식을 생각할 때, 서구에서 이미 지 쇄신을 단행하려는 중국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 매년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탈북자들 중 일부는 중국에 정착하거나 또 일부는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향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중국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을 다시 북한정부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탈북자 문제 처리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셋째, 북한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주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또한 역내의 중국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북한이 심심치 않게 지하 핵실험을 하는 것도 문제다. 개인적으로 핵실험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대한' 원조는 중국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다. 많은 중국 국민들은 실제로 북한에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베트남에 대해서도 관대한 원조 정책을 펼친 적이 있으나 두 나라 간의 영토분쟁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이를 목격한 많은 중국 국민들은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에 의심을 품고 북한도 베트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중국이 민주주의의 국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것이라고 본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 통일한국은 자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중국이 더 이상 북한에 대규모 원조를 해 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일조한다면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어필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돕는다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부정적 통일효과는 군사와 정치 측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본다.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북한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즉,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에 대해 완충지대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 된다면 중국은 동북아에서 전략적 요충지를 잃는 셈이 되고 이는 중국의 군사적 방어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중국과 비교했을 때 독재주의나 전체주의에 훨씬 가깝다. 북한의 현재 상황은 중국의 50~60년대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

북한의 상황 악화는 중국 공산당이 잘못된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고 개혁·개방정책을 단행한 것과 대비됨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현명한 선택을 부각하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 된다는 것은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은 사상적인 동지를 잃게 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국내외로부터 민주화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인지,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인지는 누구 편에 서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세력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권력을 잃게 되는 위협을 의미하겠지만 중국 국민들에게는 진정한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단, 이러한 체제 변화가 심각한 사회 불안정이나 경제 불황을 야기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김정은과 그의 가족 또한 잠재적 문젯거리이다.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 된다면, 김 씨 일족은 중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중국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득과 실을 가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국경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중에는 불법적인 밀수도 있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경제적으로 더욱 부국이 된다면,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은 한층 강화 될 것이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체제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받게 될 두 가지 부정적 영향을 기술한 바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의한 안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 미군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철수해야 하고, (2)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폭 넓은 상호이해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한·중 간 외교관계 및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3) 중국 공산당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걸맞은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단행해야 한다.

세 번째 전제조건은 앞서 3번 질문에서 부정적 영향으로 언급한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도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렇다면 위 세 가지 전제조건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 (1)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이유 또한 없어지게 될 것이다.
- (2)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가 다르긴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해도 중국과 한국 간에 갈등이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재로서 한·중관계는 아주 가깝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순조로운 편이다.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비슷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직접투자(FDI)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제협력 면에서도 꽤 성과가 있다. 다각도로 살펴볼 때 심각한 군사적 갈등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이 군사적 방어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두 국가의 군사적 역할을 떠나서 세계 최대 인구나 거대한 영토를 보유한 중국의 국력을

생각했을 때 통일한국 또한 비슷한 위험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또한 동북아의 또 다른 주요세력인 러시아와도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역내 군사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세력균형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군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3) 중국의 정치 체제 개혁은 중국사회 전체의 염원이다. 지도부 또한 정치 체제 개혁에 힘을 쏟고 있으나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 중국 정치의 민주화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는 쉽다. 어쨌든 중국이 효과적으로 정치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모델로 삼아 부정부패 척결에 힘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만 역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예이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통일과정에 대해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 (1)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등도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 (2) 북한난민 문제이다. 한반도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완전히 흡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난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 붕괴로 인해 북한 주민이 난민이 된다면 그들은 중국 땅으로 들어오려 할 것이고 중국정부는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현재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를 내부적으로 안정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고도의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이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통일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엔(UN)과 같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을 방지하고 남북이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상호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면 남한이 북한의 군사력을 신속히 장악함으로써 흡수통일하는 것이 또 다른 한국전쟁의 발발을 지켜보는 것 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한반도 비핵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의도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핵 보유 사실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국의 이익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이들 국가 간에 직접적인 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과 동맹관계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북한이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중국과 북한은 1961년,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조·중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을 통해 중국과 북한은 아시아와 세계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호, 협력, 상호원조의 동맹관계를 확장·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sup>28)</sup> 다시 말해, 중국의 원조는 북한이 아시아의 평화를 해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이 조약의 합의사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8) <[http://www.marxists.org/subject/china/documents/china\\_dprk.htm](http://www.marxists.org/subject/china/documents/china_dprk.htm)>.

남한에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먼저, 북핵 회담을 위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북한 지도부 중에도 핵무기 개발에 대해 주변국과 의견을 같이 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주변국이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북한 지도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손잡고 북한 강경파를 점진적으로 설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셋째, 북한 지도부와의 직접적인 접촉 외에 일반 국민과의 접촉 기회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앞으로 북한의 정부관료가 될 북한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남한이나 다른 서구의 국가들도 북한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 정부관료들의 사상을 차츰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환 프로그램이 중·고등학생, 교사, 기업인,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폭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지도부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북한과 남한이 아직은 서로 민감한 관계여서 교환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그 시작을 중국에서 하는 것은 어떻까 생각한다. 아니면, 남한이 중국과 함께 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 하는 동아시아의 협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협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국은 6자회담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6자회담을 개최하고 중개하는 데에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6자회담의 유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회담 목적의 큰 틀 안에서 세부적, 구체적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6자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논의에서 줄곧 대립각을 세웠으며 이로 인해 양국 간에는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개선된다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통일한국은 화해, 포용, 상호관용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북한을 동독과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서독과 동독의 통일로부터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되어 홍콩특별행정구가 된 홍콩과 중국의 '애중'관계, 그리고 불만이 거듭되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통일이 된다면 많은 북한 주민들은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찾아 남한으

로 밀려 내려갈 것이고 일시적인 경제 불황, 더 나아가 사회 불안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남한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당연히 사회 각계각층은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극단주의자들은 재분단을 주장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분리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통일로 인한 잠재적 경제 불안에 대비하고 남북 간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II. 중국-2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중국은 상당한 분단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전쟁 발발의 위협과 한·미 군사동맹으로 인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 지역 내에서 군사력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누구보다도 한국전쟁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 국가이다. 하지만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 없으므로 중국과 한반도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에 15만 명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한국전쟁 발발 이후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에게 중국은 유일무이한 중요한 지원국으로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독자적 노선으로 비난받고 있는 정권(북한은 '악의 축'이라 불리고 있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을 비난하기는커녕 여전히 북한의 편에서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중과 정치지

도자들은 격노했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셋째, 중국은 북한정권 붕괴나 핵무기 위협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독재 정치 체제와 빈번한 기근,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북한정권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정권이 당장 붕괴할 조짐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정권 붕괴가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북한정권 붕괴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례 없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동북지역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보유 야망으로 인해 양국 간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랜 동맹이었던 양국 사이에 긴장과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다.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은혜를 모르는 북한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핵무기로 중국을 위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과의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 북한을 원조하는 데(식량, 연료 등) 들어가는 비용은 금액화 할 수 있는 유형의 비용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 훼손, 남한과의 관계 악화는 무형의 비용으로 볼 수 있겠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북한의 빈곤 문제는 심각하다. 만약 북한이 경제개혁에 나선다면 북한은 중국 자본의 관촬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데다 정치적 위험요소까지 고려한다면 투자처로서 북한의 매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양국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있다고는 하나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중국과 북한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학생, 교사, 과학자, 예술가 등의 교류가 거의 없다. 어쩌면 중국 지도부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중국 국민들에게는 거의 숨기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양국의 국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서로의 우호관계는 유명과 같은 우호관계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 양국의 우호관계는 역사적, 지정학적 필요에 의해 양국의 지도부 차원에서만 유지되어 왔을 뿐 중국 국민들에게는 거의 존재감이 없다. 하지만 대중의 참여와 지지가 없는 유명 같은 우호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반도 통일로 인한 중국의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미군의 개입이 없는 한반도 통일과 미군 관여가 확대되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미군 개입이 유효한 상태에서의 한반도 통일이다.

첫 번째의 경우라면 중국은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된다. 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음으로써 군사적 위협이 훨씬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국경에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 또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에 우호적인 통일한국이 수립된다면 중국 동북지역 국경은 결정적 이점을 보장하는 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라면 중국에게는 아마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친미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중국은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확충해야만 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에게 있어서 통일한국이 가지는 잠재력은 엄청나다.

한국은 현재 세계 14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2012년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통일 이후의 통합비용도 만만치 않겠지만 통일한국이 세계 10위 이상의 경제규모로 발전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구가 2천 5백만 이상 늘어나고 영토 크기도 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역 상대국으로서 통일한국과 중국의 상호 간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과는 관계가 냉랭하다.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다면 중국과 통일한국 사이에 정치·군사적인 관계 냉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라 하더라도 중국과 한반도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는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동북지역에서 국경무역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중국이 통일한국과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상적인 관계란 경제, 교육, 문화적 교류가 양국 국민 사이에 정상적으로 이루지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이 된다면 양국 국민 사이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급격히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가, 학생, 관광객, 과학자, 예술가들이 양국을 오가게 될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정적 통일효과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경우에 발생한다.

통일한국에 민족주의적 흐름이 고조된다면 이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국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는 과거 수백 년 동안 중국 조공 체계의 일원으로 중국 황제의 영향을 받았다. 청대에는 조선 주재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교섭통상사의’를 파견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점령한 적은 없다. 지역민들의 반발 때문이기도 했고 조공을 받는 국가로서의 자존심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데 대한 한국인들의 분노의 감정은 뿌리 깊은 듯하다.

베트남의 예를 통해 통일한국이 더욱 반중감정을 가지게 될 수도 있

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베트남도 오랫동안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국가였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베트남을 중국에 복속시키려는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당연히 베트남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 깊은 불신과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은 그야말로 앙숙이 되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호치민(Ho Chi Minh/胡志明)은 “남은 일생 동안 중국인의 배설물을 먹느니 5년 동안 프랑스인의 배설물 냄새를 맡는 게 낫다. … 중국이 베트남을 지배한 것이 무려 1000년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지리적 접근성과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국은 그들에게 달갑지 않은,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한국도 중국에 대해 극도로 민족주의적인 태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중국과 한국의 국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한국은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외국세력을 끌어들이 수도 있다. 이미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이 이 동맹관계를 지속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통일한국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허용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진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한국 현지에서 위법 행위를 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날로 더해 가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한·미 군사동맹관계는 계속 유지되겠지만, 군사동맹관계는 유지한 채 주한미군만 철수시켜도 중국에게는 좀 더 나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통일 이후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때문에 경제성장이 더뎠을 수는 있겠지만 통일한국이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경제적 역량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통일한국의 경제적 역량 신장은 곧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확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너지, 원자재, 타깃(target)시장 등을 놓고 양국의 경쟁이 심화되어 무역 갈등, 나아가 잠재적 경제협력 관계 불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잠재적 문제점은 국경지역에서 양국 국민의 유입과 유출이다. 민주주의 통일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꽤 매력적인 삶의 터전일 수 있다. 특히,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인들은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라도 한국 땅으로 들어가려 할 것이다. 한편, 통일 초기에는 가난으로 굶주린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양국 국민의 국경 이탈은 중국과 통일한국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유지되고 중국이 계속해서 독재 정치 체제로 비취지는 한 동북아의 안보 문제는 통일 후에도 여전히 딜레마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한국은 중국에 근접한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인도도 민주주의 국가이

긴 하지만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에 가로막혀 있고,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중국이 파키스탄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어 인도와 중국 민간인 사이에 교류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과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이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한국과는 문화, 교육 분야에서 교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거기다 한·미 동맹까지 생각한다면 중국 지도부가 정치·안보 면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통일 후에는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같은 국가가 중국에 대해 '화평연변(和平演變)'(평화적 수단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것) 전략을 실시하는데 한반도 통일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중국은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의 정치·안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한국과 미국정부가 중국정부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한·미 군사동맹의 종료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중국을 강대국이면서 독재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한·미 군사동맹이 종료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 북한, 한국, 미국 등이 모두 관여할 것이다. 넓게 본다면 국제사회 전체의 합치된 의견이 있어야 한다.

북한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정권이 내분을 겪게 될지에 관한 문제이다. 사회, 경제적 불안과 지도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내분이 일어난다면 지도부는 휘청거리게 될 것이고 전국 선거를 통한 평화적 권력 이양에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한정권 붕괴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북한 정부 지도자들 중에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통일을 통해서라도 정치 체제를 개혁하려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와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0년 이상 지났지만 한국전쟁은 여전히 중국의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마치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중국의 새 지도부가 한국전쟁에 대한 재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궁극적으로는 마오쩌둥(毛澤東)이 남긴 사상에 대한 재평가까지 줄줄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범한 새 지도부도 한국전쟁을 단순한 전쟁으로 재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비핵화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 또는 전제조건이라는 진술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국가의 국익에 반하지 않으려면 한반도 비핵화가 최선이지만 북한정권이 이미 핵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중국의 일부 외교 분석가들은 6자회담이나 양자 회담, 3자회담을 포함한 앞으로의 회담에서는 북한을 사실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무장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 특히 중국이 북한의 계속적인 핵 보유 의지를 꺾기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실시한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 한·미 군사동맹에 의한 안보 위협, 북한정권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 또는 2차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심한 압박을 가하기를 꺼리고

있다. 한·중관계 정상화 등으로 인해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북한이 지녔던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핵을 보유한 북한보다 한·미동맹이다.

일시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존재할 수는 있다. 북한은 핵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대적인 정치·경제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논리에 의하면(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한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참조) 핵을 보유한 북한이 오히려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에 무력으로 비핵화 압박을 가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비핵화가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필수조건이라는 주장은 시기상조이다. 한편, 북한을 비핵화 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력으로 공격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한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햇볕정책, 대북원조를 추진하는 등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에서 원조를 받은 후에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다. 수차례의 핵실험, 2010년과 같은 도발행위는 남한에 설상가상의 모욕을 안겨주고 있다. 그로 인해 남한의 정치적 분위기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해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히 남한이다. 빈곤에 찌든 북한은 이미 잃을 것이 없지만 풍요를 누리고 있는 남한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경우 북한 지도자들은 권력을 잃게 되지만 남한의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남한의 지도자들은 통일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을 한반도 통일의 조력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중 간 경제협력 관계가 활성화 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거나 한·미동맹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국정부는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역내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음을 선전하고 있다. 중국이 6자회담을 적극 지지했던 원래 이유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2003년, 6자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었을 때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6자회담 재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은 양자회담보다는 다자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다루기 원했다. 그 이유는 (1)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에는 다자 체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했고, (2) 북한과 일대일 대면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랜 동맹국을 나서서 압박하는 것이 큰 부담이었으므로 두 번째 이유가 중국으로서는 특히 중요한 이유였다.

2009년 이후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중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회담 재개를 종용하고 있으나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 환경 변화로 인해 양국이 제시하는 6자회담 개최의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방중 당시 중국 지도부는 6자회담 재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회담 또는 3자회담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고집해 오던 6자회담 방식을 포기하고 앞으로는 북한 문제를 미·중 양자회담 또는 한·미·중 3자회담에서 다루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6자회담과 같은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참가국들 간에 목표와 접근방식이 제대로 조율되어야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회담의 목표는 비핵화로 비교적 명확해졌으나 아직 접근방식의 조율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제재 조치를 꺼리고 있고, 한국은 남북 간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회담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목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질문은 한국 고유의 독특한 가치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한국 특유의 가치가 너무 한국적이기만 하다면 보편성을 결여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가치 체계가 보편적이기만 하다면 어느 한 국가의 고유한 가치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본보기로 삼고 싶어 할 만큼 정치적,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이 시장 경제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어가는 것이 어찌면 모두가 바라는 바임과 동시에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다. 덧붙여, 세계 최강의 민주주의 국가와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면 통일한국으로서는 다른 체제로의 전향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통일한국이 동북아 지역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역할을 자처한다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일당독재 체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진술하였듯이 인접한 곳에 민주주의 국가가 있다는 것은 중국정부에 잠재적 난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한국은 중국과 긴장관계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지역을 벗어난 곳에 민주주의를 전파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이 타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더욱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즉, 아세안(ASEAN)이나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돕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가난에 허덕이는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는 힘들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전 궤도에 오른 후에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 한국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는 대열에 합류할 때가 되었다.

위에서 진술한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영향력을 세계로 확대시키기 위한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라는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글로벌 코리아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 그 영향력은 특히 두드러진다. 예전에는 도쿄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서울이다. 한국이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통일을 이룬다면 과학 기술, 패션 등 산업 분야에서 놀라운 에너지를 발휘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강국으로서 국제적 영향력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 II. 중국-3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분단상태는 중국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중국으로 하여금 아래의 분단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 - 군사·안보적 측면

- (1) 1950년 한반도에 무력통일을 시도하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국은 지원군을 파견하여 붕괴 직전의 북한을 구하고 미국 지도 하의 유엔군을 격퇴시켜야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40만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
- (2) 한국전쟁으로 인해 중국대륙은 대만을 해방시키고 통일중국을 이룩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
- (3) 한국전쟁 이후 중국은 북한의 편에 서서 38선을 기준으로 한미와 장기간 대립했다. 1961년, 북중조약이 체결되어 실질적인 법적 동맹을 맺게 됨으로써 중국은 북한 안보에 있어 조약 이행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 (4)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심각한 반대를 겪었다. 한중수교는 북중관계를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악화시켰다.

- (5) 한반도 분열로 남북은 서로 대치상태에 있으며 남북 사이에 어떠한 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중국은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 (6) 북한이 생존 도모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여 중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켰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중국은 상당한 외교자원을 투입하여 6자회담을 소집해야 한다.
- (7) 북한이 여러 차례의 위성 실험, 핵실험을 진행하자 북한 제재 문제에서 중국은 한미와 대립된 입장을 표명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보호자로 여겨졌다.
- (8) 한반도의 분단과 이를 뒤따르는 북한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에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 중국과 다른 관련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 (1) 북중 간의 전통적인 특수관계로 인해 중국은 원유와 식량을 포함한 대규모 대북원조를 해야 한다.
- (2) 한국은 북중 경제관계 발전에 의구심을 표명하며 중국이 북한 자원을 모두 탕진하고 북한을 동북지역 4번째 성으로 만들 것을 염려한다.
- (3) 북한정부의 강압정책과 경제적 빈곤함으로 인해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다시 한국 등 다른 국가로 이탈하는 주민이 생겼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사회가 관심 갖는 인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중국정부가 일부 탈북자를 붙잡아 복송한 일은 한국 국민과 타국의 인권 활동가의 비난을 받았다.

- (4) 한반도 분열이 야기한 한반도 내지 동북아 지역의 안보 갈등과 충돌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공동체 구축 과정이 동남아 지역에 비해 속도가 느리다.
- (5) 한중 국민들이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 양국 국민의 정서적 대립이 발생하여 양측의 역사, 문화 등의 영역에서 논쟁이 심화되었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한반도 통일은 냉전이 동북아에 남긴 최대의 냉전 잔여물을 없애고 중국에게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 군사·안보적 측면

- (1) 한반도 통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주요 전쟁 및 충돌 발원지가 사라지고 중국 등 역내 국가는 한반도 분열로 인한 전쟁 혹은 충돌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지역의 군사 경쟁을 완화하는데 좋은 여건이 조성된다.
- (2) 한반도 통일은 남북 간의 대립과 대치로 인해 발생되던 갈등과 충돌을 없애 중국이 남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북중이 1961년에 체결한 수호조약은 역사적 사명을 완성하고 중국이 한반도 안전을 위해 짊어진 책임 역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 (3) 한반도 통일은 한·중 간, 미·중 간 주요 마찰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중국과 관련국 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일조하게 된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 (1) 통일 후 한반도의 재건과정과 과도기에 중국 기업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게 되어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다.
- (2) 통일한국의 경제력은 강화되고 시장도 더욱 커져서 한·중 간의 무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 (3)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아 지역의 공동체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한·중과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는 넓어질 것이고 북한의 방해가 없는 상황에서 북쪽으로는 러시아, 몽골과도 확대·연결될 수 있다.
- (4) 한반도 통일로 인해 한·중 국민정서를 악화시키던 남북 갈등과 충돌이 해소되고 한·중관계의 발전 역시 외부의 부정적인 방해를 적게 받게 됨으로 양국의 교류 기반이 탄탄해진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온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주는 영향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 색채가 짙으며 아래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첫째, 한반도 통일 이후 한·중관계이다. 중국에 우호적인 한국정부는 통일 이후 중국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반대일 경우 효과는 반대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 이후 미·중관계이다. 미·중관계는 중대한 문제로 중국의 외교정책을 좌우한다. 만약 미·중관계가 평화와 협력적인 상태라면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에게 끼치는 긍정적 효과는 커지겠지만 미·중관계가 불안과 경쟁적인 태세라면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주는 부정적 효과가 커질 것이다.

셋째, 통일 이후 한·미관계이다. 한·미는 전통적인 군사동맹국이지만 이러한 관계는 중국의 의혹과 불만을 샀었다. 통일 후 한국이 미국과 이전의 동맹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비동맹 중립국으로 탈바꿈할지는 중국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자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끼치는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며 후자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다.

한국 주도 하의 한반도 통일 및 통일 이후 미국과의 군사동맹관계 유지가 만약 미·중관계, 한·중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중국에게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 군사·안보적 측면

- (1) 중국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통일한국은 중국 동북지역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7천만이 넘는 인구와 강대한 정규 군사력을 지니고 어찌면 북한이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이어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 통일한국이 서양의 민주주의 체제를 시행함으로써 중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 (2) 통일한국이 미국과 안보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중국은 항미원조(抗米援朝)를 통해 얻었던 안보적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중국에게 우호적인 이웃나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군사력이 직접적으로 중국 영토에 위협을 가할 수는 없다. 만약 한국이 미군의 주둔을 계속 허락하고 미국의 한반도 내 최첨단 제어, 공격 및 방어 군사 시스템 구축을 허락한다면 중국의 국가안보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 (3) 중국에게 우호적이지 못한 통일한국은 일본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미국 주도 하의 한·미·일 3국 군사동맹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 (1) 중국과 한미 등 국가의 안보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중국과 해당국들의 경제교류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발전에 방해가 될 것이다.
- (2)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경쟁으로 인해 역내에 새로운 냉전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국민정서에 대립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에 중국이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 (3) 새로운 냉전은 중국과 다른 국가 간의 사회·문화교류를 가로막는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선결조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반도 통일은 내부 충돌, 소란, 대규모 망명자 발생 및 외부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평화롭고 질서정연하게 완성되어야 한다.

둘째, 다음의 기본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 중국에 우호적
- 비동맹 중립국
- 비핵화

셋째, 미국 등 국가가 중국이 제시한 첫 번째 요구사항을 지지 혹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가져오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 대책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선결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 시작에 앞서 관련국과의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모색해야 한다. 이 회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있어 공통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 한반도 통일 원칙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이며 순차적이어야 한다.
- 남북한 국민들이 통일한국의 주인이며, 국제사회는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 남북한 국민들은 민주, 평화 및 화해의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존중을 토대로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갈등 및 충돌을 해결해야

한다.

- 남북한 국민의 요청과 허락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는 외교, 재정 지원과 안보 지지 등 부분에서 한반도 통일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 선결조건 실현을 위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 시작에 앞서 관련국과의 다자간 국제회의 개최를 모색하고 통일한국의 국가 지위와 국가 성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중국에게 있어 통일한국의 비핵화, 중립적 지위는 중국이 다자간 국제회의를 통해 달성해야 할 가장 중요한 외교적 목표이다.

통일 후 한반도가 중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중 양자협의를 기반으로 양국이 관심 있는 의제에서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서 얻었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통일 후 중국에게 노동과 자본을 이전처럼 개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선결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과 양자협의를 모색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은 통일한국의 지위와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 측에 중국이 한반도에서 배타적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한반도 내정불간섭 및 통일한국과 미국의 관계 발전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약속과 한미 군사동맹 포기를 얻어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한·미 군사동맹관계 포기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최소한 외교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 혹은 중국 근해에서 통일한국과 미국 간 군사훈련 진행을 저지해야 한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중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은 평화적, 점진적, 순차적 통일이다. ‘평화적’이란 군사 충돌, 내전과 무력 압박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점진적’이란 한 걸음씩 발전하고 과격하거나 반복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순차적’이란 일의 경중과 완급을 조절하여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과정을 추진하여 분쟁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 통일과정에서 큰 혼란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며, 한국정부가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세를 통제하고, 대규모 인도주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며, 한반도 내란이 중국 국내까지 퍼져 중국에 자체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 (2) 한반도 통일과정 중 대규모 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규모의 난민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몰려든다면 중국정부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 치안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 (3) 북한의 시설,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효과적인 통제해야 한다. 북한의 핵시설과 중국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우므로 북한 핵시설의 안전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분실 예방은 중국정부와 국제사회가 각별히 주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 (4)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정부는 북한에 있는 중국 국민과 중국 투

자기기업의 신변 및 재산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은 북한 최대의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의 투자자이며 중국 투자기업은 북한에서 폭 넓은 경영관리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갖고 있다. 중국 국민과 중국 투자기업 자산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정부의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한반도 과도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통일한국 재건과정 속에서 중국 투자기업의 참여를 위한 정책적, 외교적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만약 통제력을 잃는다든지 혹은 대규모 인도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외부 개입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중국을 적대하는 세력의 개입을 막아야 하며 중국의 이해와 동의 하에서 중국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만 개입하도록 힘써야 한다. 가능하다면 중국도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로서 통일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북핵 문제는 이미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 안보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보장받을 수 없다. 이에 북한의 핵 포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게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 (1)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시종일관 대(對)한반도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 (2) 다자 체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즉, 6자회담 내지는 관련된 보조적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해관계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3) 북한에 적절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유엔 안보리(UNSC) 제재 결의의 실행과 적절한 행위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여 북한의 핵 계획을 포기시켜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기타 이해관계국을 설득하여 북한에 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핵 포기 촉구를 위해 6자회담 관련국이 북한에게 안전 관련 약속을 해주는 것, 북한의 위성을 다른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기반으로 대리 발사를 해주는 것, 북한이 실제로 핵을 포기할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떠한 원칙과 절차로 해소할지 논의하는 것 등이다.
- (4) 6자회담이 북핵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중국은 회원국 간의 조속한 회담 재개를 성사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고 수호해야 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 (1) 한국은 외교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 수단인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 만약 유효 수단이라 여겨지지 않는다면 한국은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모든 외교적 노력이 그저 모양새만 내는 걸로 전락할 것이다. 한국은 아래와 같은 생각들을 기반으로 외교수단을 효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떠한 회담도 헛수고이다.

나. 현재 유엔 안보리(UNSC)의 대북제재는 이미 북한의 생존을 위협하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한국은 외교수단을 통해 이러한 제재를 없앨 계획이 없다.

- (2) 만약 한국이 외교를 유효수단이라고 여긴다면 한국은 다음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가. 한국은 장시간의 전략적 인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북한은 핵 포기를 함으로 더 많은 희생 기회를 잡아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나. 한국은 북한이 실질적 양보를 할 경우 유엔 안보리(UNSC) 대북 제재 조치의 점진적 해소를 포함한 외교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다. 한국은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한 상황을 인정해야 할 수도 있다.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 등 서구와의 관계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다.



- (3) 한국이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잘 대응할 수 있다면, 한국은 적합한 외교적 노력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동북아 지역합의체는 한반도 정전협정, 6자회담, 한·미동맹 등이 있다.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60년이 흘렀다. 남북 간의 군사 마찰과 소규모 충돌이 자주 발생하기는 했지만, 한반도는 지난 60년 간 평화를 지켜왔으며, 전쟁 발발 역시 잘 억지해 왔다(전쟁은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는 군사충돌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은 꽤 오랜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임시 정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조약으로 전환하자고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건의에는 미국과의 직접적 회담 및 양국의 외교적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긴장국면을 보아 영구적 평화조약을 맺고 이를 계기 삼아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킴으로 북한 핵 포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외교활동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의 태도는 비교적 소극적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미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협박한 이후 미국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고, 영구적 평화 체

제와 북한 핵 포기를 구분하여 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북·미 협정이 실패한 후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0년간의 험난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설득한다는 6자회담의 초기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은 2006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번의 핵 실험을 감행했고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다. 2006년,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한 후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만류하는 것에서 핵 포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6자회담이 재개된 이후에도 여전히 앞날이 걱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6자회담이 북한 비핵화 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본 회담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유효성과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본 회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 (2)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시간끌기를 한다는 추측을 입증하였다. 이에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한다 할지라도 동기와 진실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북한과 다른 국가들 간의 상호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것 역시 더 많은 시간과 구체적인 행동을 필요로 할 것이다.
- (3)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북한 핵 보유를 방지하는 것보다 어렵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목표를 이루고자 하면 난이도는 훨씬 높을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관계는 한국 측에 안보적 후원, 경제적 원조, 정치적 모델 및 핵 확산 방지라는 이익을 주었다. 군사력이 강한 북한을 대응

하는데 있어 한·미동맹은 한국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주도 하의 한반도 통일 역시 미국의 결정적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한·미동맹은 약화는커녕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강화될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만약 미·중관계가 안정적이고 평화롭다면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중관계가 꺾끄럽고 갈등이 첨예할 경우 한·미동맹은 중국의 의혹과 불만을 심화시킴으로 한·중관계를 소원하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이후 사실로 증명되었다. 그 외에 미국 주도 하의 한·미·일 3자 안보관계 역시 중국의 의혹과 반대를 야기할 것이다. 독도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인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통일 이후 한국은 어떠한 저항을 받더라도 안보적 비동맹 중립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국가 간섭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자주, 개방, 호혜의 이념을 추구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

의로 인한 일시적 혼란과 효율성 저하도 발생하겠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통일 후 한국의 이상적인 상황은 경제적으로 점차 번영하여 동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무역과 금융의 주축이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단결하여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모델이 되며, 안보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분쟁 없는 평화로운 비동맹의 모범이 되고, 외교적으로 대·소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 II. 중국-4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한반도 분단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첫째, 한반도 남북의 긴장관계는 군사 충돌의 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중국은 변방 안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둘째, 북한의 핵 보유와 선군정치는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시키고 한국이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선제공격을 취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야기하고 중국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오랫동안 한국에 주둔해왔고 한·일과 빈번한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여 중국의 안보에 압박을 가했다. 넷째, 한반도의 분열은 동북아 지역에 냉전의 잔여물을 남김으로써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 국가 간의 불신, 심지어는 대치 상황을 조성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보 협력 발전을 가로막아 역내 다자 안보 체제 구축을 방해하였다.

한반도 분단이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첫째, 한반도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만약 긴급사태로 인해 수많은 난민이 발생한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이 경제개혁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

므로 중국의 대북 투자와 무역의 발전이 제한을 받게 된다. 셋째,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중국 동북지역을 지나 한반도로 이어지는 태평양의 육지와 해상을 잇는 통로를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어 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등의 영역에서 지역적 경제협력에 방해가 된다. 넷째, 북한의 안보적 불안감으로 인해 거대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중국 동북지역의 주요 바다와 항구가 안전상의 위협에 직면한다. 다섯째, 중국 동북지역 등지에서 유랑하는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잠재된 사회 불안의 요인이 된다. 여섯째,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함에 따라 중국의 대북원조가 국제사회와 국내의 거센 비난을 받아 중국 외교는 점점 더 심각한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중국은 한반도의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통일 실현을 지지한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한국이 인도주의적 대북원조와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 및 사회적 교류를 점차 확대하여 양자 간 화해와 융합을 촉진시키고 한반도의 경제 단일화를 우선 실현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평화통일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과 남북한이 함께 구축한 지역적 다자 안보 체제와 다자 경제협력 체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지역 평화와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다자 안보 체제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다자 경제협력 체제에는 대북원조와 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유엔의 관련 절차를 밟아 국제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 중국 주변 최대의 안보 위협 요소가 해소되어 주변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둘째, 통일은 한반도 남북 경제의 공동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통일 후 한반도 총인구는 독일 규모와 비슷한 7천만 가량에 달할 것이며 더욱 큰 시장이 형성되어 지역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가 안정되면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며, 해륙교통과 자원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발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넷째, 한반도 통일 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의 존재와 군사동맹은 이전과는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미국은 중대한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대비는 중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 다섯째, 통일 후 한반도는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 더욱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미·중 간의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중국의 전략 이익에 더욱 부합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통일 후 한반도의 경제·안보 역량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역사인식, 영토 문제 등 부분에서 중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지만 전쟁 혹은 외부 간섭 형식을 통해 통일이 강행되는 것은 반대한다. 무력통일은 중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수많은 난민이 중국 국경에 몰려들 경우 중국 동북지역의 사회 안정과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이다. 무력통일은 북한이 핵물질과 핵기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핵 확산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통일과정에서 미국이 군사개입을 한다면 미군은 38선 이북 지역에 주둔하여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국에 큰 위협을 가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가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거나 미군과의 군사 협력을 한 단계 강화하여 한·미 군사 일체화를 강화시키고 미사일 방어 체제를 확대·배치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증강하고 심지어 미국의 요구 하에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향상시켜 지리적 적용범위를 확장한다면 이는 필히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한반도는 미국의 제약을 받게 되어 외교, 안보 등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

통일 후의 한반도는 민족 자존심이 높아져 새로운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 한반도는 역사인식, 영토와 해양 경계선 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민족주의는 갈등과 대립을 가중시켜 양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민족주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양국 국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나아가 양국의 경제와 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남북 양측은 평화통일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정치관계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제 영역의 교류협력과 단일화를 추진하여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측은 적절한 시기에 정치 협상을 열어 한반도 평화 협의를 보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순차적인 평화통일을 진전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 양측은 관련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힘쓰고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비핵국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는 적대적 대립 대신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한 약속을 하고 실천해야 한다. 북한은 선군정치 노선을 조정하여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단행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벗어나야 하며, 경제발전을 통해 사회질서를 안정시켜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관련국들은 함께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써 최종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미군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국이 위에서 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힘쓰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개입 수단을 용인하지 않는다. 중국은 앞으로 계속 북한의 경제개혁과 민생개선을 지원하겠지만, 핵무기나 지역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북한이 평화와 발전의 길을 걷도록 설득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한반도 평화와 화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간의 오해와 오판을 방지할 것이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한 한반도 통일과정은 남북이 정치적 합의, 경제협력을 통해 정부와 민간 사이에 호혜적 영향을 주고 화해하며, 남북 경제의 순차적인 융합과 건강한 발전을 이룩하여, 최종적으로 국제법과 유엔의 관련 원칙 및 절차에 따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외부의 무력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이다. 국제 문제는 평화협상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국이 일관적으로 견지하는 외교 원칙이다. 중국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 중국은 내정간섭과 군사

간섭을 반대하며 다른 국가가 중국의 대문 앞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동북아 지역 외 국가가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냉전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의 내부 문제이지 특정 이데올로기 확장의 결과나 특정 군사력의 지역적 전략이 확장된 결과가 아니다. 통일 후 한반도는 자주적이고 중립적이며 비핵국가여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중국과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최함으로써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비록 6자 회담이 현재까지도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회담은 각국의 입장과 이익을 이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회담을 통해 각국은 비핵화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했고 다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더욱 확고하게 약속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UNSC)의 관련 문제에 대한 토

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제재하는 4개의 안보리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비핵화, 핵 확산 방지 등의 문제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입장을 같이 했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국과 북·미대화, 6자회담 등 각종 형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남북의 화해를 지지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격려하고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유엔(UN) 등 국제 체제를 통해 관련국과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여 국제법 틀 안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진할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이전처럼 무력행사나 무력도발을 반대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화해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핵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시기적절한 인도주의적 대북원조를 재개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한국 국내에는 대북정책에 있어 아직 중요한 의견차이가 존재하므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 합의를 도출하고 극단적이고 과격한 주장들은 피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대화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6자회담은 개최 이래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효과적으로 보증하였으

며 각국의 대화협상 참여를 위한 중요한 발판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북한의 핵 포기 부분에서는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우선 핵무기 개발은 북한이 자국의 내정 및 외교적 필요에 의해 내린 결정이므로 외부의 설득이나 압력으로는 쉽게 북한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둘째, 6자회담에서 각국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유지 등 원론적 부분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지만 미국은 핵 확산 문제에, 일본은 납치 문제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했고, 북한은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였다. 셋째, 6자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미국과 중국이 정책적 협조를 전개할 의향은 있지만 현재까지도 북핵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보 이익으로 고려하지 않아 진전에 한계가 있었다. 넷째, 지금까지 6자회담의 진전은 북·미대화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남북 대화와 화해는 더 큰 진전이 없었다.

6자회담 혹은 기타 동북아 안보 체제의 효율을 높이려면 각국의, 특히, 미국과 북한의 더 명확한 정치적 약속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가 더욱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한·미·중의 더욱 효과적인 교류와 협조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감독 체제와 보상 및 제재 대책을 마련하고 인도주의적 대북원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UNSC)의 관련 제재 결의를 집행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핵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국들은 군사훈련, 무력도발, 무력위협 등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줄이고 자제해야 한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통일한국은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자주적이고 개방된 국가여야 하며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지역질서를 추구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국제적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신흥국가로서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경제협력, 지역안보, 역사인식, 영토분쟁, 환경보호, 식품안전, 해상안전 등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지역적 측면에서 동북아는 여전히 효율적인 다자 안보 체제가 부재하고 경제 단일화 과정 역시 유럽과 미국에 비해 뒤쳐질 것이므로 통일한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동북아 안보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한국에게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자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역내의 새로운 국제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비핵화의 목표가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다. 이로써 인류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하는 중요한 모범사례가 되어 다른 국가와 지역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선례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도 동북아 지

역의 교류와 융합을 이룰 것이다. 현재 한국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외정책, 그리고 국제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문화,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통일한국은 동북아 문화 공동체 건설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분열구조를 종식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 안보 공동체, 그리고 문화 공동체를 향한 밝은 장래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 II. 중국-5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분단상태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서해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고 중국이 안보에 주력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신(新)중국 성립 이후 중국이 참전한 몇 차례의 전쟁 중에서 한국전쟁은 가장 중요하고 30여 만 명이라는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쟁이다. 냉전 중의 한국과 북한의 무장 대립 및 충돌은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은 극도로 민감한 당사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은 연속해서 강도 높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고 미군 항공모함이 서해 해역까지도 진출할 것임을 표명했다. 미군의 공격 범위는 처음으로 현실화되어 직접적으로 북경과 천진 등 중국 내륙과 심장부를 위협했고 중국은 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었다. 중국은 주변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추구했지만 매번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한반도의 예기치 못한 충돌로 인해 좌절되었고 그 근본적 원인은 한반도 분단에 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 동북지역은 중국의 중공업 기지이다.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동북지역은 발전이 부진하다. 그 배경 역시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와 평화의 부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지역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이라는 전략적 호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상태는 중국 동북지역에 큰 불확실성을 조성해 중국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를 주저할 뿐 아니라, 국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동북아 정세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것이 중국 동북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원인이다. 정치의 불확실성은 동북지역 발전의 최대 장애물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동북지역의 조선족 사회 또한 한반도 분단이 발생시킨 비교적 큰 문제이다. 한반도의 남북 간 발전 격차로 인해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는 동북지역 조선족 사회의 공동화(空洞化)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양극 현상, 대규모 조선족 인재 유출을 야기해 동북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분단으로 한국과 북한은 서로 중국 조선족을 쟁취하려 경쟁하고 조선족은 모국과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언어와 문화적으로 한국이나 북한과는 또 다른 중국식 조선족 문화가 생성됐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 통일이 실현될 경우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친근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국 동북지역의 군사·안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정과 평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로 한국은 인구 8천만에 육박하는 중진국이 될 것이다. 즉,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가진 경제 허브(hub)가 탄생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향후 동북아 지역을 안보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동아시아 발전을 추진하는 주된 사고방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형성은 중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불안정한 원인으로 분단국가의 존재, 내부적 민족 분열을 들 수 있다. 통일한국은 안정된 민족사회를 형성하고 국가 간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향후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동시에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도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가 설립되면 단일한 한국문화

를 이룩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는 중화문명, 한반도 문명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명이 공존하며 공동 번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문화와 한국문화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통합을 통해 동북아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할 가능성이 높는데 통일이 되면 미군은 현재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까지 진출할 것이고, 이는 중국이 수백 년에 걸쳐 전쟁을 불사하며 지켜왔던 전략적 완충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이자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나갈지는 알 수 없다. 만약 통일 후의 한반도에 반화(反華)적이고 중국에 비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중국 동북지역의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과정이 비평화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에 심각한 소란과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중국의 안보 또한 위협받을 것이므로 이는 중국이 현재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 인구와 지리적 장점에 한국의 선진기술이 더해져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이 벌어지게 되면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고 중국과 한국의 동질적인 경쟁구도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과 한국은 산업의 동질성 정도가 매우 높고 현재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산업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의 이러한 우세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한반도의 ‘반도’로서 지리적 이점까지 더해져 운송과 물류 방면에서 중국은 경쟁력을 잃고 결국 중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8천만 단일 민족을 형성할 것이다. 중국 역사 상 강대한 모국(母國)을 가진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하지 못했다. 만약 모국과 중국 사이에 경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소수민족이 강력한 불안정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조선족 사회는 중국 내의 비교적 안정적인 소수민족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통일 이후에 신장이나 티베트처럼 소란의 근원지가 될지, 현재의 안정상태를 유지할 지는 보장할 수 없다.

문화적 측면에서 8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는 더 이상 소국(小國)이 아닌 대국(大國)이다. 지금의 일본처럼 1억 인구를 가지고도 경제강국이 될 수 있으므로 통일 후 한국은 당연히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다.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는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 3가지의 뿌리는 같지만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뿌리가 같은 문화는 일련의 방법을 통해서 항상 근원이 되는

문화(여기서는 중국문화)와 강한 이질감 내지는 특수성을 형성하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문화 간의 심리적 요인이 문화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한다. 뿌리가 같은 문화끼리의 이질성은 민족 간의 심리적 거리를 넓히고 동아시아 민족의 체면을 중시하는 특성까지 더해져 종종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어 발생하는 충돌을 증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충돌의 결과 또한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렵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통일효과를 제거하는 전제조건이나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현재 한·중관계에서 출발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통일 후의 한국이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고 미군이나 외세가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설령, 외국 군대가 주둔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외국 군대의 주둔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과정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

만약 한·중이 같은 문화적 근원을 바탕으로 문화 및 민족 문제를 모두 해소할 수 있다면 안보 문제가 양측의 주요 문제가 될 것이다. 안보 문제는 한·중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 해왔고, 서로의 통일이 상대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적대국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과 같은 외부 세력이 존재하면 중국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세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첫째, 문화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자문화권의 교류와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양측 모두가 협의를 통해 다방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경제협력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점진적으로 주한미군의 작전범위 및 영향을 제한하고 미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 및 작전 방식을 법률 문서로 규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중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넷째, 한국의 통일방식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을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통일과정에서 최대한 평화적인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동북아 정세 악화, 전쟁 발발 등의 중국 측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다섯째, 안보 분야에서 가능한 한 중국과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고 고위층 간의 군사적 신뢰를 제고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통합을 조속히 이룩하고 양국 모두의 경제협력과 산업발전에 서로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한반도 통일과정은 남북이 점진적으로

경제 수준 격차를 줄이고 문화와 정치 체제의 차이를 극복하여 양측의 수준이 비슷하고 공통된 염원이 존재할 때에 협력과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중요시하는 요인은 한반도의 안정이다. 한반도에 전쟁, 분란, 충돌이 발생하여 중국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전(不戰)·불란(不亂)·불변(不變)이 중국이 가장 희망하는 한반도 통일방식이다. 중국 입장에서 주변국인 한반도는 필쟁(必爭)·필보(必保)·필온(必穩)의 지역이다. 먼저, 필쟁(必爭)은 중국이 한반도와 선린관계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의미한다. 필보(必保)는 중국이 한반도가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온(必穩)은 중국이 주변국들의 안정과 발전을 보장할 것을 의미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중국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이 핵무기와 핵 발사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주변 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와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가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중국은 핵 사고는 사고 당사국의 재난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불의의 재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은 핵 관리 경험이 부족하고 지역이 협소해서 일단 핵 사고가 발생하면 중국 동북 지역의 환경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수차례 관측됨에 따라 이미 동북지역에는 공포와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기조를 세우고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는 미군의 압력과 위협이라는 객관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중국은 북한의 대응방식을 이해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이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 핵 문제의 주도권이 미국에게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때 미국이 관대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국면은 미국의 국익에도 위협적이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음을 확인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은 동아시아의 대국이자 중진국으로서 자국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풍부한 경험과 자신이 있으며 전방위적인 고려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음을 미국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6자회담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기존 협의체는 다년간의 절충, 갈등, 협상을 통해 이루어낸 결실이다. 비록 시스템적으로 불완전할 수 있으나 현재 국제정세에서 최선의 결과이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협의체는 관련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만으로도 큰 성과이다. 6자회담을 평가할 때에 현재 해당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보고 평가해야 한다. 6자회담 기구가 없었다면 한반도는 이미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을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한 것이 6자회담의 가장 큰 성과이고 한반도에 최소한의 평화와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6자회담은 각 관련국이 기대한 만큼의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그 원인으로 크게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각 측의 6자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 과중한 부담을 부과했고 이는 제 기능을 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6자회담은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진할 뿐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6자회담의 역할은 각 측이 한 곳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대화의 결과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둘째, 각 측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대강의 애매모호한 목표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회담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셋째, 각 측이 회담을 개최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전제가 과도한 경향이 있다. 회담을 개최하기도 전에 회담 결과를 정해 놓으면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할 확률이 크다. 각 측이 먼저 만나서 상대방의 패를 탐색한 후에 회담의 목표를 세워야 비로소 현실성이 있다. 가령, 회담 개최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한다면 6자 회담을 이어나갈 수 없다.

넷째, 회담의 구체적 목표를 세부화해서 반드시 한 의제씩 차례로 논의할 필요 없이 여러 개의 의제를 병행해서 성과가 있는 의제를 통해 그렇지 못한 의제를 진척시키는 것도 협상의 기술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통일한국은 동아시아 문화에 기반을 두고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때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평화, 유아(儒雅), 진취, 포용 등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 가치관이어야 하지 서양이나 미국의 공허한 인권, 민주, 자유 등으로 주변국을 억압하는 가치관이어서는 안 된다.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중국과 평등하고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건설하고, 중국문화, 한국문화, 일본문화, 그 외 동아시아 문화가 공동 번영하고 조화를 이루는 동아시아 문화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 Ⅲ. 일본

### Ⅲ. 일본-1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1950년부터 3년에 걸친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그 배경과 원인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전후 구상, 구소련의 남하정책과 김일성 체제에 대한 전면 지원, 중국의 김일성 체제에 대한 지지 공약, 일본이 36년 간 통치를 한 뒤 돌연 패배한 것,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 간의 통일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반도 내부의 갈등이 있었다는 5가지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원인으로 한반도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 각국은 유형, 무형의 분단비용을 지불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일본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다음의 5가지이다.

- (1) 북한은 한국에 대한 대남 침투 작전, 대남 공작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많은 일본인이 북한의 공작기관에 의해서 납치되었다. 일본정부가 인정한 것은 17명이지만 수백 명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있다는 조사 보고가 있다. 이것은 분단에 의해 일본이 받은 피해 중 하나이다.

- (2) 북한은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핵무기, 특히 ‘로동’ 미사일은 주일 미군기지가 있는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배치 하였고, 탄두 수는 3백발 이상이다. 그 결과, 미사일은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은 미사일 방어 장비를 배치해 왔다.
- (3)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미군과 유엔군의 보급 기지가 된다. 전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미군 기지를 축소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른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주둔비 분담금도 방대하다. 오키나와(沖繩) 가테나 기지(嘉手納/Kadena Air Base)와 제2해병 사단은 중요하며 배치된 오스프레이(Osprey)는 한반도 유사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련 경비는 2012년도(2012. 4~2013. 3) 주일미군의 주둔비만 해도 5,728억 엔에 이른다. 그 밖에도 미군 재판과 토지 반납, 소음 대책 등의 경비로 713억 엔을 계상했다. 6,441억 엔의 경비 전부가 한반도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가 핵무기 없는 안정된 통일국가라면, 이 금액에서 미군 주둔 관련 경비는 줄어들 것이다.
- (4) 한반도의 분단 상황으로 인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때, 북한과의 관계는 정상화될 수 없었다. 일본 외교는 아직 ‘전후 시대’에서 ‘탈(脫)전후시대’로 이행할 수 없다. 분단된 상태인 북한과는 국교정상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후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는 일본의 정치적인 비용이 되고 있다.

- (5) 한반도의 남북 대립 때문에 일본은 국내의 이념 대립이 발생하는 피해를 받아 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대한민국의 재일거류민단의 대립은 매우 격렬했었다. 때로는 일본 정치가나 정당을 끌어 들여 대립하기도 하였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 (1) 일본의 니가타(新潟)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중국 동북지역과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면 일본 경제에 있어 이익이다. 북한 항만을 이용해서 중국이나 한반도와 일본의 물류를 활성화하고 동해 경제권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수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북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할 수 없다. 그것은 동해지역의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 (2) 남북 대립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 항공로는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민간 여객기는 러시아나 중국을 경유해야 하므로 그 만큼의 연료비가 증가한다.
- (3) 한반도에 관한 지리, 문화, 언어에 관한 용어를 사용할 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조선반도’나 ‘한반도’, ‘북조선’이나 ‘북한’, 그리고 ‘남북조선’이나 ‘남북한’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된다. 일본 국내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느껴 왔다. NHK가 한글 강좌를 개설할 때, ‘한국어 강좌’라 할 수도, ‘조선어 강좌’라고 할 수도 없어서 남북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중립적인 ‘안녕하십니까, 한글 강좌’라는 표현이 된 것은 유명한 사례이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 (1) 통일한국의 출현으로 38도선의 군사 대치가 없어진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현재와 같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상 자위대 함선을 포함한 현재의 방위력 체제와 방위 예산을 유지할 필요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를 절약할 수 있고, 그 만큼의 비용을 사회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조짐이 생겼을 때 동북아의 현재 질서를 변경하는 장기적인 국방 계획을 실행에 옮겨 왔다. 최근 10년간 군사 정세 추이를 살펴 보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해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군사적·경제적 이익은 상쇄되고 말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 (2)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진행된다. 그 결과, 드디어 일본 외교의 '전후 외교'가 완결된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 (1) 일본인 납치 피해자이면서 아직 북한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원이 일본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한반도 내부의 정치적 대립이 사라지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 (2) 통일은 북한이 풍부한 지하자원, 양질의 노동력, 한국의 고도 기술과 풍부한 자원에 의해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이 된다. 통일은 한국의 시장은 국제화된 시장이 되고, 구매력이 뛰어난 경제를 영위한다. 그 결과, 일본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온다. 일본에서 통일한국으로의 투자는 증대되고, 일본으로부터 수출이 늘고 통일한국의 대일(對日) 투자도 늘어난다.
- (3) 일본과 통일한국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학술 교류가 진행된다. 고구려 유적의 연구나 고대 일본과 한반도의 교류 역사에 관한 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진전될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 (1) 통일한국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핵 보유국으로서 동북아에 균림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역사에서 축적된 민족의 한을 생각하면,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논의가 통일한국 내에서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통일한국이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할 경우 일본에게는 최악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일한국에서는 민족주의가 고조된다. 통일한국이 첫 번째 위협을 일본으로 상정하고 핵무기 보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시점에서 ‘핵무기를 가진 통일한국’이라는 논의는 한국에서는 금기이지만 그렇게 될 때 일본은 현재의 방위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생기고 그에 따라 방위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2) 통일한국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일본과 대치할 때는 일본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된다. 통일한국과 중국이 연합군을 형성해 센카쿠 열도에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경우는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이다. 이것은 ‘원구의 역(元寇の役)’의 재현이다. 원구의 역은 일본의 가마쿠라 시대 중기에 당시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몽골 제국(원)과 고려 왕국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큐슈를 침공한 사건이다. 분에이의 역(文永の役)은 1274년, 고우안의 역(弘安の役)은 1281년에 일어났다. 이 때, 중국대륙의 남송은 몽골과 고려군을 전면 지원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 (1) 통일된 뒤 통일한국이 민족주의 감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8천만의 통일한국 국민이 구미 각국을 대상으로 위안부 동상을 세계 각지에 건립할 때 일본에게는 부담이 된다.
- (2) 통일한국이 방대한 통일비용을 일본에 요구할 때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된다. 2002년 9월 북·일평양선언을 어떻게 다룰 지가 초점이 된다.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수립 이후에 경제 지원을 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이 선언을 승계할지에 달려 있겠지만 통일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일본이 어떠한 결단을 할 것인지 역시 불명확하다.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통일한국 실현 전에 한반도 통일 시에도 한반도 비핵화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국제사회가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사회가 핵무기의 관리 체제를 미리 설치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2) 통일한국이 주체사상에 근거한 체제를 수립하고 일본과 대치할 때는 일본에게 있어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일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에 한 정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북한의 경제 재건과 인프라 구조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사전에 관련 국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 (1)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전쟁은 없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본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강요한다. 전쟁 시에는 일본 국토에 ‘로동’ 미사일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제 2의 한국전쟁 발발 시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 이익을 생각해서 일본인은 제 2차 한국전쟁을 기대하

- 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소수 있지만 그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 (2) 남북의 신뢰관계가 진전되면서 통일되기를 기원한다.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원활하게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바람직하다. 한반도 통일의 주인공은 남북한이며 주변 국가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2013년 5월 일본의 이지마(飯島) 내각 참여가 평양을 방문한 것은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간 계 아니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북한 지도부에 전하기 위해서였다.
- (3)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은 북한 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의 한·중 간 무역의 발전과 한·중이 정치·군사적으로 전략적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통일한국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 통일 한국의 실현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관계가 백지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 (1)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간 협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를 논의하고 싶어도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다자간 협의만을 별도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모든 국민은 남북한 간의 대화에 일본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관계국들이 한반도 안정 유지, 평화적 통일이라는 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남북 당사자가 남북대화를 신속히 진행해 주었으면 한다. 남북회담 대표단의 '격' 문제로 회담이 좌절되거나 협의 항목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남북대화가 일진일퇴하는 일 없이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협력이 윈윈(win-win)관계임을 국제사회에 보여 주었으면 한다.

- (2) 6자회담은 관련국들이 모여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시스템이다. 회담을 재개하여 이 틀 안에서 북한에게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자회담을 진행하면서 남북 대화를 풀어 나갈 때 북·일대화도 진전시킬 수 있다. 북·일대화를 통해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해 갈 수 있다. 6자회담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크지만 6자회담의 틀 자체를 재검토해도 좋다. 한국 및 북한과 관계가 깊고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몽골을 다자 협의의 틀에 초빙해서 7자회담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도 좋지 않을까?
- (3) 핵무기 개발보다는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에 훨씬 득이 된다는 것을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에게 보여준다. 일본으로서도 납치 문제를 대하는 북한의 자세를 살펴보면서 의약품이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법이 있다. 북·일 관계 개선이 진전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나선시의 항만 건설이나 북한의 고등교육에 일본이 출자해서 북한에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형 사업에 일본도 참가한다.

- (4) 한국이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 중국, 한국에 의한 동북아 대화의 프로세스를 구상하는 것은 이 지역의 국제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 한국에 설명한다. 한반도 통일과 이를 위한 프로세스는 미래의 문제이다. 1945년까지의 문제를 처음에 논의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의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발상을 일본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6자회담의 역할은 예전만큼 크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위적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개발 포기를 회담의 최종 목적으로 정할 경우 논의에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 북한은 자위적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법률까지 제정했다. 핵무기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6자회담은 이 지역 관련국들이 모여 토론을 하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의제와 참가국을 확대한다. 한반도의 신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 시에 관계 각국이 어떻게 협력할지를 논의한다. 독일 통일을 경험한 유럽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유럽연합(EU)를 초청해도 좋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동북아 지역협의체는 지금 당장이라도 창설할 수 있다. 상설기관으로서 통

일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컨소시엄 설립을 준비하는 기관이다.

- (2) 6자회담은 중국이 개최하고 베이징에서 열리는 6개국의 협의로, 지나치게 중국의 지도력이 눈에 띄었다. 사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어 하는 원인, 배경, 동기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적 입장이며, 이 입장은 1994년 제네바 북·미합의 이후 변함이 없다. 핵무기로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본심인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6자회담을 보다 공정한 형태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6개국이 돌아가면서 차례로 6자회담을 개최해 가야 한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 (1)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것은 동북아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과거 역사를 현재의 가치관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해석과 같은 해석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해서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반하다. 한국과 일본은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과거 역사인식의 전환이 전제’라는 입장으로는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미래지향을 키워드로 해 주었으면 한다. 동북아의 정치 안정과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통일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이다.

- (2)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일까? 평화를 사랑하고 풍요롭고, 환경 대책, 복지를 중시하며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사회를 실현한 통일한국을 바란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과 활발한 무역을 진행하면서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을 기대한다.
- (3) 한국은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 철도의 철로는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어 있고, 아시아 수송로의 핵심 위치에 있다. 항공 교통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삼성, 현대, LG등 세계적인 기업이 성장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인천에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세계 환경 대책에서는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제2차 핵안전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핵무기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는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를 선도하는 역할을 가진 국가로서 통일한국이 지금까지 이상의 역할을 완수할 것을 기대한다.

## III. 일본-2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최대의 분단비용은 미·일안보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일본 주둔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 최대의 군사·안보상의 목적은 반드시 일본 방위인 것은 아니다. 주일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있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안보이다. 구체적으로는 요코스카(横須賀)를 모항으로 하는 미국의 제7해군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도양, 그리고 중동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의 해병대와 육군, 공군의 중요한 군사적 임무는 주한미군과 연합하여 한반도 안정과 한국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일미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한국인의 인식은 희박한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68년에 당시 닉슨(Richard Nixon) 미국 대통령과 사토 에이사쿠(さと う え い さ く) 수상 사이에서 교환된 ‘미·일공동성명’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 긴요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토 수상은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지체 없이 미국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의 재검토는 1970년대에 기본 틀만큼은 합의되었지만 내용에는 손대지 않았던 ‘극

동유사'시의 미·일 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이었다. 그 최대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94년 북한을 둘러싼 핵 위기였다. 즉, 미군의 북핵 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공급이 현실성을 갖는 가운데 일본의 대미 협력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것이 미·일 당국에게 위기 의식을 갖도록 만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는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한·일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위와 같은 군사·안보 측면에서 일본이 안고 있는 분단비용이 일본의 경제적 부담이 되며, 또한 일본 국내의 정치와 사회에 심각한 대립을 낳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분단비용이다. 예를 들어, 일본 방위비의 10%는 주일미군 관련비용으로, 본래라면 미국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일본이 대신하는 이른바 '배려 예산'이다. 또한, 한국이 민주화하기 이전에 권위주의적 정권과 안보관계가 강화되자 일본의 진보적인 정치 세력과 여론의 큰 반발을 낳고 일본정부로서는 곤란한 국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본은 과거 주일미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보 명목으로 한국에 직접 경제지원을 하기도 했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과 나카소네 야스히로(なかそねやすひろ) 수상 사이에 합의된 총 40억 달러에 이르는 대한(對韓)원조가 그것이다.

최근 오키나와의 후텐마 기지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국내 문제이지만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 것은 많은 정치 세력과 여



론도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현재 한국의 국내적 반발 때문에 조인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합의된 것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최대의 긍정적 통일효과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일 것이다. 그 결과, 위에서 말한 주일미군의 기능 가운데 한국의 안전에 대비하는 군사적 부분은 삭감된다. 또한, 통일된 한반도의 안정은 곧 동북아 정세 안정과 직결된다. 그것은 미·중관계 또는 중·일관계가 안정되고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통일된다는 것은 곧 동북아 평화와 안정과 같은 뜻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일미군의 역할은 일종의 정직한 중개자로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할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통일한국도 정직한 중개자로서 미군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일본과 통일한국의 안보 협력 가능성도 열릴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 통일에 수반하여 위와 같은 바람직한 안보 환경이 조성될지는 대국화한 중국이 ‘중국의 꿈’의 부활(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을 어디까지 외교 전략의 기둥으로 삼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이 그럴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 중국을

불러내는 것도 일본과 통일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한반도 통일을 놓고 동북아 정세가 이상과 같이 바람직하게 안정된다면 주일 미군 기지와 일본의 대미 군사협력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온 일본 내 여론도 번거로운 대립 요인으로부터 해방된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의 안정화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통일한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유대는 깊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면적 한일협력을 통해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이 이러한 협력의 논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역사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도 서서히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 진행된다면 영토 문제에서 드러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국익 인식도 수그러들게 된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대국화 하는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대립적인 군사·안보 정책을 계

속하는 가운데 통일한국이 중국에 가까운 외교 자세를 취하는(중국에 편입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부정적인 통일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때 통일한국에 미군은 존재하지 않고 미·일동맹이 중국과 적대하게 된다. 그것은 일본으로서는 미국을 지지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따라서 일본 외교의 자율성은 상실된다) 것과 아울러 일본(및 미국)과 통일한국의 협력관계가 저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일본 보수파의 반중·반한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고 일본 사회의 분열을 조장시킨다. 또한, 통일한국과 중국이 역사 문제로 연합전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역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감정적 악순환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만, 현재 한국에서 안보 문제나 역사 문제에 관해 일본의 다원주의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지식인과 시민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한국 정부의 선택에 의해 위와 같은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통일한국 사회에 심각한 분열이 빚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통일한국의 분열에 끌려들어가서 정치적 대립이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관계의 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의 근대사에 대한 굴욕감을 없애고 ‘고래(古來)’에 대한 향수에 의지한 ‘중국의 꿈’을 추구하려는 충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실에는 없는 것을 즐라대는 격이다.

공산당 체제 아래에서 군사력 증강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국화가 지속되는 경우 부정적인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중국에 대항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중국과 공존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강대국이 된 중국과 공존하는 전략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다. 그것은 당연히 일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추진하는 방법은 경제적인 협력 관계에 더하여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쌓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호주와 재해구조와 인도적 안전 보장을 둘러싼 양군의 협력에 관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였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도 같은 취지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한국과 호주 사이에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 체제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한·일, 호주의 안전 보장 협력을 추진하는 현실적 전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통일한국이 이와 같은 동아시아의 다자간 협력에 참가할 수 있는 틀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일본의 접근방식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한·일 협력 의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은 남북한이 합의 하에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공존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북한의 민생 향상과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북한의 일정한 경제성장과 민생의 향상이 도모된다면 그것은 곧 평화적 통일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 노선의 온건화가 불가결의 전제조건이 된다.

사실 일본은 이러한 바람직한 통일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김정일)와 합의한 2002년 ‘북·일평양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선언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북일 국교정상화에 관한 합의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인들에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입혔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쌍방은 일본 측이 북한에 대해 국교정상화 이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 자금 협력, 저금리 장기 차관 제공이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 경제협력을 실시한다. 또한, 민간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제공 등을 실시하는 것이 공동선언 정신에 일치한다는 것이 기본인식이다. 이를 위해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쌍방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양국 및 그 국민이 모두 재산 및 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다.

쌍방은 재일조선인의 지위에 관한 문제 및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일이 서명한 ‘북·일평양선언’은 여전히 유효한 합의라고 말해도 좋고, 그것은 일본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안정되고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일평양선언’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교섭을 재개할 수도 있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협력 체제를 통해 구축될 수 있다. 하나는 말할 필요도 없이 6자회담이다. 이 문제로 동북아 국가들이 협력하지 못한다면 동북아 안보 문제에 관한 다자간 협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역할 및 미·중관계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그와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미·중 양국에 대한 압력은 한 나라가 하는 것 보다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한, 한·일이 공동으로 비핵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은 한·일 이니셔티브(initiative)도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유엔,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에서의 활동도 중요하다. 북핵 문제를 글로벌 비확산 문제로 취급하고 국제 사회와 연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한일이 공동보조를 취할 수도 있다. 국제적인 규범을 강화하거나 북한을 포함한 핵 의혹국에 압력을 행사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도 같은 조언을 하고 싶지만 한국정부가 더욱 앞장서서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6자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은 막혀 버린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6자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6자회담을 대체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정부로서는 여전히 6자회담이 중요한 구조임은 틀림없다.

현실적으로 역사 문제 등에서 기인하는 감정적 갈등 상황이 가로막고 있지만, 6자회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가능한 방안은 한·일 협력이다. 사실, 동북아 지역 협력 구도 속에서 한·일 양국은 비슷한 입장에 있고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러시아 세 강대국(3강)은 핵 보유국이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여차하면 강대국의 일국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세 강대국, 특히 미·중 양국의 협력관계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본과 한국은 미·중·러 세 강대국과 같은 단독주의를 선택할 수 없다. 오히려 ‘미들파워외교(middle power diplomacy)’의 관점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독자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발휘해야 할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한·일 공동 비핵화 선언’이라는 방안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외교 카드가 되는 것이며 ‘미들파워협력’의 구체적 사례라고 말해도 좋다. 그것은 일본에게서나 한국에게서나 있어도 자연스러운 외교 의제라고 말 할 수 있다.

역사인식 문제가 중요한 것은 한·일 양국이 이와 같은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협력 안전에 대해 심정적으로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최대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한·일 협력의 논리에 대해 역사 문제를 들어 그 논리를 부정하는 ‘안이한’ 영역에 숨는 나쁜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동아시아 공동체’나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인 행위자로서의 통일한국이 바람직한 미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다자주의를 외교의 기본적 수단으로 하고 부상하는 중국과 공존 가능한 국제질서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통일한국이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이 중국에 대한 외교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변동기의 국제정치에 커다란 패러독스를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부상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에 참가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게 되고 향후 중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틀 안에서 대국화한 중국은 기존의 구미 주도의 국제질서(즉,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불공정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아편전쟁 이후의 역사를 굴욕으로 파악하는 중국의 역사인식은 대국화한 중국이 ‘중국의 꿈’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대국화를 둘러싼 이러한 두 개의 시대 조류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아시아의 역설’이다.

그 역설을 넘어 중국을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로 유도하는 것이

야말로 통일한국 최대의 전략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현재 한국이 중국과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야 할 이유와 논리는 명확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중(對中) 협력의 이유와 논리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감을 얻고 그 토대 위에 동아시아 협력이 전개되는 것이다. 거기에 북한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Ⅲ. 일본-3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물론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여 안전 보장 정책을 수립하고 헌법 개정 역시 현실로 다가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위협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에 의해 북한 같이 예측 불가능한 국가가 바야흐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은 일본에게 분명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의 존재가 무엇보다 큰 분단비용이라고 생각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일본은 확실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북한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남북 분단을 바라고 있다는 견해가 한국에서 지배적이었고 일본의 일부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주장도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보여주자면 비록 한·일관계가 역사 인식과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이 있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일본의 안전 보장에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로 분단이 일

본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며 극복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된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이 측면에서 직접적인 분단비용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북한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일본에게는 미개척 시장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약 60만 명의 재일 교포가 재일거류민단과 조총련으로 분열되어 있어 사회적으로는 일본 사회의 활력을 없애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일본 사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존재 자체는 일본 사회에서 자유의 억압과 규제의 강화로 이어져 일본 사회의 자유로운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된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의 통일은 일본에게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국가의 존재, 더욱이 그런 국가의 핵 보유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제거됨을 의미한다. 물론, 통일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예측 불가능성과 핵의 현실적 위협이라는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단, 지금과 같이 각자 미국을 매개로 한·일 양국이 동맹관계를 이어간다면 군사·안보 면에서 한일이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대립관계에 빠

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한·일이 군사·안보 면에서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안전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보다 커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일본의 안전 보장상 위협의 일부가 제거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은 일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5000만 한국 시장에 2000만 북한 시장이 더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증가한다는 측면 뿐만이 아니라 통일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일부 국교정상화와 그에 따른 경제협력이 통일 이전에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통일 이후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합쳐지는 것 이상의 중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사회 내의 재일교포 활동에 거의 아무런 제약도 없으면서 자유로운 사회, 문화활동이 일본사회의 발전에 한층 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게 되기를 기대한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이것은 오로지 통일한국이 어떤 국가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일본과 어

면 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통일한국이 일본에게 적대적 국가, 게다가 종래 이상으로 강력한 국가가 되고 더욱이 중국이 지탱해주게 되면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에 의해서 오히려 일본에게는 안보상의 위협이 증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취소하고 중립화하자마자 중국에 접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단지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통일한국이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현재도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일각에서는 핵 보유 논의가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갖고 있는 한, 한국 독자의 핵 보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되지만 만일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됐을 경우 한·일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지 않는다 해도 일본에게는 여전히 안보상 위협으로 간주된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이 부분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통일한국이 유일하게 거의 일본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갖게 되면서 일본과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한·일이 본격적으로 배타적인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그러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일본사회 안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감이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통일 한국의 등장이 한·일관계를 더욱 험악한 대립관계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도 있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와 그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헌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역사에 기인하는 한국과 일본의 마찰을 미래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경쟁관계로 있지만 그것은 적대적 대립관계가 아닌 어디까지나 선의의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통일과정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본과 통일한국이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이에 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핵개발이나 핵 보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일본과 통일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살려 상호 협력적인 안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보·외교정책에 있어서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대미(對美)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중(對中)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한·일 간 협력방안에 대한 문제 등 중요한 문제를 공유하고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한반도의 통일은 현 시점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생각하기로 한다. 그 경우 역시 평화적,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혼란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혼란이 발생하여 무력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 여기에서는 일본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전제로 생각하기로 한다. 한반도의 통일 이전에 북·일 국교정상화와 그에 따른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생활 수준을 끌어 올리면서 정치 체제에 대한 변혁의 싹을 틔울 수 있다.

남북 경제교류 증대가 북한의 정치 체제 변화를 촉진시키고 현 북한 체제의 정치 지도자가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을 방치하고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을 흡수하는 형태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은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에 있어서 일정한 위상을 유지하면서 평화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한국 및 북한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의도적으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을 선전하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일본의 관여를 조심스럽게 얘기하려는 것도 아닌, 있던 그대로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충분한 공헌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사 청산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한국과 북한의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핵문제 개발, 혹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일본의 역할은 일본의 대북 영향력과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일 국교정상화와 그에 따른 북일 경제협력이 북한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함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과 비중을 높이고, 북한이 일본의 의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러한 대북 영향력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층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북·일 경제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현재는 북한의 행동이 대미(對美)·대중(對中)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한·일 양국이 협력하여 대북정책에 관해 양국의 이해에 어긋나지 않는 그리고 가능하면 일치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 포기 에 맞춰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일이 협력하여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대가로 한일이 함께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유사시에는 한·중·일이 협력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안이한 군사행동을 삼가도록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핵 비확산으로 변경하지 않고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북·미관계 개선 조건으로 북한에 천명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미국과 중국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장 유효한 것은 한일협력이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고 함께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일 양국 간의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한·일 양국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대북관계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카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생각해보아야한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6자회담 등 동북아의 지역적 틀 안에서 북한 스스로가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취하고, 또한 남북 경제협력보다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적 의존이 그나마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중국이 북·미 대립을 중개하는 건 대국 중심의 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한·일의 역할은 주변화 되고 만다. 다만 문제는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의 외교정책 안에서도 최우선 과제라고도 할 수 없어 자칫하면 시기적절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면이 있다. 또, 중국 측에서 봐도 북한 문제는 현상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의향이 약하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틀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일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미국, 중국을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납치 문제로 인한 국내적인 제약 때문에 대북외교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어 부득이한 측면도 있지만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과 그 중에서도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보다 이미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북·일 작업부회 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6자회담의 활성화도 되고, 무엇보다 일본의 위상을 높이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해야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북한 핵 문제의 진정한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다.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당사자가 아닌 상황이 되어 버렸다. 당사자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본은 북핵 문제를 북·일 국교정상화와 그에 따른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일본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주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담보상태에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은 동북아의 네트워크 중심, 바꿔 말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은 언젠가 동북아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 한·일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등 어느 것을 하더라도 한국이 네트워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네트워크 상의 유리한 위치를 한국이 외교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한국은 이러한 네트워크 상의 위치를 분명히 자각하여 활용하고 동북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가치에 따르는 가치 외교를 지향할 필요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특정한 가치에 따라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 순간, 한국은 미·중과 일·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게 되어버려 네트워크 상의 핵심적 위치라는 강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동맹 관계를 끊어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상호의존도가 점점 깊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한·미동맹관계는 필요하고 유효할 것이다.

이것은 통일한국이 되었다고 해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중국이 그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불투명한 부분도 있지만 통일한국은 그 자체가 강국이고 또, 대국을 지향하기보다는 강국과 대국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번영을 최대한 누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상의 핵심적인 위치의 장점을 살리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어가기 위한 역할을 다 할 것을 국가 목표로 설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III. 일본-4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 독일 통일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부터 통일비용과 분단 비용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정의, 범위 등부터 자금 산출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고 공개적인 논의도 적기 때문에 일본이 부담해야할 예상 비용의 산출 등에 관한 자료 수집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 - 군사·안보적 측면

일본에 있어서 남북 분단에 의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분단비용은 냉전기와 탈냉전기에 서로의 그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두 시기로 나누어서 기술하고자 한다.

냉전시기에는 북한의 대남 공작 거점으로 일본이 이용당했는데 그 중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이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 사건에서 재일교포가 이용된 점, 그리고 재일교포 사회를 무대로 한 공작 조직의 활동은 일본 공안당국의 중요

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비대칭전략'이라는 잠재적인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일 안보동맹관계의 의의가 거듭 강조되어 주일미군의 유지, 자위대와 해상 보안청, 경비 공안 경찰의 조직과 장비의 강화가 요구되었다.

탈냉전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이라는 실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분단비용은 미·일 안보의 강화, 일본의 정보 수집 위성의 개발 등에 비중을 두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의 재검토와 일본에 주둔하는 주일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금' 등은 북한의 잠재적 위협도 큰 걱정요인으로 검토하며 진행되었다.

특히,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열도를 사정권에 넣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로동'이 실전 배치되었다는 것은 일본에게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군사적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방위, 정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장비 강화 및 담당자 육성이 항상 요구되고 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인 분야에서 분단비용은 통일이 된 한반도라는 시장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손실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은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나 개발조차 되지 않고 있어, 현재 광물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일본의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 개정 주장이 보수층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일본의 정당정치, 정치사상, 사회운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재일한인사회가 분열되어 있어 재일한인사회의 독자적인 문화·예술 발전이 저해되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남쪽도 북쪽도 구별하지 않는 재일한인사회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이 항목에서는 통일 프로세스가 급작스러운 사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주도하의 단계적인 통일이라는 상정 하에 검토를 진행했다.

### - 군사·안보적 측면

한국이 주도하여 통일이 실현된 경우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서는 군사적 위협의 소멸로 평가된다. 물론, 북한지역에 있는 핵무기나 핵 시설,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일본에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한국 또는 국제적기구들이 감시·관리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할 경우이다.

통일한국이 비핵화입장을 표명하고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더욱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의 해체와 파괴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폐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비용에 대한 투명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적



인 기구를 창설하여 대응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지역의 안전 보장을 확립하는 ‘평화 투자’라는 의미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관계국이 우선적으로 분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비용은 부정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통일 프로세스가 개시되기까지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 측으로서는 북한지역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기 관리와 동시에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납치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납치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에 대한 협력을 한국에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 의한 조사단 파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일 안보와 재일미군의 존재 의의에 관해서는 일정부분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대두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으로서는 큰 변화가 아닌, 부대의 재배치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일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안전 보장의 혜택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 경우 지역안보에서 일본의 입장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통일이 된 한반도에 대한 투자와 시장 규모의 확대 등은 일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지역의 기초적인 인프라 정비와 지역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니가타현(新潟縣), 도야마현(富山縣), 시

마네현(島根縣) 등 과거에 북한과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 확대를 시도 해왔던 일본의 지자체도 통일한국과 투자 혹은 무역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 예상되고 일본의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지자체의 움직임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재일사회에서 융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 전망이며 일본 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 한국 주도하에 통일된 한반도가 일본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일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재배치와 장비의 증강을 초래하게 되어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경제 분야에서는 이미 북한지역에 투자가 실시되어 일정한 권익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과 마찰이 염려된다.

특히, 중국이 자국 기업의 권익 보호와 치안 유지를 이유로 군대를 일시적으로 파견한 경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새로운 긴장감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분단의식이 강했던 재일(在日)사회에서의 혼란이 생길수도 있다. 더욱이, 통일국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북한지역의 주민이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통일 효과를 최소화하는 선결조건은 통일과정에서 중립적인 국가의 위상을 조속히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과 중국, 미국, 러시아 등 관계국들의 오해와 경계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통일 개념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것이 선결조건으로 요구된다.

더욱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관계국들과 불가침조약과 평화조약 같은 법적인 정비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은 통일 국가가 동북아지역에서 불안정한 입장에서 고심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국제연합도 포함하는 관리 기구와 같

은 조직구성을 검토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관리 기구는 통일비용에 포함된 자금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일본은 북한지역에 식민지 지배의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자금원조의 중심적 역할을 맡아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국익에 바람직한 통일과정은 통일이 된 국가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식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외교적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은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북한에 있는 핵무기와 핵 시설,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를 하루 빨리 국제기구의 관리하에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면 통일한국은 군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최종적으로는 자위적인 군으로서 주변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은 올해 8월로 10년째가 된다. 일본은 6자 회담 참가국으로서 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 중국,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구체적 역할은 2002년 9월, 북·일평양선언에 명시되어 있듯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경제적 협력 형식의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다.

북한은 2013년 들어서 남북 불가침조약과 비핵화합의를 버렸다. 또, 한국전쟁 정전협정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북·일평양선언에 김정일 위원장이 스스로 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려는 모습은 보여 주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 형식의 배상을 경제 재건에 언젠가 활용하고 싶다는 의사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협력을 지원받기 위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방법 이외에는 효과적인 방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알다시피, 일본에 대해 북한이 해야 할 일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재개와 비핵화 입장 표명과 구체적인 행동,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발사의 유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본 독자적인 경

제 제재는 완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것이 경제협력의 길로 이어진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설득도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한국의 외교 노력에 관해서는 관계국의 역할을 분담하는 부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현재로서는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교류의 활성화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분야다. 핵과 미사일의 문제는 주로 미국, 비핵화로 유도하여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역할은 일본에게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관계국들의 역할 분담을 검토하는 것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 － 분단·통일과 관련한 동북아 협의체에 대한 평가

1990년대에는 남북과 미·중의 4자회담이 열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6자회담도 제1회 회담부터 10년이 지났지만 2008년 12월 이후 장기간 중단된 상태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 보유 주장과 비핵화 입장을 북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6자회담을 핵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정치적, 전술적으로 이용하면서 맞게 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핵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 합의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북한이 핵 체제 유지와 관련시키지 않도록 하는 6자회담을 기반으로 지역적 안보 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안보에 관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평화협정이지만 북·미 평화협정이 성사되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야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유훈을 실현할 조건으로 '세계의 비핵화'라는 높은 장애물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고려하면 북·미 평화협정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절대적인 비핵화를 담보로 하는 지역기구, 국제조약 같은 법률적인 장치 마련을 논의하는 것도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 방안들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 상징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이 가능한 통일국가의 길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평화 상징 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통일된 국가만이 국제사회에서 평

화를 위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가치관이다. 통일이 된 한반도는 세계 도처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통일국가가 된 모델로는 지금까지 독일이 대표적이었다. 통일이 된 한반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경쟁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고 탈냉전시대부터 상호 의존 체제가 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발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을 구현하는 국가로서의 미래상을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 상징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분단의 비극에서 희생이 된 수많은 관계자의 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할 것이다.



## III. 일본-5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첫 번째로, 유형의 분단비용으로는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는 긴장관계에 있음으로써 발생한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자국(북한)에 침략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일본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북한은 미군 기지를 자국에 대한 침략의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한 성명을 냈을 때 주일미군기지의 몇 곳이 지명되었다.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일본에게 있어서 주일미군기지는 유효한 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 불가결한 것이나 그것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북한을 계속적으로 가상 적국으로 취급해 온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북한은 경제력이 약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납치 문제 이외에는 일본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은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일본은 당분간 북한에 대한 경계를 풀지 못하고, 군사·안보 측면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로,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의 대립과 분단의 결과, 일본의 대(對)동북아 인식은 특히 군사·안보 면에서 협력보다 억제하는 방향으

로 가지 않을 수 없고, 주변국들이 일본에 대한 경계를 풀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력 행사에 극히 신중하여 일본의 선제공격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지만 주변국의 인식은 이와는 다르게 일본의 군사력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의 동북아 외교는 다른 지역과의 외교보다도 제약이 많고 경제력과 기술력 등 일본의 잠재력을 살린 협력과 신뢰 조성을 통해 군사적인 대립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한반도는 일본과 중국 대륙의 사이에 위치해 있고 유사 이래로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과 중국을 잇는 루트가 존재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과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이러한 일본과 중국 대륙을 중개하는 한반도의 역할은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 있어서 한반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동북, 러시아 극동의 경제적인 잠재성은 크지만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만일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해당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타 지역에 비하여 큰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평화가 도래하면 이러한 저항감이 없어지고, 일본이 동북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심리적인 부담이 꽤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이 한반도를 통하여 중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구 만주시대부터 있었던 물류 통로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많은 일본 국민이

동북아 경제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는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 문제를 위해 교류가 중단된 지 50년 이상 지났다. 일본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와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 군사적 안보의식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일본과 동북아가 가까운 이웃의 '동료'로서 사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냉전구조가 가져오는 '적과 아군의식'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한반도의 통일이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반도의 통일 후 한국이 현재와 같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인 가치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해 보면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의해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지는 국가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소시키고 일본의 안전보장 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짐으로써 일본이 동북아를 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경제협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통일한국의 출현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현재 한국은 물리적으로는 중국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해 분리되어 섬나라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한국이 중국과 육로로 이어지게 되어 중국까지 이동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한국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해 한반도를 횡단하는 고속도로나 철도,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서울과 평양은 약 3시간, 서울과 북경은 약 6시간 정도 걸리게 될 것이다. 이를 유럽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와 독일 간 이동시간과 거의 비슷하다. 향후 한·중 경제관계는 비약적으로 밀접해질 것이다.

일본에게 한중이 평화적인 경제교류를 증가시키는 것의 의미는 통일한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의 물류 루트를 만들거나 중국 시장용 생산기지를 한국에 두는 등 중국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는 것을 말한다. 또, 지금까지는 북한의 존재로 인해 투자가 저조했던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등지에도 일본 기업이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동북아 경제교류에 동참하면서 번영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인적 교류의 증가에 따라 동북아 일체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도 이 흐름에 따라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일본, 한국, 중국 3국 혹은 러시아와 몽골을 더한 동북아 국가들에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일본이 참된 의미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동북아 지역에 일정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통일 후 한국이 반드시 현재와 같은 외교 혹은 안전 보장 전략을 취할지는 100% 확신할 수 없다.

통일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도 높아지게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통일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면이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국은 미·중 균형외교를 전개하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접근이 활발한 편이다. 중국과 협력관계가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통일한국이 중국을 보다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일본의 지식인들이 많다.

또한, 통일한국은 인구가 7000만 이상이 되어 일본과의 인구 차가 상당히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커져버린 통일한국이 통일 초기에 혼란에 빠지거나 민족주의 의식의 고양으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면 일본에게 군사·안보상의 걱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어떤 환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 남북의 사회적 통합이 지연되는 것도 예상되고, 이런 경우에는 통일한국인의 불안정으로 인해 난민의 발생 등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한국이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회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직 잘 모른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고 규모가 큰 시장이 출현한다는 점에서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불안해질 경우에는 한국 경제와 깊은 관계를 가진 일본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통과정이나 통일 후에, 남북의 사회 통합이 원활하지 않고 빈부격차의 심화나 실업자 급증, 그에 따른 치안의 악화 등이 일어날 경우 현재 한국에 대한 투자나 경제교류의 토대라 할 수 있는 한국의 양호한 치안과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은 그 장점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에 많은 중간재와 소재 등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업무 실적 악화가 일본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한국의 사회 불안이 한국 기업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경우 일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통일의 방법에 대해 단계적으로 합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여러 가지 통일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책을 미리 연구하고 주변국과의 의사소통을 꾀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방향성에 관해서는 한국이 일차적으로 그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대두하면서 때로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그 방향성을 표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이해를 얻기 용이할 것이다. 특히, 통일 후의 한국은 지금까지보다 인구, 면적, 국력이 동시에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일본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통일 시나리오의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일본과 지속적으로 의견 교환을 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한국 주도의 통일 시나리오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갈 것인지 한국과 긴밀한 협조를 이행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 후의 시나리오 안에서 사회 통합과 교육 등 통일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해가기 위한 정책을 세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 경우 필요한 경비도 산출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 수요를 한국 국내에서만 조달이 가능한지 아니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이 그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 일본과 협의 없이 한국 주도의 통일 비용 일부로서 일본으로부터 받을 경제협력 자금을 100억 달러라고 산

출해서 일본 측이 크게 당황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듯 의사소통 부족이 불러올 혼란을 피하도록 한국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기에 언급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은 한국과 밀접한 연락을 취해가면서 평화적 통일을 지원하는 통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일 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자신감을 잃은 식자가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로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일 후에 생기는 신국가가 일본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평화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문제에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의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 통일 후의 새로운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정권의 불안정화 등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통일이 진행될 경우에도 한국은 최대한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평화적으로 통일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과정에서 일본이 중시하는 것은 위에 언급한 것 외에 통일한국이 원활하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한일의 경제관계는 무척 밀접한 관계이고 통일 후의 신 국가와도 이러한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도 필요하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북한의 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자국의 체제를 유지하고 자국에 위협을 준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기본적인 모순이 소멸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핵 개발 과정을 보면 미국과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핵 개발을 중지하거나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에는 가속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추고 비핵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국교가 존재하지 않고 신뢰관계도 성립되어 있

지 않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공헌할 수 있다면 북·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북한이 느끼고 있는 국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일 국교정상화는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교섭이 중단된 상태이고 일본으로서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안정되어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이 감소되면 도발행동이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안정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 박근혜 정권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완화시켜 우호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나 오히려 그 때문이라도 노력을 하고 북한에 대응하기를 한국에 바란다. 또, 북·일 국교정상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므로 일본이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새로운 국가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이해

당사국 전부가 모인 협의체이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참가국들 모두 자국의 관심사만을 우선시하고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6자회담 이외에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제로는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서명국인 북한, 중국, 미국에 한국을 더한 4개국에서의 해결, 북한과 미국 2개국 간의 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 협의와 6자회담의 차이는 북한 핵 문제 해결 후,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와 그에 대한 주변국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6자회담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틀 자체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경솔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이를 조속히 중지시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협의체는 무엇인가에 있어 6자회담 이외의 틀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한 단계에 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이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의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택의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통일 후 출현하는 신 국가에게 바라는 자질 중에 중요한 것을 논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한 입헌주의 국가
- 국제사회와 밀접한 협력 하에 남북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의지
- 자유무역에 입각한 개방적인 경제 체제
- 남북 대립 소멸에 따른 군사적 위협 제거에 맞춘 적절한 규모의 군축과 주변국가와 협조적인 군사·안보정책
- 민족주의가 아닌 이상주의와 실리주의가 잘 조화된 사회 분위기 조성
- 인류의 이상을 구현하는 열린 사회 창조

요컨대, 현재 한국의 장점을 살리면서 분단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명예로운 지위에 걸맞은 국가를 창조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는 긴요하다. 또한, 지금까지의 남북 사이의 갈등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든든한 통일국가 창조를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수립 노력이 통일 후 적어도 30년간은 일관되게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 같은 자질을 가진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신 국가가 행할 경우 일본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 새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IV. 러시아

### IV. 러시아-1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러시아를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은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상황 역시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형의 분단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견지에서 모든 종류의 분단비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분단은 곧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즉, 국지적 위협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지역 강국들 사이의 정치적인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한·미·일에 대한 러시아의 완충지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한반도의 분단 그 자체를 남북 간 잠정적 대치 상황이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미사일 위기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평화적이고, 개방적이며, 시장 지향적 국가를 목표로 한국의 통일과정이 시작된다면 동북아의 정치·안보적 환경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가 분단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에 긍정적인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동북아 지역 공동체에 여전히 과거 냉전적 대치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남북관계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지속적인 대립은 모든 동북아 국가들의 정치·안보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영토 갈등에 더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이제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것이 되었으며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동북아지역 내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은 과도하게 통제되고 고립·경직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침체를 의미한다는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다. 한편, 북한의 전체주의적 정부 시스템의 위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국내 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북한의 오래된 지휘 통제 시스템은 약화될 것이고 오히려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정치·사회적 저항이나 소요 사태 등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객관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정상화를 비롯해 폭넓은 남북 간 협력과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 어떻게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남북한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경

제적 영향력 확대에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의 태평양 지역 발전을 꾀하고 인접 국가들과의 인적, 경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태평양과 인접한 지역과 한국이 근대화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면 이는 푸틴(Vladimir Putin)정부의 태평양 지역 국가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러 전략적 협력의 미래는 결국 남북관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반도의 분단은 반복적인 남북 갈등과 북한 경제의 침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

이 경우, 북한 경제의 침체가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 산업의 침체, 식량과 인프라 위기와 같은 북한 내부의 부정적 동향은 현재 북한의 경제 체제 하에서는 바꿀 수 없다. 물론, 북한이 대외원조 없이 국가를 근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내 경제개혁, 대외경제관계와 투자 환경의 근본적 개선은 북한의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동북아와 태평양 시장으로 통하는 ‘통로’를 개척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한반도는 러시아가 아태지역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러시아가 한반도라는 ‘통로’를 과학과 인적교류뿐만 아니라 지역 내 무역과 투자 지역을 다변화하는데 이용한다면 한반도를 전통적인 에너지·광물자원의 수출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남북과 러시아의 경제적 관계가 처음부터 그리 좋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통합은 러시아를 포함하는 태평양 국가들의

변영과 발전, 그리고 근대화의 근간이자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안정성의 핵심요소이며, 동시에 경제적 부문에서 러시아가 대(對)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에서 선호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불안정하고 심지어 가끔은 단절되기도 하는 남북관계는 러시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정책을 펼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경우에, 러시아가 동북아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관계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의 인프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러시아에 매우 긴급한 현안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프라’라는 용어는 한편으로는 충분한 제도, 국가 간 조약, 기본적인 법적 합의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파이프라인, 항만, 철도, 전력 네트워크 등을 의미한다. 러시아정부와 기업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태평양 지역에서 조직화된 기업 활동에 분명한 하나의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가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남북 통일과정이 시작되거나 한반도 통일 문제와 관련한 지역 강국들 사이의 대화 개최, 혹은 한반도에서 대치 국면이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최소화될 경우, 이는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안정성 제고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에게도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군사적 상황 역시 안정될 것이며, 군비 지출 역시 일정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러 전략적 협력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남북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긍정적 동향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안정되는 것이며, 이는 또한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데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 간 통합은 다자간 정치 협력과 지역안보 체제의 핵심 요소인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대화를 목표로 하는 효율적인 지역 체제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러시아를 포함하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한반도 정치·안보 상황의 안정화는 러시아 무역·투자 프로젝트의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남북한은 미래의 민족통일뿐만 아니라 남북 간 협력에 있어서도 대규모 근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무역의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며 기계 장비 등 한국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정세 안정의 결정적 요소인 남북 간 통합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북한의 체제 이행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대외경제 관계의 다변화와 빠른 확대를 촉진하고자 하

는 러시아의 태평양 전략의 목적에 대부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한국의 통일은 러시아의 국내와 장기적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대외경제정책에 매우 중요하고 포괄적인 요소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이는 러시아가 한국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동향은 물론,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지역 내 다른 강국들의 군사 활동 전망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볼 때 만약 지역 내 모든 강국들의 외교·안보적 이해관계가 지역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에 부합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문제는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정치적 신뢰가 약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이들이 한반도에서의 부정적인 흐름을 차단하고 긍정적 남북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와 한국의 안보 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나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지역에 특화된 안보 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군대, 경찰, 관세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 이행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적인 결과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이민과 다른 위협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군비 지출과 안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편성해야만 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안보 외의 다른 종류의 문제들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려운 경제·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내 정치 행보의 변동, 동북아 4강의 외교 전략은 이 단계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전형적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에너지를 포함하는 필수적 원조와 더불어 사회 안정을 꾀하고 불행한 사태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동북아의 다른 지역 강국들, 유엔과 다른 글로벌 태평양 기구들과 함께 국제 인권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필수적 과정이 될 것이다.

남북한 통합의 주요 특징으로 북한 노동력 자원의 개발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과정이 통일 수립의 마지막 단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성장과 사회 체제 개선 사이의 상호 연결이 잘 유지된다면 한국의 근대화와 통일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동북아의 새로운 현실에 적합한 북한의 경제·사회 체제의 확립을 지원하는 일이 러시아와 다른 교섭 국가들에게는 긴급한 현안이 될 것

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이웃 국가인 러시아는 의료 체계,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문화와 인도주의적 제도의 발전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전체주의 정치 체제의 위기로 말미암아 체제 이행기 초반에 국정 불안과 같은 여러 종류의 문제가 불거질 조짐이 있는지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이나 경찰력이 아닌 활발한 경제, 사회, 인도주의적 정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 사회적 저항과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지역 내 강국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다.

사회 적응 전략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동독 등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경험이 있는 국가들의 역사 분석을 통해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정부의 입장에서, 더 분명하게는 러시아와 남북한 그리고 이웃 국가들의 입장에서, 남북 간 통합의 예비 단계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국제적 협력과정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구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푸틴정부는 북한과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대화를 갖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다자간 협상에 의해 조직될 필요가 있다.

안보 우려와 경제 현안 사이의 상관관계는 한국의 통일 단계에서 한반도의 아젠다(agenda)가 될 수 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이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특성 즉,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한국이 담당하는 정치, 경제, 안보, 인도주의적 역할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기본적인 외교·안보·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국의 통일은 민족통일이라기 보다는 국제적 통합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 생각한다. 러시아는 이 통합 과정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남북 간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고 진보와 번영을 지향하는 지역 체제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통일한국의 근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경제 외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한국 당국과 국제사회, 특히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혹은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이는 러시아에게 이웃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 교류를 제고하고 동북아 지역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지역 강국들 사이의 정치적 경쟁이 촉발되면 이는 국제적 신뢰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될 전망이다. 만약 어떤 국가가 통일한국을 그들을 위한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한국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이는 다자간 협력의 미래와 평화에 실질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남북 간 통합과 한국의 통일에서 긍정적인 동향은 양자, 소지역,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동북아 역내 무역과 투자 교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역동적으로 개선되고 한반도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정세가 안정된다면 지역 협력의 인프라 발전 과정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이는 실제 러시아의 전략적 경제 목표와 대외무역, 에너지, 기타 산업 및 인프라 발전에서 사업상의 우선순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합이 상당히 진전된) 통일의 첫 번째 단계에서 나아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는 그 다음 단계의 한국은 러시아가 지역 통합과정에서 경제적 입지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투자자들로 구성된 참가자들과 더불어 한반도에서 다자간 협력을 출범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동북아 국가들의 미래와 그들의 정치적 역할은 동북아 지역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의 비확산, 정치적인 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대화과 지역 통합을 위한 전망

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요 현안은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반드시 한국의 비핵화가 동북아 지역안보 체제의 통합 요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안보 우려, 북핵 우선순위, 그리고 경제 현안 사이의 상호관계는 한반도의 아젠다(agenda)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비핵화로부터 시작해 지역 안보 조약, 경제 협정, 그리고 인도주의적 교류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5개 동북아 지역 강국들은 지난 20~30년 동안 한반도의 상황에 관한 공식 결정을 채택해왔고, 공동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노력해왔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관해 유엔 안보리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 이는 이들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핵심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시각을 공유하고 남북 간 통합과 나아가 통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5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한편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협박 전술을 성공시키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신 지도부는 최소한 국내 경제 상황이라도 어느 정도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정치 상황의 안정화는 지역 강국들 사이의 협력에 관한 공조뿐만 아니라 지

역안보와 정치적 대화, 그리고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다목적 '5자회담'을 출범시키려는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양자 교류와 협상은 북한과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국제관계에 계속해서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략적 다자간 협력은 약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강국들은 한반도의 부정적 기류를 차단하고 남북관계 전반에 긍정적 분위기를 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 문제에서 성공적인 양자 간 협상은 전략적 결과가 아니라 그저 전술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경험을 고려해볼 때 적절한 제도 확립을 제안하고 지역에 특화된 안보·경제·재정 전문가 그룹의 확충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한편, 동북아에는 몇 가지 긴급한 정치적 현안이 존재하는데 한반도의 정치상황도 그 중 하나다. 만약 동북아 지역기구가 설립되면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정치 환경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북아의 지역안보가 상당부분 한반도의 정세와 안보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군사 활동은 남북 간 통합 수준에 보조를 맞추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 교류와 비즈니스 인프라는 더욱 확대되는 반면,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군사적 인프라는 축소되거나 단계적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동시에 안보 현안과 관련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정보 교류는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질문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통일 이후에는 남한이 아니라 통일한국이 동북아의 주요 행위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남한이 통일과정을 촉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시나리오 1]

북한이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 돌입한다.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은 제법 길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 실제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지향적인 시민을 육성하며 관료들이 생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적 개방 통계 시스템의 확립으로 이 단계들은 국내외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의 신호로 이해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 강국들은 현대적 통계 서비스, 국내 통신 체계, 그리고 시골지역에서의 협동조합과 같이 당장에 필요한 수많은 제도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의 정상화 역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동북아 역내 강국들이 다른 몇 가지 이유로 종종 서로 대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북아에서 공동의 외교·안보·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 모두는 시장경제, 지역 및 세계경제

와 더불어 무역과 투자 교류, 유엔 안보리 결정과 일치되는 지역 안보 정책, 인도주의적 교류 등 북한을 정상국가화 하기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에 동의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지역 국가들과 한국에게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정치, 경제, 안보적 결정의 실현을 위한 인내, 혹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긍정적인 선언,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결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선언은 국내 거주자나 혹은 해외 관찰자 등 다른 그룹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의 이미지를 급격하게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국내외 정책의 새로운 경향만으로도 새로운 북한 정권의 실제 정책적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1) 국내 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단계적 전환
- (2)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남북 간 협력에서의 대립의 전환, 미사일과 핵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에서 지역 국가들과의 대화
- (3) 국내외 정책에 있어서는 고립된 사회에서 개방적 사회로의 전환과 군대 감축

남한과 지역 강국들은 북한의 체제 이행기 동안 정치·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 통합의 일부로서 (남북한 통합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된) 통일의 첫 번째 단계와 통일한국에서 지역 강국들은 남북 간 통합과정에서 그들의 경제적 입지를 분명히 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도 참여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시나리오 2]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할 경우이다. 이 경우 북한은 포괄적인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남북 간 대화와 비핵화에 대한 통제를 맞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들 하에서 한반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대하게 될 것이다. 지역 강국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사이의 협력 혹은 경쟁이라는 전략적 대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이 주변 강국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다자간 논의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한국이 동북아지역과 국제적 차원에서 통일한국의 대내외 정책의 실현 가능한 모델과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면 이는 지역 강국들이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한 관점을 통합하는데 상당히 용이하게 작용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비전으로 지역 강국들이 경제적 발전과 번영, 민주적인 사회 건설, 그리고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외국의 파트너들에게 통일한국이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미래의 다자적 안보·정치·경제 협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상호 정치·안보·경제적 이익을 존중할 준비가 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IV. 러시아-2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오늘날 한반도는 대체로 러시아정부의 특별한 관심사는 아니며 러시아 당국이 면밀하게 살피는 지역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심각한 내부적 문제로 움츠러들었던 러시아는 강대국, 즉 태평양 강국으로서 자국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한반도 문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일정 부분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인식과 접근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러시아만의 시각 부재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의 해법에 관한 이해 부족(6자회담의 구상에 관한 러시아의 노력은 제외하고)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이러한 태도를 한국에 대한 오만 혹은 이 지역을 소홀히 다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오히려 러시아가 자국의 대내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통적인 유럽 대서양 중심적 접근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국의 입장 변화를 반복적으로 언급해왔고, 최근 몇 년 간 정책 방향에서 러시아 정부의 결정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외교정책에서 아시아트랙의 중요성은 아

직 러시아 대중의 의식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러시아 기업을 위해 중요한 지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러시아정부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정책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도 아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지난 2세기 동안 러시아의 최고위층이 아시아에서 자국의 주도권이 위협받는다 고 인식할 때마다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이 이따금씩 변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러한 실질적 위협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 극동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계책을 꾸미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반면, 21세기 첫 10년 동안 러시아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국의 태평양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2009년 5월 12일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이 서명한 ‘러시아 국방전략 2020(Russia’s National Security to 2020)’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전략에는 아태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전 세계의 국제정책에 불안감을 심어주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한반도 정세임을 예외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한반도로부터의 위협이 실재하는 것인지에 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강대국 중심의 글로벌 이슈의 존재에 관한 언급에 가깝다.

사실, 러시아 당국과 국민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한반도에서의 위협보다 미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가상 위협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심지어 한반도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그러한 위협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극동 러시아 남부지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3년 응답자의 12%, 2008년에는 단지 6%의 응답자만이 한반도의 갈등을 러시아 이해관계와 안보

에서의 주요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해 한반도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극동지역과 심지어 연해주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의 상당수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지만 이는 잠시뿐이었다. 러시아인들은 ‘부정확한 러시아의 정책’, ‘패권적인 미국의 정책’, ‘중국의 정치적·군사적 성장’, 그리고 ‘테러리즘과 같은 추상적 위협이 러시아 영토와 매우 가까운 지역인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기운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과 정치엘리트, 그리고 러시아 주류 언론은 이 문제에 관해 늘 무관심으로 대응해왔으며 한반도 문제가 무시되어도 좋을,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취급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민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한반도 문제가 극동지역 사람들에게 심각한 걱정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남북한이 어느 정도까지는 러시아인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는 남북한과의 관계에 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32%)은 한·러관계가 ‘좋다’고 응답하였고, 4명 가운데 1명(23%)은 북·러관계가 ‘좋다’고 답했다. 러시아와 남북한 사이의 관계가 ‘나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반면, 상당한 비율의 응답자(25~27%)가 이러한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남북한 모두와의 관계에 관한 전망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

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황과 한·러 관계에 대한 전망에 관한 긍정적 평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남북한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발전을 위한 과정을 채택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러시아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수립·추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러시아는 신뢰할 수 있는 태평양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또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상당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지금의 북한지역에서 외부 군대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또한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패권국가임을 자처하는 외부 행위자인 미국, 중국과의 협력에 있어서 러시아가 자국의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와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러시아는 아태지역에서 주로 경제적 특성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비밀주의와 자기 고립 등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전략 계획을 수행하는데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7Km에 불과하지만 북한과의 주요 국경 및 해안지역과 인접한 러시아 태평양 지역, 그 중에서도 남쪽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미래 한반도의 발전은 사회·경제적으로 이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선 러시아가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 개념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극동지역 및 시베리아와 같은 러시아의

동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러시아의 긴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은 미래 근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견지에서 이 두 가지 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인한 '외교정책개념(The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은 21세기의 첫 10년 동안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주요 목표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경제 부흥 프로그램 추진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동북아의 분명하고 공정한 안보 구도를 창출하며, 나아가 아태지역의 통합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동·시베리아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하는 문제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러시아가 자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전체 러시아는 물론, 독립된 지역으로서의 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한적인 통합 가능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러시아에 지금까지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협력 분야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남·북·러 가스관의 건설이다. 물론,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동북아의 현 상황에서는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가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외국 자본의 투자 활동 위축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통일효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분쟁 지역 중 하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현재 이 지역의 군비 경쟁과 정치적 불안정의 근원이자 원인이 되고 있다.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선 한반도와 이웃하고 있는 러시아의 영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단지 위협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 잠재력의 비전문적 사용과 러시아 영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인재에 의한 기존의 위협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지역 내에 난민, 무기의 무단 사용, 테러리즘 등 사회 불안과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과 같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전통적 위협 또한 사라질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최근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세계 인구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떠올리고 있다. 즉,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로의 분단이 원인이 된 폭발하기 쉬운 한반도 정세, 핵무기와 그 운송수단을 완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북한 정권의 군사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와 유사한 관계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거주자들에게도 충분히 적용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남쪽에서는 다른 요소들 역시 적용된다. 바로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극동지역 소비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남한과의 경제적 관계, 극동지역에서의 고려인들의 역사적 존재, 마지막으로 남북한과 러시아정부 간 관계의 특성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하게 될 남한에서 한국의 최고지도자가 러시아 동 시베리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이 세계와 지역 경제의 축이 되는 것을 원하는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 지도자들이 이러한 계획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 기간 중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과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당사국간의 상호이익’을 언급하는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담을 위한 러시아의 준비와 극동 및 동 시베리아지역 산업 잠재력 개발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회담의 막바지에는 양국이 서 캄차카(Kamchatka)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 극동·시베리아의 개발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한반도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개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을 위한 복합 개발, 극동·시베리아에서의 항만 네트워크 발전 등을 포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준비 조치에 서명하였다.

2000년 남북한 간의 철도 시스템 통합을 위한 합의에 이어 차후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통 회랑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문제는 러시아와 남북한 지도자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였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은 10~12일 동안 최대 20만 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화물열차를 공유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이는

다른 어떤 형태의 운송수단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에 비해 운송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사이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협력을 국경 너머로 확대하는 기회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8월, 전 러시아 극동연방주 대통령 전권대표이자 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인 빅토르 이샤예프(Viktor Ishayev)가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의 접견에서 이샤예프는 한반도를 관통하고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를 비롯해 원유 가스관 건설, 채탄 분야의 발전, 원유와 가스 생산 분야에서의 협력, 남·북·러 사이의 3자 간 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러시아의 자원과 기술, 남한과 북한의 노동력)의 계획(에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추가 계획 프로그램은 오늘날 러시아 경제의 근대화를 위한 우선순위 중 하나로 발표된 바 있는 극동·시베리아 지역의 발전을 확실하게 견인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1) 대만의 중국에 대한 접근과 한국의 통일은 향후 15~2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국제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와 유라시아의 안보 환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의 통일(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

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전체에 불안정 상태가 전이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의 통일과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위협의 소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놓고 현재 중국과 미국, 일본의 정치적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정치 체계인 협상테이블 즉, 6자회담이 자동적으로 소멸함을 의미한다.

독자적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중 간 고조되고 있는 대결 구도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정의하는 것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를 증강하고 극동지역 국경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지역 안정 유지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동북아는 ‘강대국들의 아시아 클럽’이 되고 있다.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차치하고 한국마저도 강대국 지위를 얻기 위해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는 한국이 강대국 클럽에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통일은 분명 군사력의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아시안 클럽에는 많은 모순, 상호 간 분노, 그리고 상처가 있는 반면, 힘에 의한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 상호이해 역시 존재한다.

동북아에서 핵무기 확산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제어 가능하지만 이를 중단시키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결정이 핵무기냐 아니냐의 논의를

무력화시킬 그저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한국의 통일 이후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점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은 이러한 무기들의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날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 가능성을 과거 냉전시기와 비교한다면 아마도 더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억제 메커니즘이 실패한다면 전쟁의 규모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강대국에 의해 유지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모든 강대국들은 5세대 무기와 군사기술을 완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이 클럽에 속한 개별 국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사용될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다음 단계의 도약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국제적 행위자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쟁에서 누군가는 승자가 될 것이고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우리가 논의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 (3)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통일한국의 존재를 또 하나의 강력한 국가의 출현으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정치권과 군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강경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는 것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그리 우호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며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러시아의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한반도에서 인구통계학적으로 과전압이 흐를 경우 통일 이후 남북한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이는 현재의 북한지역에 남한 주민들의 이주를 허용함으로써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영토는 최소한 발해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당시로부터 한국인의 조상들이 통치하고 있던 역사적 영토로 간주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 하던 20만 명의 한국인들이 1936년~1938년에 러시아 극동으로부터 중앙아시아로 추방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한국인과 러시아인 모두에게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다. 비록 오늘날 조심스러운 선언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러한 생각을 꿈꾸는 사람들이 남북한에 아직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초반 연해주 지역 사회가 고려인연합회에 의해 제안된 한국인들의 민족 자치주가 연해주에 생기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되 기도 하였다.

한국은 오늘날 러시아 인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디아스포라 (diaspora) 인구를 가진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만주에는 100만 명 이상의 한국계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으며, 일본에 70만 명 이상,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6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침략자로 군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의 한국은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고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국가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은 제한된 영역 내에 힘이 집중된 매우 강력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의 이웃 국가들은 미래에 (심지어 핵무기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통일한국이 현재 그들의 디아스포라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들의 생활 영역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국의 통일이 부정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반도의 북쪽, 즉 지금의 북한지역에서 한국의 투자가 다소 애국적 방향으로 전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업에 시달리고 정착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제대 군인, 이전에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공장에 고용되었던 일시 해고 노동자 등)이 또 하나의 거대한 집단을 형성할 경우 이들은 해외 진출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국경을 넘게 된다면 러시아를 비롯한 한국의 이웃 국가들에게 부담을 안겨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단독으로 국가의 통일과 관련된 경제·사회·도덕적 부담을 모두 감당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한국은 특히,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우려를 자아낼 수도 있다.

우선, 한국은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로드맵(road map)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최소한 유엔 안보리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정치·경제 문제에서 국제적 참관인의 참여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비무장 과정, 그리고 한국의 통일과정에 대한 국제적인 모니터링이 포함될 것이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본인이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의 범위 내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두고 싶다. 러시아는 2008년 외교정책 개념(The Foreign Policy Concep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08)을 통해 “동북아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남북한 간 대화를 촉진하며, 남북한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활동적 참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러시아의 외교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러시아는 2013년, 새로운 외교정책개념을 통해 “호혜적 협력을 토대로 남북한과의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남북 사이의 대화와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남북한과의 대외관계에서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는 이 지역에서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반도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북한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북한이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러시아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점진적인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통일과 상호 적응, 그리고 점진적 화해의 토대 위에서 북한은 개방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남북은 상호 간의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적응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한국인들의 전 세대는 상당히 다른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시스템 하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상당히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압박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가끔은 서로 적대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설정해 왔으며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분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민족 공동체가 사회 평화와 상호이해를 구축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국가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입장에서 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필수 전제조건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러

시아의 연해주 주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인질이 되고 있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러시아 역시 2013 외교정책개념에서 “러시아는 항상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회담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남동쪽 국경의 안전 보장과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에서 모든 카드를 소진한 것은 아니다. 외교 부문, 양자 및 다자간 주요 경제협력 프로젝트 구성과 시행, 그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관계 형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요 도발이 주로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 프로그램의 실행이라는 점에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에너지 보전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대가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단독으로 혹은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 지도부를 압박하려고 시도할 것이며 자체적으로는 국내 사회·경제 문제를 결정하려는 북한 지도부에 앞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동의 위협은 6자회담의 출범으로 이어

졌는데 불행하게도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같은 협상테이블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가운데 다양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기본 목표는 동일하더라도 그들의 세부적인 목표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듯 참가국들의 동상이몽은 결국 북한에게 그들의 책략이 통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주어 항상 6자회담을 실패의 위기로 몰아넣곤 했다.

러시아정부는 종종 공개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표명해왔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이러한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채널과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확실한 협력 모델을 창출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를 만드는 일은 이러한 채널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러시아의 입장에서 6자회담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데에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지도부는 한반도 문제를 안정시킬 계획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효과적인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는 달리 러시아는 이 지역의 평화를 제외하고는 한반도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비핵화만을 바라는 유일한 경제 용병인 러시아는 남·북·러 가스관과 한반도 중단철도의 건설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경제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채널을 개통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몇 가지 편익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다자간 구도의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은 양자 간 협정을 통해 3자간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북한과의 상호원조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이러한 선택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러시아는 6자회담을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러시아는 모든 참가국들에게 정치·외교적 수단을 적절하게 보상하는 등 기본 틀 내에서 동북아 평화와 안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과 부합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만약 6자회담의 참가국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지적·문화적 성격 차이에서 비롯되는 전면적 도전에 압도되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대응 모색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러시아는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최근 북한 당국의 발언이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굳게 믿고 있다. 2013년 5월 20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역시, 러시아가 6자회담의 재개에 관심이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러시아의 노력을 고려해보면 러시아는 전제조건 없이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재개하는데 중국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는 중국은 물론, 북한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통일한국은 세계와 지역 평화, 공동 번영, 인권, 사회 발전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 가치로 생각하고 이를 지지하며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정치·군사적 블록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지지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주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선언해야 함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IV. 러시아-3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러시아의 정치 발전이 1945년~1990년의 공산주의와 현대 민주주의의 2단계를 거쳐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기간 동안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한바 있다.

공산주의 체제 동안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자. 러시아는 1945년 한반도의 분단 이후 심각한 물질적 비용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1945년 소련 군정은 지금의 북한지역에 소련 주도의 인민위원회를 설립했고, 이어 북한은 1946년 2월에 김일성의 지휘 아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소련은 남한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경제·사회·군사 발전에 1백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1950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Djugashvil Stalin)은 한국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는 남침을 승인하였다.

러시아는 엄청난 양의 물질적 자원(군대 장비, 탄약, 음식, 약품의 조달, 소련군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북한 군인들과 장교들의 훈련)을 제공했다. 그리고 주요 손실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약 3만 명의 소련 군인들이었다.

소련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

다. 소련에 우호적인 체제 하에서의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려는 그들의 목표는 실패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서구 국가들은 독일에 민주적인 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에 착수했고, 1951년에 군사 정치 블록인 앤저스조약(ANZUS Security Treaty)과 1954년에 동남아시아 조약기구(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가 탄생하였다. 더불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군사작전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에서 소련의 이미지와 평판은 상당히 나빠졌다. 반면, 남한의 군사 작전은 유엔의 지지를 얻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했다. 1986년 말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얻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또한 북한에 경제 재건을 위한 (농업기계, 공장의 기계 설비 운송) 장비와 군대 관련(탱크, 비행기, 선박, 로켓, 총 등) 장비의 독점 사용권을 포함하는 현대식 장비를 무상 제공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은 북한에서 필요한 석유 제품 수요의 40% 이상의 공급을 책임지기도 했다. 석유 제품의 가격은 실제 시장 가격보다 저렴했다. 소비에트 연방은 발전 설비의 65%, 광석의 생산을 위한 설비의 40%, 철금속 생산 공장의 30%, 알루미늄과 석탄 생산 장비의 100%, 석유 정제소의 47%, 자동차 생산 공장의 100% 건설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빌려간 10억 달러 이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각종 경제적 계약과 합의의 이행을 거부했다.

오늘날 러시아 기업이 북한 경제에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뒤따른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극동지역의 주민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자국 국민들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원조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진전이 있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에 150만<sup>m</sup> 규모의 액화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한국으로의 가스 운송 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스 운송 경로가 북한을 통과하는 육상 운송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가스를 구입할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 북한은 만약 한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증대되면 이를 통과하는 파이프를 차단하겠다고 하며 러시아와 한국을 협박할지도 모른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단이 없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은 러시아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는데 한반도에 핵 분쟁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 영토가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 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은 2005년,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선언했고 정기적으로 지하 핵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은 핵과 탄도미사일(대포동 2호)의 움직임을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북한의 생화학 무기, 핵 시설 등이 파괴되거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의 넓은 영토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핵무기에 이어 대량살상무기,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 등 위험 물체를 북한에서 제거하는 것이 러시아 관련 전문가들의 주요 임무이다. 핵무기의 금지와 대량살상무기, 생화학 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의 완전한 폐기만이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생화학 무기, 핵무기를 파괴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남한 주도의 통일에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정치적 영향력의 약화이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막대한 경제·군사·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외교정책을 관리하며 사실상 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정치·경제 전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는 한국 영토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주요 긍정적 통일효과는 사할린(Sakhalin),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 그리고 한국을 연결하는 남·북·러 가스관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스관의 가스 공급 물량은 연간 200억<sup>m</sup>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지역의 물류 산업 역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베리아를 관통하여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로의 접근과 함께 한반도 종단철도의 건설 사업이 다시 논의될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가 될 것이

며 이 철도는 유럽 대륙과 러시아, 한국을 연결하게 될 것이다. 운송기간 또한 해상운송 때의 45일과 비교하여 2주로 크게 줄어들 것이며 컨테이너당 선적비용 역시 400 달러로 감소할 것이다.

러시아는 핵 위협이 사라지고 나면 한반도에 관광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 정부에 의해 경색된 투자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될 것이며 두만강 지역 발전 프로젝트가 유엔 개발 계획의 조정을 통해 발전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천연자원(석유, 가스, 금속, 목재)을 필요로 할 것이며 러시아는 이러한 자원의 주요 공급국이 될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미국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러시아의 국경 인근에 강한 군대가 새롭게 등장하는 셈이다. 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 있다.

한국은 군사비로 한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전략 무기를 사들이고 관련 기술 중 일부를 이전 받고 있다. 북한 역시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지에서 통일 후 러시아는 북한이라는 중요한 방산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

어쩌면 미국이 한반도 통일 후 북한에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북쪽에 새로운 미군 기지가 생긴다면 이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 이후 한반

도는 군비 경쟁과 군사기지 집중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한 이후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일단락된 이후 북한으로도 수출 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북한과 무역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석유·화학,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북한과 경제적 계약을 맺고 있으나 통일 이후에는 이를 상실할 수도 있다.

또한, 한·러 간에 진행 중인 많은 경제 프로젝트들이 위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양국 간 경제적 상호작용은 현 수준을 밑돌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국이 강력한 경제적 라이벌이라고 믿고 있다.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중국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상실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한국과 우호적인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중국은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주요 정치·경제적 라이벌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분야에서 통일한국의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현재 북한 정세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은 중국조차 북한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는 중국의 대기업인 '시양그룹(西洋集團)'의 투자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안은 500만 달러를 북한의 광산 건설에 투자했는데 이 광산은 결국 북한정부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비슷한 상황은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서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은 대규모 경제 프로젝트인 '두만강'을 시작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적 프로젝트인 '두만강'은 유엔 개발 계획에 의해 이미 승인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두만강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통일한국 3국의 접경지역에 설치될 것이다. 자유경제구역은 면적 1만 km<sup>2</sup>의 영역에 3억 명의 인구가 분포하는 지역에 유치할 계획이다.

국제 프로젝트 '두만강'에는 미국과 일본의 참여도 가능하며 세계은행 역시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향한 움직임은 주한미군의 지속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통일 후에 미군 기지의 철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비핵지대가 되어야 하며 핵 군축 과정은 철회할 수 없고 투명하며 검증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와 미국은 다자간 군비 축소 과정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본인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적 해법의 모

색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이다. 북한에서 7살 미만 유아의 62%가 기아(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37%가 만성 굶주림, 영양실조, 빈혈 등을 앓고 있다. 대규모 기아와 식량부족에서 기인한 위협은 북한 정권이 정치 통합의 전제조건인 경제 부문에서 통합 노력을 계속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한국은 국제 경제 프로젝트에 북한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통일에 5년 걸린다면 500억 달러, 30~40년이 걸린다면 5조 달러의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한국에 투자할 만한 대출기관과 투자자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 투자는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지역에는 두만강이라는 매력적인 투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는 통일한국이 단일 경제 체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 투자는 북한이 한국과의 재정적·경제적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제통합의 과정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서 새로운 기업과 공장의 설립 등 기술적 측면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북한 인적자원의 잠재력은 매우 우수하며 상당한 수의 과학기술 전문가, 교사, 의사, 공장 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는 새로운 경제관계에 적응하는 일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할 것이다. 북한에서 건설비용과 재교육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에서 처리될 것이다. 한국의 복지 성장과 경제수준은 단계적으로 북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국제 투자는 북한 주민에게 심리적 해방감을 안겨줄

것이다. 통일한국의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난 이후의 사회·정치적 통합일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 해 주십시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사실상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 소련 진영에서는 우리늄 농축과 첫 번째 우리늄 광산 건설을 지원한 바 있다. 1950년대에 북한에 핵에너지와 핵물리학 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소련과 북한은 1956년에 핵 분야 관련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고 소련은 북한에서 핵 분야 관련 300명 이상의 전문가를 훈련시켰다.

소련은 1964년에 북한에 2메가와트(Mw)급 연구용 원자로(IRT-2000)을 세웠다. 북한은 소련에 의해 1974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 가입했고 핵과 에너지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북한은 소련 전문가의 관리 하에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 핵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의 근간이 되었고 플루토늄은 북한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다음 2가지 이유로 북한의 핵 근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1) 러시아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탄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건설과 경제적 원조, 소련 핵 연구소에서 북한 인력 교육 담당).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 핵 시설에서 일한 바 있고 모든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

- (2) 러시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에 관해 비교적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핵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하여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야 한국의 제안을 고려하기 시작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 고위층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 엘리트에게 로비를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 경제활동을 통해 북한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한국은 북한 경제에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와 군사 분야의 엘리트들을 통하여 북한이 다시 핵확산방지조약과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에 심리적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 미국과 일련의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 색깔 혁명을 지지하는 미국의 공식 외교정책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과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 탄압은 국가 안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관들은 미국이 북한 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러시아는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의 긴장 상황을 풀 수 있는 국제적 협의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6자회담은 포괄적인 힘을 바탕으로 동북아 각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기구 설립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마약 운반, 자연재해 등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무역 확대, 경제적 계약, 영토분쟁 조정 등을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이러한 기구는 참가국들이 한 국가에만 의지하지 않고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

6자 회담은 각 국가의 재교육 기회를 포함하여 동북아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의제를 논의하는 열린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회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역할 증대 역시 필수적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동쪽의 제네바라 불리는 베이징 대신 다른 도시로 개최 장소를 바꾸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생각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을 관리하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핵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6자회담이 동북아에서 항구적인 논의의 틀로서 기능하기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북한은 미국, 한국, 일본이 인정하지 않지만, 핵 문제



에 관해 이미 충분한 양보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이고 탄도미사일 시험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를 지향하는 러시아 외교정책은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핵 군축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자 노력한 바 있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은 북한의 주권과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대신 핵무기를 군사적 목적의 공격 무기로 개발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소국들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한, 한국, 미국, 중국 대표의 협상을 진행시키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6자회담에 과학 지식인들과 공공 비영리 단체들을 포함시키는 활동도 필요하다. 공공 기관과 과학 지식인들은 한반도에서 핵 문제 해결과 통일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권,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은 국가의 문화와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 국가적 전통에 바탕을 두지 않고 북한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조급하게 확산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은 다음과 같은 국가적 전통을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실용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합의와 모든 쟁점에 대한 통합된 접근과 합의
- 정부를 존중하는 태도
- 사회 질서의 유지와 조화
- 사회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 교육을 사회·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유지
- 관용, 검소 그리고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심

서양의 민주적 문명에서 개인은 노예 상점과 상품으로 바뀐다. 서양 민주주의에서 현대인들은 소비지상주의의 희생양이며, 대량 소비문화는 민주적 가치를 왜곡하였다.

통일한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간의 도덕적, 정신적 교육을 책임지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서양의 모더니즘과 한국의 전통 문화 사이의 결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회악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다.

## IV. 러시아-4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반도의 분단은 러시아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식적으로 남북한은 아직 휴전 상황이고, 양측 모두는 서로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군대는 병력 수가 많으며, 한국의 군대는 그보다 수가 많지는 않으나 미국으로부터 추가적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그 뒤를 받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의 군사·정치적 긴장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국경에 추가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화된 재래식 무기를 생산하거나 얻을 기회가 없는 북한은 핵 억지력 확보라는 방법을 통해 핵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와 주변지역에 긴장을 초래한다. 북한과 한국의 군사적 충돌은 군사작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지역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을 국부 정밀 타격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나 핵무기 시제품을 실제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이 아닐 수 없다. 버섯구름은 몇 시간 안에 러시아 극동지역 국경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건강, 환경 및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

군사 작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 지역에 추가적으로 미군을 주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러시아는 북한 엘리트들의 정책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국내에서 권력과 안정을 유지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결과, 정권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한반도의 분단은 러시아가 북한이나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통한 여러 프로젝트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 러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원유와 가스관 건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에 경제적, 인도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는 구 소련이 북한에게 빌려준 110억 달러의 차관을 이미 탕감해 준 바 있다. 나머지 10억 달러는 북한의 교육, 건강, 에너지 공동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로 하였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북한에게 가해진 제재에 따르는 러시아의 비용 문제이다. 러시아는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활발한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정치·군사적 불

안정성으로 인하여 철도나 가스 파이프 건설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먼저 러시아 극동지역 국경의 긴장은 동북아 정세가 나아진다면 아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탄탄한 경제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게 될 통일한국은 주변지역의 상황을 결정하는 확실한 결정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한국이 갈등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미래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라는 존재의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완전한 철수는 러시아에게 최선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낮으므로 미국의 주둔을 최소화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통일한국은 국제관계에서 더욱 독립적 주체가 될 것이다.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 중국, 일본이라는 세 강국이 있는데, 통일한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새로운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그 결과, 러시아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정책을 수행하여 국가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관계 정상화의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한반도에서 핵 위협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부문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한국은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협력에서 러시아의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안보와 평화는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소이다. 민주적인 통일한국은 러시아의 이익을 충족시킬 것이며, 러시아는 남북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하여 급격히 발전하는 아태지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통일한국이 필요하다.

북한과 한국의 통일은 먼저 북쪽지역의 발전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실행된 다른 프로젝트에 러시아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통일한국은 러시아에 더 강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극동·시베리아의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투자와 기술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발전은 기술과 잉여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은 통일 한국의 산업을 위한 자원의 공급지가 될 수 있다.

또한, 북한과 남한 주민들의 관심에 따라 러시아와 문화 협력을 증진하고 러시아어를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한반도에서 한국의 주도 아래 통일이 이루어지면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 부대는 통일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군사적 갈등의 결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미군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까지 군대 주둔을 늘릴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원칙적 문제를 협상하는데 있어 러시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북한 핵 위기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한반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사회적 긴장으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다. 누적된 사회적 불균형으로 생활수준이 내려가면서 이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었다. 대체적으로 남북한의 통일은 북한지역에 몇 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만, 반면에 남쪽 지방 국민들의 지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쪽 지방에서도 상황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통일 후 북한 주민 대부분은 남한 주민이 적이라는 그들의 공산주의적 관점과 확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게 그들의 의견을 고수하려는 자들 또한 존재할 것이다. 특히, 소수의 신봉자들이 특히, 새로운

정부가 과거를 잊고 화해하는 대신에 구공산주의 엘리트와 지지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면 이를 배신의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 결과로 공산주의 게릴라와 테러리스트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많은 인민군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한 그룹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 합리적인 방법은 나라를 떠나거나, 후원자를 찾거나, 혹은 고국에서 테러리스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일정 수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조직 범죄단에 가입할 것이다. 위의 모든 것은 한반도를 사회적, 군사적 위험 지역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여러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에 이르려면 1~5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한국의 GDP 보다 몇 배나 높은 수치이나 현재 그런 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영토에 한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에너지 운송을 위한 가스관 프로젝트나 몇 개의 다른 프로젝트 또한 연기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이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러시아로 불법 이민이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과 남한이 점진적·계획적으로 통일을 이루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의 각 단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통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북한지역에 대한 북한정권의 통제력은 완화될 것이며 그 결과, 혁명이나 급격한 체제 변화를 포함하여 불안정한 국민들의 시위, 통제되지 않은 이민 등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것이다. 중국은 세력균형 차원에서 갈등을 포함한 부정적인 변화를 겪을 것이며, 북한 엘리트에게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갈등은 세계경제와 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을 중국,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당사국들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러시아는 무력에 의한 외세의 개입이 아닌, 국가와 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바탕을 두고 남북한의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식이라면, 통일한국의 어떤 시나리오나 방식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통합의 형태는 국가연합의 모델이 최선일 수 있다. 국가연합의 구조는 입법, 국제관계, 국방, 경제, 사회 정책에서 각각 최고 권위를 가지는 2개의 시스템, 2개의 정부가 결합된 형태의 통합방식이다.

중국식 개념인 ‘1국가, 2체제’가 한반도 통일의 첫 번째 단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요소일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35~40년 계획을 채택하는 것은 최적의 구상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통일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한 아나톨리 우트킨(Anatoliy Utkin)을 비롯한 몇몇 러시아 학자들의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은 향후 향상될 생활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과정에서 남북한의 관계 정상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상화는 지도층과 일반 국민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적 구호로 얼룩진 지난 몇 십 년 동안 두 국가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신화,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 왔다.

동시에 통일의 장기적, 단계적인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은 북한과 한국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 두 나라의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협상에 참여했던 참가국들의 지원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한반도 통일은 정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40~50년 이내의 가까운 미래일지라도 통일국가의 구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서서히 진행되는 자유화, 민주화로 북한 지도층이 상황을 통제하고 유지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이는 발전된 계획 실행을 방해하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국가연합 다음 단계의 통일한국 체제를 예측하고 기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재는 국가연합이 양자 관계에서 가장 실현 가능한 돌파구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천천히 북한을 흡수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이에

관심이 없고 이런 방식의 한반도 통일은 현 세계정세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한국과 북한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예비 단계 중 하나는 개성이나 금강산과 유사한 특화된 경제구역 내에서 협력을 증대시키는 일일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된 업무는 새로운 가치, 북한의 행동 모델을 형성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와 모델이 만들어지면 북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 한국이 상호 간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는 현재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한 중대한 문제 중 하나는 각각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평화조약은 관계를 정상화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개방적이고 평화적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어떤 군사적 위협이나 정치적 압박 없이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국제관계의 예민한 문제점들을 건설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러시아 대북정책의 핵심이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국가 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간섭의 열린 정책을 보여주었다. 러시아는 외부 간섭 없는 평화적, 민주적인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한국이 긴장의 근원을 제거하고 지역에서 신뢰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러시아의 평화정책의 결과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이전보다 향상되었고, 두 나라의 통치자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추후 한반도에서 핵 문제 관련 다자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하도

록 설득하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북한의 주권을 보장해주기를 원한다.

6자회담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어떠한 갈등도 없이 핵 위기를 해결하고 북한을 핵확산 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핵국가로 다시 돌아오도록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견고하며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세계정세를 고려해 볼 때, 러시아의 첫 번째 임무는 동북아에서 집단 안보 체제를 창설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역내 약소국가들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세계안보를 탐구·논의하고 북한과 남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중재하기 위하여 세계 포럼, 과학 학회의 조직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한반도에서 안정을 유지
-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성장의 동력
- 중재자로서 한국 및 역내 다른 국가들과 경제협력 발전
- 한반도에서 러시아로의 이민을 규제

러시아는 특히, 경제와 인도주의 정책에서 북한의 지위가 유지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러시아의 장기 이익의 관점에서 제재 참여의 효율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현 상황과 주변지역에서 안보를 강화하고 양자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고려하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유연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상징적인 것일 수 있다. 한반도 중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수송하기 위한 하산-나진(Hassan-Rajin) 철도의 건설은 프로젝트를 부흥시키기 위한 좋은 예일 것이다.

러시아 철도 프로젝트의 주관사인 러시아 철도공사는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단호한 행동은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젝트 실행이 연기된다면 이에 관한 러시아 통치자가 발표한 성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잇는 사업에 관심이 있음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고, 러시아로부터 한국까지 가스 파이프라인과 송전선 건설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정치적 위협으로 인해 삼자 참여 프로젝트에 조심스럽지만, 러시아가 위협을 감수한다면 한국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남·북·러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가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온다면 한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위한 프로젝트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핵화에 관한 협상 도중에 북한 핵 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토론을 위한 입장 표명은 미리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경수 원자료와 핵 발전소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북한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985년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련과의 합의는 아직 유효하다. 그러나 그런 프로젝트는 불가피하고 엄격한 경쟁으로 실행이 어렵다. 북한이 국제적 요구사항과 의무를 준

수한다면 국제 우라늄 농축 센터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은 더 희망적일 것이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발전은 다음의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 북한의 과학 기술을 발전
- 북한 주민들에게 성공적인 국가 발전 과시
- 군부의 높은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내 정권 강화
- 국가안보에 필요한 추가 조건 마련
- 세계 공동체로부터 원조를 얻기 위한 압박의 수단
- 에너지 독립
- 미사일 기술 판매를 포함한 국가의 수출 능력 제고

위에 언급한 문제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집중하는 협상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이 미래에 비핵화를 선언하여 핵 개발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비핵화는 외부 위협이 없고 내부 정치 상황이 통제 하에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북한 지도부가 충성을 다 하지 않거나 교체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 비핵화는 북한 지도부가 바뀌는 여러 세대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북한이 우려하는 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의 공통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북한 핵 잠재력의 완전한 폐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동북아 지역의 강력한 집단 안보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군사적 위험은 증대될 것이다.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특수한 지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요구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받아들일도록 하여 북한의 현존 핵·미사일 잠재력을 동결하는 것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 핵무기 자유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비군사 체제가 확립될 때를 대비하여, 무기 폐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이를 6개국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갈등 조정 과정에 관여하고자 한다. 이는 안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강대국으로서 일정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었다.

갈등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특수하다. 러시아는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완화하고자 하므로 세력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북한은 협상에 러시아를 포함시키려 한다.

한국을 위해 러시아는 협상의 다른 파트너 중국, 일본, 미국의 영향을 조정하려 할 것이다. 한국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국, 일본,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전략적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개별 국가가 한반도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강화하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긴장과 군사적 대치의 완화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것이 이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긍정적이고 북한과 한국의 대화를 촉진하려 하지만, 완전한 통일한국에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6자회담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의제들이 미해결 된 채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자회담의 공백기에 러시아는 예전 참가 국가들, 유엔(공식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에 참여),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참가시켜서 다자 외교 회담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평화 체제의 토대를 위한 다자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지도 아래 평화와 안보 체제를 만들기 위한 실무진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원칙을 포함한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안보를 위한 다자 체제의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임을 모든 행위자들이 동의해야 한다. 모든 참가국들이 믿을 만하고 효율적인 안보 체제 발전에 집중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이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는 실현 가능한 통일 이후 한국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전구 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 TMD)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군사적 주둔은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구상은 미국의 지도 아래 북한을 겨냥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인데 이는 주변 국가들 간에 공격성과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양자 협의와 회담을 자주 갖는 것이다. 6자회담의 참가국과 역내 다른 국가들은 적어도 현 상태를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들은 각자의 전망을 가지고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각각 양자 협상을 통해 서로 그들의 지위를 조율할 수 있으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안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만들 수 있다.

핵실험을 막기 위한 방법과 같은 현안을 토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6개국의 정례실무회의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6자회담 협상은 동북아에서 아직 영구적인 논의의 장이 되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중국은 미·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적 압력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아에서 군사·정치적 긴장을 증대시킬 것이다.

햇볕정책의 활성화는 한반도에서 6자회담과 다른 형태로 협의를 촉진하여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상과 협력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북한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여하지 않고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므로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세계화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협력과 상호원조, 그리고 관용의 원칙은 가장 중시된 가치였다.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상호 존중과 협력 원칙의 바탕 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 중요한 임무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그들의 기억에서 지우는 것이다. 나이가 많은 노인 세대는 여전히 무의식중에 북한과 한국을 서로의 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한, 전쟁에 참여했던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 국민이 그들의 생활방식을 적용

하려는 시도를 하면 거세게 저항할 것이며 역시 상대를 공격자로 인식할 것이다.

통일의 개념은 유혈사태, 증오, 적개심이 없는 바람직한 미래로 갈 수 있는 돌파구로써 인본주의적 잠재성을 의미해야 한다.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바람이 형성·표출되어야 한다. 사회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있다. 그들은 통일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 영토 발전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할 비용을 희생하여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지도층은 통일한국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민을 갈 기회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실, 통일은 자립 보장과 상호존중의 가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만약 북한에서 현재의 지배적 가치(공산주의)를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가치의 중대한 갈등이며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 장애가 될 것이다.

통일과정이 아마도 자본주의의 원칙에 기반을 둘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사회, 경제, 기술, 생활환경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건전한 한국의 민족주의는 현재의 모순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는 분단된 두 개의 한국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전한 민족주의는 남북한 지도자의 만남을 촉진할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보다 동맹국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것이

며, 많은 경우에 동맹관계의 대립은 남북 간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게다가 건강한 민족주의는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및 지원(햇볕정책)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의해 시작된 이 정책은 추가적 협력과 새로운 협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국가 정책으로서 건강한 민족주의만이 북한에 어떠한 양보도 요구하지 않고 한국이 중요한 경제에 투자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양자관계에서 상호 신뢰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근간이 될 것이다.

## IV. 러시아-5

##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

## 1.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귀국이 지불하고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분단 비용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논의의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분단비용이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태지역 정책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 즉, 사회 근대화와 국내경제의 부흥을 위해 외부 자본의 접근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정부가 채택한 주요 문서, 러시아 연방의 ‘외교정책개념’과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국가 계획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전략 지침이자 목표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라는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아태지역으로의 회귀’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러시아는 미래 계획을 지역 파트너들과 조율하는 단계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는 고립주의를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국가이며, 이웃국가들과 협력을 증대, 심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셋째, 단기적으로 에너지 외교는 러시아의 아태지역 정책에서 핵심적 수단으로 남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과제는 에너지 외교

를 수단으로 하여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성장한 다른 분야로 협력을 발전·강화하는데 있다. 이는 태평양 지역의 인근 국가들로부터 투자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역량을 배우며, 대기업 간 결속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아태지역에서 러시아 정책의 시급한 우선순위는 스마트 파워 (smart power)의 잠재력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러시아와 그 외교정책의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글로벌 수준에서 자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치·경제·안보적 인지도 제고가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러시아 외교정책의 기본 조건이자 한반도 정세와 같은 개별 사례연구를 다루는 출발점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간주해야 한다.

### — 군사·안보적 측면

한반도의 분단은 다음의 이유로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한반도 정세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우선적으로 이는 핵·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지역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이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안정을 필요로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러시아의 이런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첫 번째 내용과 유사한데 주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 즉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경쟁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역적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러시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전략적 사고 과정에서 우선순위인 경제 발전과 협력을 어렵게 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을 자처하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이 국제적 핵 비확산 체제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은 평판이나 안보적 측면 모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태지역의 인근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극동·시베리아의 근대화를 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현재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볼 때 그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첫째,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근대화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인프라 발전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인프라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국제화될 경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다른 파트너들이 주도하여 실행하는 한반도 종단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극동·시베리아 지역 근대화의 핵심 요소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를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결할 수 있다면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의 인프라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위와는 별개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제적·전략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남·북·러 가스관의 건설을 예로 들어보자. 이론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미 러시아에 유형의 편익을 가져다주었거나, 혹은 미래에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

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스의 가격이 다소 비싸고 계약기간도 길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제외하면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고,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중국과 가스 수출 협상에서 비장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데 러시아 가스 에너지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이미 강조한 바대로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국가와 장래 계획을 조율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우선순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2012년에 러시아가 핵심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인 수송과 물류 인프라의 윤곽을 잡았고, 인도네시아 역시 APEC 경제의 연결성 제고에 주목하고 있다. 연결성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동남아 국가들과 관계를 다변화하고 강화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반도 종단 프로젝트의 실행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고,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정책 슬로건은 행동으로 구체화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태지역 국가와 세계 다른 지역의 파트너들 간의 화물 물동량 증대에 대한 현실적 전망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잠재적 가능성을 포함한 운송 인프라를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원대한 계획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 - 사회·문화적 측면

한반도의 분단은 러시아의 이익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몇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러시아의 대(對)아태지역 정책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포함하는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확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한 예로 아태지역의 파트너 국가들이 실행하는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동북아 정세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어, 다수의 민감한 현안을 놓고 중국, 일본, 한국이 깊은 문화적 반목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동북아에서 인도적 협력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국가 간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적 협력 부문에서 러시아가 활동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른 측면은 한국 정치인들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인도적 관계의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구 소련이 한국전쟁에서 남한의 적국이었음을 상기시키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기인하는데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외교 정책 토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러관계가 불시에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억제되지 않은 핵과 미사일 도발은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극동국립대학교(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를 기반으로 다자간 대화의 장을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계획과 교육 및 혁신 분야 관련 문제에 관한 논의를 더욱 북

잡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이러한 모든 상황이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정책 실행을 더디게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러시아는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 중립 세력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한국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은 대개 한국전쟁과 KAL기 피격 사건 등 현재나 미래가 아닌 과거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단언컨대, 현재와 관련 있는 단 하나의 요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의 인식이다.

## 2.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누리게 될 긍정적인 통일효과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전 질문에 대한 답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단 몇 가지 요점을 간추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 - 군사·안보적 측면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북해 라인과 관련된 문제는 예상했던 것처럼 풀릴 것이고,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의 중요한 갈등 요소 역시 제거될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러시아의 장기 과제인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국제 원자력 통제 규범의 틀을 벗어난 핵무기의 문제는 없어질 것이

며, 러시아 역시 이를 환영할 것이다.

반면, 윈윈(win-win)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통일한국이 중립국가로 남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아태지역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현존하는 세력균형을 위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중립국이 된다면 이는 러시아에게 우호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 - 경제·사회·문화적 측면

통일한국은 러시아에 한반도 종단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줄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의 통일이 지역 환경이 더 안정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중요한 대외적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태의 전환으로 인해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노동 이민을 더 잘 규제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통일한국과의 협력 전망은 밝은 편이다.

또한, 러시아는 유·무형의 이미지를 덤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볼 또 다른 측면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실질적 차원에서의 개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아태지역으로의 회귀 정책과 함께 역내 다른 국가들의 근대화 전략을 배우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이 북한의 악화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경제통합을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비록 자신들의 자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동원 경험과 높은 수준의 동원 잠재력과 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 살펴보면 러시아가 어떤 방법으로 근대화 를 추진할지 결정하는 데 소중한 지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할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행동 으로부터 경험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대 와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러시아 스포츠 외교의 확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스포츠 외교의 견고한 방향성과 정책 수행 은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는 22번째, 한국은 23번째 로 올림픽을 유치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대한민국 주도로 한반도 통일이 될 경우 귀국이 감수해야 할 부정적 인 통일 효과는 무엇입니까?

#### － 군사·안보적 측면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통일한국이 중립국으로 머물지 여부에 통일 효과의 성격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통일한국 이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는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몇 가지 사항은 앞서 기술한 부분과 대동소이 (大同小異)하다.

위의 시나리오는 심대한 해상 안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관계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를 시도하면서 이 문제는 질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음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다오위다오(釣漁島) 등 분쟁 지역의 섬들에 대한 주권 문제보다 지정학적 라이벌인 미·중이 동아시아 해상에서 벌이는 대결 구도에 더 주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러시아는 가장 타협하기 힘든 상대가 중국과 베트남임을 이해하고 있고, 이들과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문제 해결 접근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이 학문적인 단계에서까지 해양 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재자로 활동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에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 더욱 상황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국내외의 걱정스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이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즉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아태지역 해상에서 전략적 상황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는 아태지역에 미국 미사일방어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최근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에 가입하는 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지역에 미국 군사 인프라이가 배치되는 것은 러시아에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이다. 러시아 국경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군국화는 러시아의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 - 경제적 측면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 지역에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 부문을 포함하여 한국의 우선순위는 북쪽, 지금의 북한지역 개발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이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 -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문화 부문에서 민족주의의 부흥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통일한국은 지금까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의 정치·군사적 결속 강화는 통일한국은 물론, 그 이웃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관계 특히, 고구려사 문제 역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과의 여러 민감한 사안도 다시 부각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의 국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문화와 인도주의 부문에서 동북아 국가와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는 러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다.

4. 질문 3에서 언급된 부정적 통일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중립적 위치에 서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한국이 단지 군사적인 주체가 되기보다는 윈윈(win-win) 전략을 토대로 한 경제 지역주의의 진행과정을 육성, 심화, 다변화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지역 행위자로서 지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협력은 부정적인 통일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적어도 불가피한 통일 비용에 대한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비용에 대한 공포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먼저 안전한 토대와 체제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 과정에는 매우 많은 자원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부문에서 대규모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민족주의 요소는 아직까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인접 국가들 간에 가치에 관한 대화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볼 때 5자회담의 대표들 간에 신뢰와 공동 가치를 쌓기 위한 특화된 대화의 장을 구축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이러한 구상은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5. 한반도가 통일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통일 과정에 대해 귀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통일과정을 진행하는 가장 이로운 방법은 양면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첫 번째 방향은 5자 회담의 과정 안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또한, 5개 참가국들은 동북아의 전반적 안보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는

한반도 통일 같은 난제 등 개별 국가의 문제는 성공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과정이 느리고 고통스럽고 가끔은 실망스럽더라도 북한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북한을 제재·압박하는 것은 소용이 없으며, 심지어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전략은 이념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북한정권이 매우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된 바 있다. 그렇다면 독재, 악의 축과 같은 적대적인 표현은 역효과를 낼 가능성을 높다.

##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귀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 조언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만약 동북아에서 전체적인 안보 상황이 개선된다면 북한의 핵 문제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의 지하 핵 실험은 지역과 세계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지역의 경제·안보 행위자를 포괄하여 지역안보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공



조와 공동의 접근법을 제안할 수 있는 다자회담을 출범시키는 것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돌려 말하자면,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6자 회담 대신에 5자회담의 재개일 수도 있다. 이 협상의 참여자들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가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중요한 안보 체제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동북아에는 평화와 안보 체제를 위한 토대가 있고 이를 러시아가 주재한 바 있다.

이 단계를 위한 추가적 논쟁은 다음의 현실에서 기인한다. 아태지역에서 현존하는 전략적 견제와 균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주도하고 있으며, 소위 이 집단 안보 체제는 크건 작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불만인 듯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은 현재 상황과 관계가 있다. 이 협력은 북한과 관계된 일련의 문제점과 지역 쟁점들을 처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을 살펴보면 토론은 매년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낸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5자회담의 잠재력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방법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익한 해법이 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구축을 위한 지역 요소로써 동북아의 평화, 안보, 상호신뢰와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체제를 확립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외교정책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관해 비유적으로 조언을 한다면 채찍은 줄이고 당근은 더 주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채찍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반대로 당근의 가장 중요한 예시인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는 더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강조하고 싶

은 또 다른 점은 이러한 ‘당근정책’을 위한 정보의 배경이 적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7.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 논의하는 동아시아의 합의체에 대한 귀국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합의체의 유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식적 채널을 통해 러시아는 6자회담의 재개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이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본 원인은 6자회담 협상에 북한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냉혹한 현실에 있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량하는 등 질적으로 진일보한 셈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핵 개발 포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판단은 북한이 경제와 핵전략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4월 개정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는 등 핵 보유를 합리화하는 최근 행보에 기초한 것이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의 이익 충돌은 심화되었고, 북한은 반사 이익을 얻었다. 이 경험은 긍정적이라기보다 부정적인 것에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5자회담 참가국에 의해 재개념화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다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론에 대한 언급은 빠진 채 주요 문서가 6자회담에서 채택되었고, 이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돌파구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북한의 도발과 위기 발생(협상과 일부 핵 시설의 폐기를 빌미로 경제적 원조 획득), 새로운 도발과 위기라는 악순환을 이어왔다.

요약하자면, 6자회담은 그들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회담의 재개 또한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타개할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 회담은 매우 중요한 결과를 남겼다. 6자 회담은 동북아 강대국들 간의 빈번한 대화를 발전시켰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안보에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통일한국의 가치

### 8. 한국이 통일을 이룬 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통일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과 통일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될 경우 통일한국의 가치와 여러 세부사항을 전망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몇 가지의 요점을 언급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1) 중립성

통일한국은 중립세력으로 동북아의 전략 상황을 고조시키거나 동북아 핵심 행위자들 사이의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2) 경제중심주의

통일한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win-win)개념에 기초한 경제협력 증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아태지역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3) 관용과 책임

통일 이후에 한국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수한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남북 주민을 구분 짓는 선을 그리지 않는다면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과 관련하여 5자회담 참가국들 사이에 가치에 관한 정책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고자 하며,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은 다자회담의 중요한 논점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각국의 문제들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전반적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은 안보 체제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확립하고 참가국들은 그 가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배정호. “한반도 통일의 비전과 가치.”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You, Ji.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향한 경로 관리: 중국적 방법.” 배정호 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2. 논문

- 스인홍. “미·중 신형대국관계와 중국의 대전략 구상 그리고 한·중협력.” 한·중 국제세미나 『동북아의 평화변영과 한·중의 전략적 협력』. 2013.9.4.
- Kim, Hong N. “Japan’s Policy toward the Two Koreas and Korea Unification.” Young Hoon Kang and Yong Soon Yim (eds.), *Politics of Korean Reunifica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8.
- Lewis, Peter M. “US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 Anti-Unification Policy or Just Too Many Uncertainties to Account For?,”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2, 2007.
- Manyin, Mark E. Emma Chanlett-Avery and Mary Beth Nikitin. “U.S.-South Korea Relati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May 15, 2012.

Mizin, Victor. "Russia's Core Issues." *New Approach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Breaking the Gridlock Workshop*. Washington D.C., October 2012.

Nakato, Sachio. "Costs and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for Japan: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Kyuroon Kim and Jae-Jeok Park (eds.),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

Petrov, Leonid. "Russia's 'Power Politics' and North Korea." *International Issues & Slovak Foreign Policy Affairs*. Vol. 27, No. 2, 2008.

Satake, Tomohiko.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Security Perspective of Japan." Kyuroon Kim and Jae-Jeok Park (eds.),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12.

Vorontsov, Alexander. "Current Russia-North Korea Relation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Working Papers by CEAP visiting Fellows*. The Brookings Institution, February 2007.

Waltz, Kenneth N. "Why Iran Should Get the Bomb: Nuclear Balancing Would Mean Stability." *Foreign Affairs*. July/August 2012.

Zhebin, Alexander. "Russia's Efforts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in Korea." *2nd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Pyongyang, August 2004.

### 3. 기타자료

미국 백악관. <<http://www.whitehouse.gov>>.

Marxists Internet Archive. <<http://www.marxists.org>>.

New York Daily News. <<http://www.nydailynews.com>>.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

Yonhap News Agency. <<http://www.english.yonhapnews.co.kr>>.

“2012 국민 통일의식 조사.” 『KBS 남북협력 기획단』. 2012년 10월.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웅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룡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 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에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소 편	18,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홍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와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 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 (수유동)  
TEL. 02-900-4300 FAX. 02-901-2549  
[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

